



전라북도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



전라북도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

2010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 / 조경욱, 조
무현.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p. ; cm. -- (Jthink ; 2010-PR-09)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014-7 93330 : 비매품

출생률[出生率]

인구 정책[人口政策]

331.33-KDC5

304.63-DDC21

CIP2011001196

연구진

연구책임 조 경 옥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조 무 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 김 종 철 ·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육 명 진 ·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차장

이 성 희 · 우석대학교 교수

이 혜 숙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연구관리 코드 : 10JU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시기
-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종료(2006~2010)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수행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 2차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 모색이 필요
-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비용지출형 제도도입 등 효율적 관리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부분 총예산 19.7조원)

-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개발, 수행 및 평가·환류 확대 추세
-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응정책을 기획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운영지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앙의 대응정책과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임
- 즉 지역은 서비스수요,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재정여건, 이용자부담 지역간 차이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하고 2009년부터 출산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컨설팅이 시작됨

- 지역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출산시책 개발 필요
- 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기획된 저출산 대응정책이나 프로그램 대부분이 지역의 특수상황이나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수립,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현실과 여건, 지역민의 요구에 밀착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시책개발을 연구목적으로 함
 -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1)현행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 제도 부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2)전라북도 출산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개발하며 3)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모델발굴을 통해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추진시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기본계획 등 문헌 검토
 - 인구정책 관련자료 검토
 - 예산, 규정, 조례 검토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인구추이 통계 및 현황 분석
- 사례분석 및 공무원 대상 설문
 - 인구정책경진대회(2007~2009) 자료를 토대로 출산정책 우수사례 분석
 - 일본의 소자화 정책, 인구정책 등을 통해 출산장려 관련 사례분석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출산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출산 및 양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해 설문조사함.
- 전문가 간담회
 - 각 영역별 출산장려시책개발을 위해 인구정책 연구자, 보건 및 의료계 전문가, 보육시설장 및 관련 종사자, 노인복지 기관 실무자 등 출산관련 이론편과 현장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총 2회 실시)
 - 전라북도 출산장려 시책 쟁점과 문제점 논의
 -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개선, 환경조성,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에 대한 의견

- 및 새로운 시책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 사업 추진계획,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논의
- 자문회의
- 연구방법, 시책개발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착수, 최종자문회의 등 총 2회 실시

II.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전라북도 출산율 동향

-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추이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1997년 1.54명으로 감소, 2005년 1.08명까지 최저수준으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15명임
 - 전북 또한 전국 합계출산율 변화와 궤적을 같이 하면서 감소하였는데, 2005년 1.1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조금 상승했지만 2008년에는 1.31명으로 다시 하락, 2009년에는 1.28명에 이르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전국 및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모두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됨
- 전라북도 시군 가임여성인구변화
 - 전라북도 가임여성(15세~49세)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함. 20대 초반의 가임여성(20~24세)의 경우 2000년 84,356명에서 2009년 53,136으로 37.01%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45~49세의 가임여성은 25.88%의 증가율을 보임. 이러한 추세

를 고려하면 전라북도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가임여성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고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25~34세 연령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읍시의 경우 25~39세 여성인구 감소 수준이 가장 높고 전주시와 군산시는 35~39세 여성인구가 증가, 완주군의 경우 30~39세 여성인구가 증가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임

나. 저출산정책의 효과 및 평가

○ 저출산정책의 효과

- 각 시군에서 실시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추이, 신생아 수,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살펴 봄
- 인구추이는 신생아수의 증가가 합계출산율의 영향인지, 유입인구에 의한 영향에 의한 변화 인지를 예측할 수 있음
- 인구수, 신생아수, 합계출산율이 모두 증가한 지역은 인구유입의 효과이며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생아 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지역의 출산율의 증가를 나타냄
- 14개 시군 모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진안과 장수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수, 신생아수, 합계출산율이 일률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유입효과가 있는 지역은 없음
- 다만, 진안, 장수, 임실은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신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대응 정책평가

- 국회예산처가 저출산정책 설문조사결과(온라인 패널조사 n=800명)에 의하면 저출산정책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사업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임
- 저출산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으로는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으로 봄

- 가장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출산 정책으로는 '국내입양정책'과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지원정책으로 봄.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부족'으로 응답함

다.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 추진현황

-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사업내용 및 예산
 - 전라북도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은 2009년 2,921억원에서 2010년 3,437억 원으로 17% 증가
 - 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가족친화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쳐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예산의 82.9%가 양육지원에 편중됨. 특히 임신·출산지원과 가족친화지원부문의 예산은 각각 2.3%, 0.01%에 불과함
 - 전라북도의 출산지원 정책사업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가족친화적 지원사업 예산비중 낮고, 보육지원 사업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임. 가족친화적 지원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생활 및 가족친화적 기업지원정책, 세제 및 주택마련지원, 육아휴직관련 대체인력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에 영향을 주는 비교적 주요요인에 해당하는 사업임. 따라서 전북은 향후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예산비중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세부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출산 및 양육정책의 체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의 미흡과 낮은 체감도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임. 저출산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정책과 임신·출산지원 정책 등 주요한 저출산 대응정책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대상의 범위 확대 필요

○ 전라북도 출산 및 양육인프라 현황

- 동부산악권 출산관련 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여 출산 및 임신을 위한 병원과 의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 임. 따라서 접경지역으로 원정출산이 많아 안정적인 출산준비가 미흡한 상황 임
- 산후조리시설의 경우 전라북도에 2009년 12월 현재, 총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10개소는 전주에 집중되어 있음. 이외에 군산에 2개소, 익산3개소, 정읍 2개소, 김제 1개소로 동부권시설에는 이용시설이 전무함
-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보육시설도 부족하여 동부산악권의 64개 읍면동 지역에 보육시설이 부재함. 한편 농촌에서의 보육시설 이용 사유로는 ‘부모대신 보호(32.7%)’가 아닌 ‘사회성 및 전인적 발달(57.7%)’로 나타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촌의 이주 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음
-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과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와 정책담당부서의 구축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인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14개 시군 중 한곳도 없으며 저출산 TF팀 운영을 하는 시군으로는 군산, 무주, 고창 등 3지역에 해당함. 출산전담전문부서 설치한 곳은 전주시 한곳에 불과하고 출산정책위원회 구성한 지역은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등 4개 지역임. 한편 저출산 관련 조례를 지정한 지역은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 부안 등 8개 지역임

라. 저출산대응 정책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 타지역 우수사례와 시사점

- 최근 출산율 제고에 있어 하나의 축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예를 들면 출산가사돌보미 지원 사업(전남강진), 국제화센터 건립을 통한다문화가정 2세대 자녀교육 지원(대전동구),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직영운영(정읍), 결혼이주여성 및 영유아 맞춤형 건강관리(대구북구) 등이 있음
- 한방 등 지역특화 인프라를 이용한 지원 사업들이 확대 추세에 있으나

우리 전라북도는 한방관련 인프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 사업은 부재한 실정임. 타 지역사례로는 출산전후 산모를 위한 한약첩약지원(제주서귀포), 한의약 불임치료지원(대구동구) 등이 있음

- 출산율 정책 가운데 다자녀 학자금지원 관련 재정마련에 주력하는 지자체가 확대추세에 있음. 출산정책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없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자녀 학자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타 지역사례로는 다자녀 학자금지원(경기안산), 다자녀가정 고등학생공납금 및 대학등록금전액지원 조례제정(경기안산), 남해군인구증대지원조례(중·고·대학생, 군전입대상 학교수업료전액지원)/경남 등이 있음

○ 일본 저출산대응 정책사례와 시사점

- 1995년 엔젤플랜 실시 이후 출산률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음. 출산율 저하는 국민적 이해와 관심부족, 사회구조문제에서 원인이 있다고 봄
- 출산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하나의 정책에 의한 단기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은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프로젝트”를 추진
- 소자화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은 현금지원 정책에서 인프라 정책으로, 기혼자 중심에서 학교교육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점이 시사적임. 또한 현금지원 정책을 시행한 일본과 독일 출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봄. 이에 따라 일본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이외에도 소자화 정책이 기존의 정책에서 더 진보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는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확대와 기혼자 중심의 정책에서 미혼자 중심으로 그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가치관 아래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임신이나 가족형성에 관한 인식보급(만혼화, 자궁

외 임신, 무정자증에 대한 인구교육강화)과 공동육아와 확대가족의 장점을 살린 지역사회 참여의 육아환경 조성과 실천 사업임

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책대상 및 실효성의 문제
 - 출산지원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확대: 현행의 저출산 정책은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의 미흡과 낮은 체감도가 문제임. 따라서 저출산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현행 저소득 지원의 정책을 일반인들까지 확대 필요
 - 맞벌이부부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미흡함: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은 2010년부터 시행하는 두 자녀이상에 대한 보육료지원(소득산정시 맞벌이 가구 대상 낮은 소득의 25%차감, 둘째아 무상보육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로 수혜자 늘림)이외에 여타의 정책 부재함.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함
 - 기혼자 중심의 정책에서 미혼자, 학생층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 일본의 출산정책이 지나치게 기혼자 중심적임을 반성한 점을 우리 출산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 비혼, 미혼 등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등 대상과 청년과 결혼예비자를 위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인구교육(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된 교육)을 지자체에서 활성화 하도록 함
 - 다문화 가정의 임신 및 출산·육아지원: 전라북도에서 최근 출생율이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진안, 장수, 임실지역이며 그 원인으로는 이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증가로 판단됨. 그러나 최근 나이 어린 태국, 캄보디아 이주여성 증가가 현저하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전교육 미흡, 외부로의 활동이 제한적이고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어려움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필요

○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

- 현행 자녀교육비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와 차등지급을 통한 정책효과 고려
필요 : 전국 최초로 시행한 “셋째자녀 입학등록금 지원 사업”은 대학등록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경감에 긍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셋째자녀의 감소로 예상인원이 2,320명에서 800명으로 그침. 따라서 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을 둘째아로 확대하고 지급내용을 둘째아와 셋째아로 차등지급 하도록 개선필요
-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장려정책을 life-cycle적 관점에서 볼 때 포괄적인 아동정책이 매우 부족함. 특히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아동관련 지역아동센터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고 저소득 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은 어린이 빈곤 문제가 학력격차, 건강, 학대, 비행문제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 빈곤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출산관련 인프라 미흡지역에 대한 지원: 전북의 동부권 지역은 의료 및 보건, 복지기반이 매우 취약함. 특히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한 출산과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대책 필요함.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에 산후조리 기관을 두고 전문 산후도우미를 배치, 지역민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가족친화적 분위기조성 취약(장기적 사업 필요): 출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회분위기와 환경조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효과 볼 수 있음. 전라북도의 출산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의 5.26%에 불과하며 예산지원도 0.01%에 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 확대와 예산지원 필요함
- 청년유인정책 필요: 청년층은 미래의 가임세대에 해당하지만, 취업과 주택 마련 등으로 결혼이 미루어지기 쉽고 이로 인한 만혼화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청년층의 타 지역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취업과

결혼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시는 ‘원더커플만들기 해피초이스’라는 사업(결혼회사 듀오연계)을 통해서 성사된 커플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제공 가능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핵심전담 부서의 부재: 기초자치단체들 간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T/F를 구성하여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거나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음. 저출산 정책이 복합적이어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을 통해 통합과 조정 필요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 필요: 장단기 정책설정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의 역량지원과 지역 환경과 주민욕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2. 정책제언: 출산장려정책 시책개발(안)

정책영역	세부 추진시책(안)	사업내용
1)제도 및 사업 개선	셋째자녀 대학입학 등록금지원	- 둘째아의 출산도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둘째아부터로 변경하되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 둘째아는 입학금 지원, 셋째아 이상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일부 지원 하도록 함
	난임부부 지원 사업	- 아이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일반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사업예산 비중을 편성 - 저소득층: 일반인=8:2의 비율로 난임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산모신생아 돌보미파견 사업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 출산부터는 소득기준 지원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
2)인식개선 사업	출산공무원 우대정책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근무평점 평균점 부여)	- 임신한 여성에게 희망부서 우선배치를 통하여 직무의 과도한 스트레스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귀여성 공무원은 당해 년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을 부여하도록 함
	도청 옥외(남성)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 출산관련 소규모 예산 사업으로 공공기관 추진 시, 정책 선도의 상징성과 파급효과 기대 - 일반인들의 사용이 많은 도청 옥외 남성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인구교육 및 교육 강사 양성사업	- 임신·출산·양육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학교커리큘럼에 반영, 학령층에 맞는 교재구안과 전문강사를 통한 체계적 교육실시 및 운영
	아빠 육아참여 (예방접종을 아빠와 함께)	- 예방접종을 아빠와 함께 했을 경우, 영유아 신체발육에 관한 검진 및 아빠의 기초건강 검진 무료실시
3)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결혼이주여성 임신, 출산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 가족형성에 필요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14개 다문화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 특히 언어소통의 문제를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 아이 양육에 관련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국출신의 멘토를 연결하도록 함
	산후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	- 여성의 산후조리, 신생아의 돌봄, 이유식, 친환경 아기의류 등 여성친화적 일을 연계, 집적화 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여성기업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여성일자리 창출로도 의미가 있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동부권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출산관련 의료인프라의 취약으로 접경지역으로의 원정출산이 많은 편임 - 산후조리원이용 수요는 많으나 고비용으로 인한 차상위계층 등 정책 사각지대 존재 - 남원 및 진안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운영 - 산후돌보미 배치를 통해 다양한 수요(주말도우미, 야간도우미)에 대응하는 농촌적합형 산후돌보미 운영(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목 차

제 1 장 서 론	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 제한점	7
제 2 장 전라북도 인구변화 및 출산동향	11
제 1 절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구조	11
1.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11
2. 전라북도 인구구조	15
제 2 절 전라북도 출산동향	19
1. 합계출산율의 변화	19
2. 출생아 수 변화	23
3. 가임여성 인구변화	32
제 3 절 전라북도 저출산 요인 분석	37
1. 인구이동 및 유출	37
2. 가치관의 변화	40
3. 자녀양육비 증대와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43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45
제 3 장 저출산대응 정책 흐름과 전라북도 현황	53
제 1 절 출산정책 흐름과 내용	53
1.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자체의 대응	53
2. 출산정책 분류별 사업현황	59
3. 출산정책 성과평가	69
제 2 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현황과 문제점	73
1. 출산정책 내용 및 예산	73
2. 출산 및 양육 인프라 현황	76
3. 출산정책 효과와 문제점	81

제 4 장 저출산대응 정책사례 분석	89
제 1 절 타 지역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89
1. 인구경진대회 사례	89
2. 타 지역 우수사례와 시사점	91
제 2 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93
1.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주요내용(2008~2009)	93
2. 일본 저출산 대응정책의 시사점	96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제 1 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개선 방향	99
1. 정책대상의 문제	99
2. 정책효과의 실효성	102
3.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	104
제 2 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세부추진시책(안)	108
 참고문헌	 113
 부 록	 117

표 목 차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1
<표 2-2> 전라북도 인구규모	12
<표 2-3> 전라북도 시군 인구동향	12
<표 2-4> 전라북도 인구동향	13
<표 2-5> 전라북도 인구가동 추이	14
<표 2-6> 전국 및 전라북도 유소년 구성비 추이	15
<표 2-7> 전국 및 전라북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추이	16
<표 2-8> 전국 및 전라북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16
<표 2-9> 전국 및 전라북도 부양비 추이	17
<표 2-10> 전라북도 인구구조(2009년)	17
<표 2-11> 세계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19
<표 2-12>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20
<표 2-13> 전국과 전북의 합계출산율 추이	21
<표 2-14> 전라북도 및 시·군 합계출산율 변화	23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율	24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25
<표 2-17> 전라북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25
<표 2-18>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26
<표 2-19> 전라북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27
<표 2-20> 전라북도 및 시·군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비교	27
<표 2-21>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	30
<표 2-22> 전라북도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	31
<표 2-23> 전라북도 가임기여성의 특성(2009년)	32
<표 2-24> 전라북도 혼인력 추이	33
<표 2-25> 전라북도 및 시·군 가임여성인구변화	34
<표 2-26> 전라북도 및 전국의 25~34세 여성 비율 변화	37
<표 2-27> 전라북도 여성의 순이동 추이	38
<표 2-28> 전라북도 가임여성의 전입·전출 및 순이동률(2009)	39
<표 2-29> 전라북도 가임기여성 순이동률 추이	39
<표 2-30> 시·도별 가임여성의 순이동률(2009)	40

<표 2-31> 전라북도 및 전국 15세 이상 인구의 미혼율 변화	41
<표 2-32> 전라북도 및 전국 초혼연령의 변화	42
<표 2-33> 전라북도 교육비 지출현황	43
<표 2-34> 전라북도 및 전국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44
<표 2-35> 연령대-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44
<표 2-36> 종사상 지위별 평균 출생아수	45
<표 2-37> 전라북도 및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46
<표 2-38> 전라북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46
<표 2-39> 전라북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47
<표 2-40> 전라북도 및 전국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48
<표 2-41> 전라북도 및 전국의 가사분담 실태	48
<표 2-42>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임신·출산 후 경력단절 이유	49
<표 3-1>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조직체계	56
<표 3-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58
<표 3-3> 저출산 정책의 분류별 사업내역	60
<표 3-4>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	63
<표 3-5> 출산장려를 위한 인력 및 물품지원	64
<표 3-6>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지원	65
<표 3-7> 출산장려를 위한 정보제공	67
<표 3-8>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68
<표 3-9> 전라북도 저출산정책 사업내용(2010)	74
<표 3-10>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지역분포 현황	76
<표 3-11> 전라북도 시군 저출산 인프라 현황	78
<표 3-12> 인프라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79
<표 3-13> 인프라 효과성에 대한 인식	80
<표 3-14> 각 자치단체의 인구·신생아수·합계출산율 추이	82
<표 4-1>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사례(2008)	89
<표 4-2>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사례(2009)	90
<표 4-3> 타 지역 우수사례	91
<표 4-4> “5가지 안심플랜”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	93
<표 4-5>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	95
<표 5-1>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1	108
<표 5-2>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2	109
<표 5-3>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3	111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단계 및 방법	7
<그림 2-1> 전라북도 인구동향	12
<그림 2-2> 전라북도의 인구구조	18
<그림 2-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21
<그림 2-4> 전북과 전북의 합계출산율 추이	22
<그림 2-5>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률	24
<그림 3-1> 저출산정책 인지도 평가	69
<그림 3-2>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 순위(온라인 패널 1차 응답)	70
<그림 3-3> 가장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저출산 정책 순위(온라인 패널 1차 응답) ...	71
<그림 3-4> 저출산정책의 문제점(온라인 패널)	72
<그림 3-5> 전라북도 저출산사업구성비	75
<그림 3-6> 전라북도 저출산사업예산 비중	75
<그림 3-7> 전라북도 저출산 관련자원 분포현황	77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제1장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평균 출산율 1.63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출산율은 인구대체출산율인 2.1명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OECD평균 출산율(1.6명)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새로마지플랜」을 수정보완하고 ①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②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③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분 등 총 96개 과제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과 관련된 사회적 변수는 여성, 고용, 복지, 가족, 경제, 보건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대응방안이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기획된 저출산 대응정책이나 프로그램 대부분은 지역의 특수상황이나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존의 정책들이 단기적인 처방위주의 정책(예컨대 출산지원금, 현금수당 등)을 시행한 결과, 출산율 제고로 귀결되지 않는 불분명한 예산지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다.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주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기업,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하다. 이들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영역인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지방정부의 대응방식은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응정책을 기획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운영지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의 대응정책과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지역은 서비스수요,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재정여건, 이용자부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하고 2009년부터 출산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컨설팅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기획된 저출산 대응정책이나 프로그램 대부분 지역의 특수상황이나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함은 이제 더 역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수립,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현실과 여건, 지역민의 요구에 밀착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시책개발을 연구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1)현행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 제도 부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2)전라북도 출산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개발하며 3)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모델발굴을 통해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추진시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각 14개 시군의 인구이동 추이 및 저출산 정책 추진 현황, 임신과 출산 및 보육을 위한 지역 환경 분석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전북 출산장려정책 발전방향 및 구체적인 시책개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제1장과 2장에서는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과 출산력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출생아 수의 변화, 가임여성의 인구변화

등을 토대로 각 14개 시군의 변동율과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출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를 사회적, 경제적, 가치관 및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제 3장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저출산 정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적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이유 등을 저출산 정책의 효과와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또한 제3장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개최하는 인구경진대회 자료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사례와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의 엔젤플랜과 신앤젤플랜, 사회보장제도 등의 문헌을 통해 ‘소자화’에 대응하는 일본 정책의 전략과 방법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사례를 찾고자 하였다.

넷째, 제 4장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의 특성을 알아보고 각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밀착형 시책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정도를 알아봄으로서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우선 순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맞춤형 중심의 발전적인 출산장려시책안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출산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출산 및 양육환경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시책개발을 통하여 전북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기초통계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기본계획 등 문헌 검토
- 인구정책 관련자료 검토
- 예산, 규정, 조례 검토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인구추이 통계 및 현황 분석

(2) 사례분석 및 공무원 대상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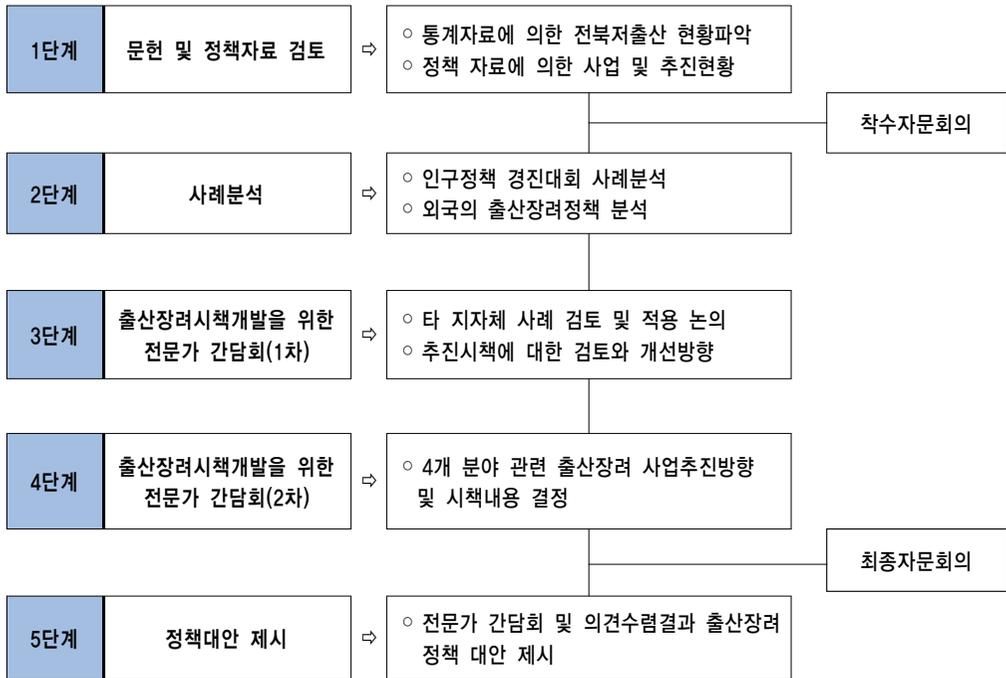
- 인구정책경진대회(2007~2009)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출산정책 우수사례 분석
- 일본의 소자화 정책, 인구정책 등을 통해 출산장려 관련 사례분석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출산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출산 및 양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해 설문조사

(3) 전문가 간담회

- 각 영역별 출산장려시책개발을 위해 인구정책 연구자, 보건 및 의료계 전문가, 보육시설장 및 관련 종사자, 노인복지 기관 실무자 등 출산관련 이론가와 현장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총 2회 실시)
- 전라북도 출산장려 시책 쟁점과 문제점 논의
-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개선, 환경조성,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에 대한 의견 및 새로운 시책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 사업 추진계획,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논의

(4) 자문회의

- 연구방법, 시책개발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착수, 최종자문회의 등 총 2회 실시



(그림1-1) 연구단계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출산장려정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중앙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며, 그 결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게다가 저출산 정책을 수행하는 각 부서들이 다원화되어 있고, 이들 각자는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지역맞춤형 시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 또한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저출산 정책은 예산도 제한적이고 집행전담부서도 없는 실정으로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려우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시책들이 시군단위 자체예산으로 수립,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의 목표는 각각의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

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4개 시군의 종합하여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서 각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이동의 추이나 출산 및 양육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각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 4장에서 한정된 자료를 토대로 14개 시군의 인구정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출산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와 지역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출산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전라북도 인구변화 및 출산동향

- 제 1 절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구조
- 제 2 절 전라북도 출산동향
- 제 3 절 전라북도 저출산 요인 분석

제 2 장 전라북도 인구변화 및 출산동향

제 1 절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구조

1.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1) 전라북도 인구규모

인구는 한 사회나 국가를 형성하는 근본요소이다. 인구의 지역적 개념은 주민이고 주민은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주민 수 즉, 인구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이다. 따라서 인구수의 증가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성장률은 1980년 1.5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0.29%에 이르고 있으며, 총인구(장래추계인구)는 4,847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인구		인구 성장률
		남자	여자	
1980	38,124	19,236	18,888	1.57
1990	42,869	21,568	21,301	0.99
2000	47,008	23,667	23,341	0.84
2005	48,138	24,191	23,947	0.21
2006	48,297	24,268	24,030	0.33
2007	48,456	24,344	24,112	0.33
2008	48,607	24,416	24,191	0.31
2009	48,747	24,481	24,265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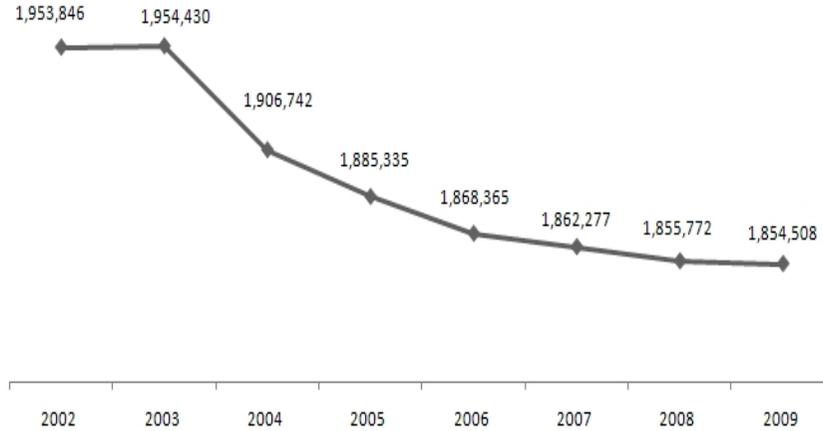
자료: 200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전라북도 총인구는 2002년 1,953천여 명 수준에서 200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인구 1백90십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854,508명에 이르고 있다.

〈표 2-2〉 전라북도 인구규모(2002~2009)

(단위 :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라북도	1,953,846	1,954,430	1,906,742	1,885,335	1,868,365	1,862,277	1,855,772	1,854,508



〈그림 2-1〉 전라북도 인구동향

〈표 2-3〉 전라북도 시군 인구동향(2000~2009)

(단위 : 명)

	2000 (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	인구 증가율 (B-A)
전라북도	1,999,255	2,006,454	1,953,846	1,954,430	1,906,742	1,885,335	1,868,365	1,862,277	1,855,772	1,854,508	-7.24
전주시	620,521	622,283	624,485	618,819	622,472	621,749	624,849	623,926	631,532	635,007	2.33
군산시	277,491	276,717	272,007	268,639	265,168	263,120	260,989	260,562	263,845	266,922	-3.80
익산시	334,324	334,757	330,101	325,238	322,378	318,506	315,094	313,590	309,269	306,669	-8.27
정읍시	152,022	151,813	139,133	155,319	132,285	129,050	126,249	124,239	122,842	121,545	-20.04
남원시	103,571	103,977	100,392	101,950	96,243	93,670	91,265	89,247	88,356	87,675	-15.34
김제시	115,865	115,244	110,989	110,710	105,195	102,720	100,238	97,615	95,807	94,770	-18.20
완주군	84,009	86,719	84,626	83,649	82,482	83,651	83,199	82,972	83,757	83,885	-0.14
진안군	31,273	32,635	30,439	30,475	30,757	29,021	27,122	30,250	27,230	27,558	-11.87
무주군	29,207	30,333	27,894	26,716	26,183	25,876	25,417	26,361	26,017	25,811	-11.62
장수군	30,051	30,445	26,349	29,445	26,788	24,755	24,209	26,687	23,864	23,478	-21.87
임실군	37,514	37,439	35,071	34,283	33,008	32,511	31,976	31,952	31,133	30,703	-18.15
순창군	34,587	33,892	32,329	31,482	31,814	32,012	32,485	32,035	30,920	30,179	-12.71
고창군	74,104	74,286	69,657	69,639	65,203	63,676	62,030	60,962	60,328	60,102	-18.89
부안군	74,716	75,914	70,374	68,066	66,766	65,018	63,243	61,879	60,872	60,204	-19.42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전라북도 출생아 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잠시 증가하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잠정치 15,200명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적증감(출생아수-사망자수)은 2002년 5,076명으로 자연증감률은 2.6%를 보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자연적증감은 2,637명으로 자연증감률은 1.4%에 머무르고 있다.

〈표 2-4〉 전라북도 인구동행(2002~2009)

(단위 : %, 명, 건수)

구분	합계 출산율	출생(명)	사망(명)	자연적 증감 (A-B)	자연 증감률	사회적 증감 (전입-전출)	인구성장 (C+D)	혼인 (건)
		(A)	(B)	(C)		(D)	E	
2002	1.26	19,026	13,950	5,076	2.6	-56,735	-51,659	10,687
2003	1.26	18,253	13,856	4,397	2.3	-3,039	1,358	10,246
2004	1.23	17,087	13,469	3,618	1.9	-50,969	-47,351	10,111
2005	1.18	15,618	13,354	2,264	1.2	-24,477	-22,213	10,196
2006	1.20	15,450	13,257	2,193	1.2	-19,162	-16,969	10,429
2007	1.37	17,111	13,287	3,824	2.1	-10,874	-7,050	10,864
2008	1.31	15,878	13,241	2,637	1.4	-10,550	-7,913	10,399
2009p	1.28	15,200	-	-	-	-4,806		9,605

* p는 잠정치임

전라북도의 순이동(전입-전출)은 매년 마이너스(-)로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04년 -50,969명 이후 점차 순이동의 마이너스(-) 폭은 작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대의 순이동 규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대 역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순이동은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2-5〉 전라북도 인구이동 추이(2000~2009)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전 입	350,628	370,943	338,554	397,299	329,911	311,537	327,237	332,957	322,495	314,137
총 전 출	372,218	372,854	395,289	400,338	380,880	336,014	346,399	343,381	333,045	318,943
순이동계	-21,590	-1,911	-56,735	-3,039	-50,969	-24,477	-19,162	-10,874	-10,550	-4,806
0~4세	195	3,352	-6,896	4,900	-5,379	-664	188	567	9	670
5~9세	-44	2,605	-5,256	3,421	-5,228	-1,022	-355	144	-333	108
10~14세	-587	1,580	-3,319	1,953	-4,125	-1,178	-701	-73	-717	47
15~19세	-1,705	-13	-4,928	1	-3,413	-1,567	-1,124	-858	-1,013	-825
20~24세	-7,186	-5,389	-12,444	-6,241	-10,093	-7,211	-6,585	-4,643	-4,089	-3,260
25~29세	-8,738	-6,203	-10,353	-7,273	-8,836	-7,042	-6,245	-4,539	-4,017	-3,010
30~34세	-1,359	-93	-4,347	-567	-4,054	-1,963	-1,458	-644	-556	-117
35~39세	-447	759	-2,603	423	-2,758	-1,070	-340	-162	260	576
40~44세	-302	568	-1,902	452	-1,952	-668	-299	-65	105	357
45~49세	14	462	-1,190	395	-1,251	-309	-134	-19	195	331
50~54세	-60	346	-747	209	-667	-98	-161	-11	60	281
55~59세	-66	230	-502	99	-568	-189	-208	-114	-35	211
60~64세	-191	58	-579	-133	-630	-292	-358	-184	62	148
65~69세	-283	-10	-528	-107	-580	-371	-281	-80	16	161
70~74세	-295	-4	-453	-240	-575	-277	-460	-82	-137	39
75~79세	-272	-61	-320	-120	-422	-216	-361	-86	-179	-193
80세이상	-264	-98	-368	-211	-438	-340	-300	-25	-181	-330

자료: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국 전라북도 인구감소 추이는 2004년까지는 사회적요인(전입-전출)이, 2005년부터는 자연적요인(출생-사망)이 더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라북도 인구구조

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인구구조는 주로 연령별 인구분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인구를 연령 계층에 따라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 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① 유소년 인구(0~14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소년인구구성비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유소년 인구비율은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라북도 유소년 인구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의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전국 및 전라북도 유소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34.0	25.6	21.1	19.2	16.2	13.7	12.4
전북	37.1	25.7	20.4	19.2	15.8	12.4	10.6

자료: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② 생산가능 인구(15~64세)

전국 생산가능 인구는 2005년 총인구 중 71.7%이며, 향후 2015년 73.4%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는 매년 전국평균보다 낮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7〉 전국 및 전라북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1980년	1990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62.2	69.3	71.7	71.7	72.9	73.4	72.0
전북	58.1	66.9	68.6	66.9	67.8	68.7	67.8

자료: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③ 고령인구(65세 이상)

전국 고령인구는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라북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며, 이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저출산 및 인구유출 현상의 심화와 맞물려 앞으로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8〉 전국 및 전라북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1980년	1990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3.8	5.1	7.2	9.1	11.0	12.9	15.6
전북	4.8	7.4	11.1	13.9	16.4	19.0	21.5

자료: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④ 전국 및 전라북도 부양비 추이

이같은 유소년 및 고령인구추이를 부양비¹⁾로 환산하면 생산가능인구의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0년에는 1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해마다 감소하여 2020년에는 15.7로 전국 유소년 부양비도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노인부양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21.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1)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로 구분되며 이 둘의 합이 총부양비이다. 유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인구의 비를 의미하며,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를 뜻한다.

있으며, 전라북도는 전국 보다 더 급격히 노인부양비가 증가하여 2020년에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가 31.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9〉 전국 및 전라북도 부양비 추이

(단위 : 15~64세 인구 100명당)

구분		1980년	1990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총부양비	60.7	44.3	39.5	39.4	37.2	36.3	38.9
	유소년	54.6	36.9	29.4	26.8	22.2	18.6	17.2
	노년	6.1	7.4	10.1	12.6	15.0	17.6	21.7
전북	총부양비	72.2	49.4	45.9	49.4	47.5	45.7	47.4
	유소년	63.9	38.4	29.7	28.6	23.3	18.0	15.7
	노년	8.3	11.1	16.1	20.8	24.2	27.7	31.7

자료: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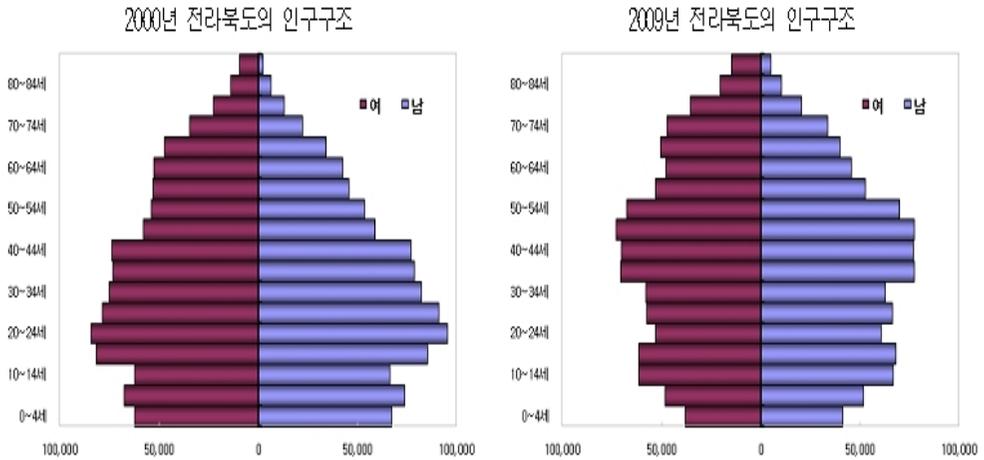
〈표 2-10〉 전라북도 인구구조(2009년)

(단위 : 명)

	전라북도	전국
총인구	1,854,508	49,773,145
유소년인구(0~14세)	307,415	8,248,987
생산가능인구(15~64세)	1,269,411	36,256,450
노인인구(65세 이상)	277,682	5,267,708
구성비		
유소년인구(0~14세)	16.57	16.57
생산가능인구(15~64세)	68.45	72.84
노인인구(65세 이상)	14.97	10.58
가임여성인구(15~49세여성)	444,693	13,415,117
총인구대비	23.97	26.95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 전라북도 인구구조의 변화



〈그림 2-2〉 전라북도의 인구구조

전라북도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2009년에는 항아리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과 비교해 2009년 현재 유소년인구(0~14세)가 크게 감소한 반면, 노인 인구층은 증가하였다.

제 2 절 전라북도 출산동향

1. 합계출산율의 변화

1) 전국 합계출산율의 변화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1970년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고 1995년과 2000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합계출산율인 2.56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 1.22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일본, 독일은 경우 2005년 비해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200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0.14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2-11〉 세계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단위 : %)

연도	세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970	4.78	4.71	2.02	2.55	2.52	2.61	2.32	2.52
1975	4.32	4.28	2.13	2.02	2.04	2.31	1.64	2.35
1980	3.83	2.92	1.83	1.79	1.72	1.86	1.52	1.94
1985	3.61	2.23	1.75	1.83	1.80	1.87	1.46	1.54
1990	3.43	1.60	1.66	1.92	1.81	1.81	1.43	1.34
1995	3.08	1.70	1.48	2.03	1.78	1.71	1.31	1.28
2000	2.82	1.51	1.37	1.99	1.70	1.76	1.34	1.22
2005	2.67	1.22	1.30	2.04	1.70	1.88	1.35	1.26
2010	2.56	1.22 ²⁾	1.27	2.09	1.84	1.89	1.32	1.38

자료: KOSIS, 국제통계연감

2) 201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국제통계에 의한 잠정치이며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 잠정치인 1.15명 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 1.41명까지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증가와 반복을 거듭하며 2009년 현재 1.15명까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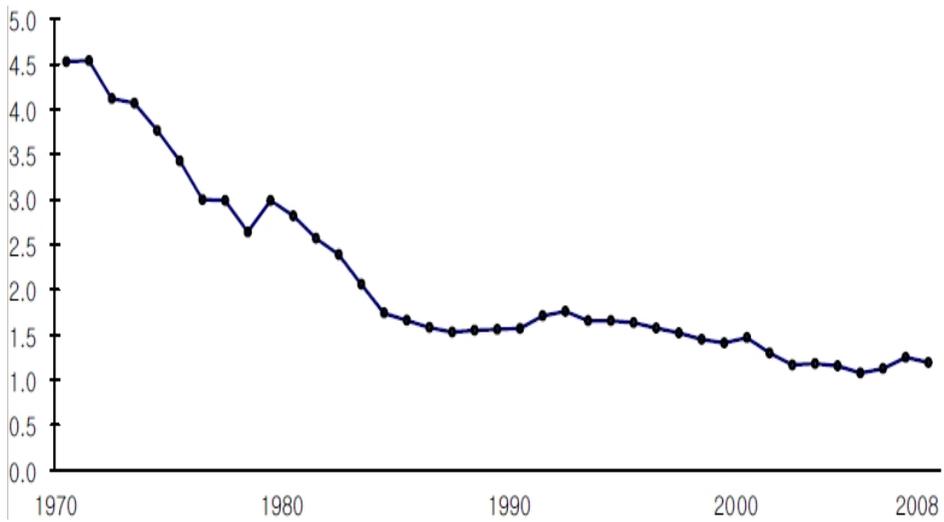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대 연령층의 경우 1970년대와 비교하여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30대 초반의 연령층의 경우 처음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 후반(35~39세) 연령층의 경우 2002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 속에 2009년 현재 27.4에 이르고 있다.

〈표 2-12〉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단위 : %)

연도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증감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1976	159.4	239.0	118.8	46.2	3.05	-
1977	160.9	246.7	112.5	42.7	3.02	-0.3
1978	135.7	228.0	101.6	35.3	2.65	-0.37
1979	150.8	260.2	106.5	35.2	2.90	0.25
1980	141.4	244.1	106.6	30.6	2.83	-0.07
1981	148.3	242.8	92.2	25.9	2.66	-0.17
1982	158.9	213.6	72.4	20.0	2.42	-0.24
1983	146.5	186.9	55.5	14.6	2.08	-0.34
1999	43.4	147.2	72.3	15.3	1.41	-0.04
2000	38.8	149.6	83.5	17.2	1.47	0.06
2001	31.4	129.2	77.5	17.0	1.30	-0.17
2002	26.5	110.9	74.5	16.6	1.17	-0.13
2003	23.6	111.7	79.1	17.1	1.18	0.01
2004	20.6	104.5	83.2	18.2	1.15	-0.03
2005	17.8	91.7	81.5	18.7	1.08	-0.08
2006	17.6	89.4	89.4	21.2	1.12	0.05
2007	19.5	95.5	101.3	25.6	1.25	0.13
2008	18.2	85.6	101.5	26.5	1.19	-0.06
2009p	16.2	80.7	101.2	27.4	1.15	-0.04

자료: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와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2-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2) 전북 합계출산율의 변화

전북의 합계출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2005년 1.1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조금 상승했지만 2008년에는 1.31명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9년에는 1.28명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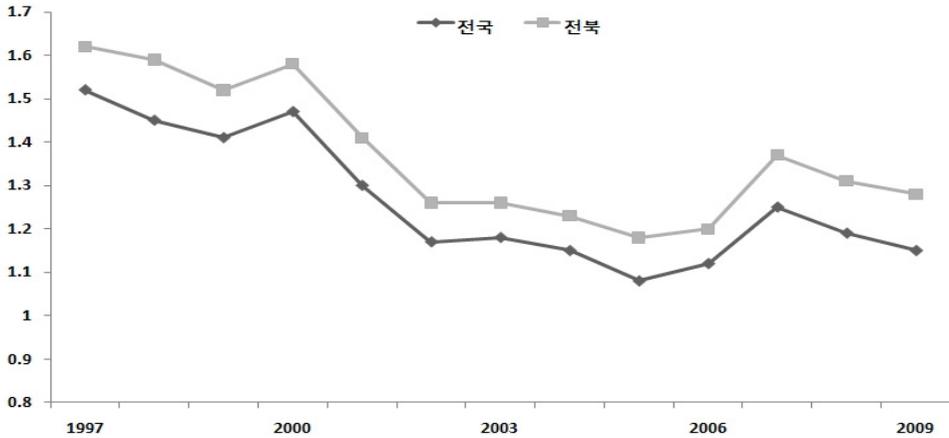
전북의 합계출산율 추이는 전국의 합계출산율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전국적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북의 저출산 원인이 전국과 다르지 않으며, 전국적인 상황보다는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3〉 전국과 전북의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1.52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전북	1.62	1.59	1.52	1.58	1.41	1.26	1.26	1.23	1.18	1.20	1.37	1.31	1.28
격차	0.10	0.14	0.11	0.11	0.11	0.09	0.08	0.08	0.10	0.08	0.08	0.12	0.13

* 2009년 합계출산율은 잠정치임.



〈그림 2-4〉 전북과 전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3) 전라북도 시·군 합계출산율의 변화

전라북도 시·군별 합계 출산율의 특성은 전국 및 전북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면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추세는 각 시·군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단위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게 군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전반적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감소폭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200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진안군(1.904명)을 비롯하여 임실군(1.876명), 무주군(1.629명), 장수군(1.620명), 완주군(1.6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부안군(1.169명)을 비롯하여 정읍시(1.200명), 전주시(1.232명), 군산시(1.285명), 익산시(1.28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의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순창군으로 전년 대비(2007년) 14.6%가 감소하였으며, 부안 13.0%, 정읍 11.8%, 무주 11.5%로 순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역도 있다. 임실군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무려 15.6%가 증가하였으며, 장수 4.0%, 진안군 1.9%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임실군의 경우

2005년에 1.107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 현재 1.87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각 연도별 합계출산율, 증감율, 지난 4년간 합계출산율의 평균을 고려해 봤을 때 전북지역은 부안군과 정읍시, 전주시 등이 출산율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14〉 전라북도 및 시·군 합계출산율 변화(2005~2008)

(단위 : %)

구분	2005(A)	2006(B)	2007(C)	2008(D)	증감률	평균 합계출산율
					D-C/C	(A+B+C+D)/4
전국	1.076	1.123	1.250	1.192	-4.6	1.16
전북	1.175	1.204	1.371	1.305	-4.8	1.26
전주시	1.142	1.143	1.279	1.232	-3.7	1.20
군산시	1.156	1.208	1.372	1.285	-6.3	1.26
익산시	1.211	1.221	1.370	1.289	-5.9	1.27
정읍시	1.149	1.125	1.360	1.200	-11.8	1.21
남원시	1.239	1.255	1.413	1.411	-0.1	1.33
김제시	1.144	1.296	1.431	1.347	-5.9	1.30
완주군	1.369	1.519	1.636	1.611	-1.5	1.53
진안군	1.025	1.287	1.868	1.904	1.9	1.52
무주군	1.431	1.579	1.841	1.629	-11.5	1.62
장수군	1.384	1.323	1.558	1.620	4.0	1.47
임실군	1.107	1.171	1.623	1.876	15.6	1.44
순창군	1.359	1.251	1.703	1.454	-14.6	1.44
고창군	1.131	1.243	1.465	1.335	-8.9	1.29
부안군	1.025	1.057	1.343	1.169	-13.0	1.15

자료: KOSIS, 행정구역별 합계출산율

2. 출생아 수 변화

1) 출생아 수와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1980년 80만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1990년대 초반 약간 증가하다가 후반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50만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2005년 출생아 수는 435천명으로 가장 낮았고, 2007년까지 394천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08년 다시 감소하여 2009년 잠정통계치는 445천명에 이르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약 445천명으로 전년 보다 약 2만 1천명(-4.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혼인감소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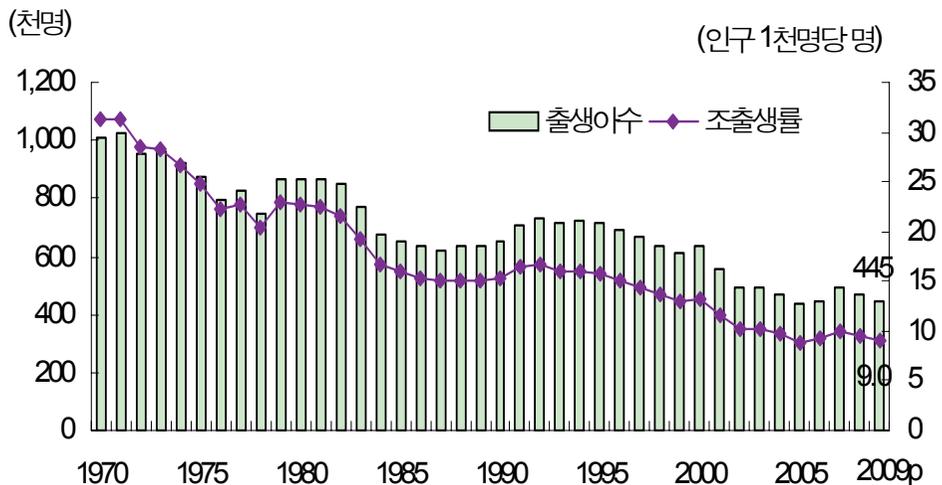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1970년 30명이었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조출생률은 9.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과 비교하여 0.4명이 감소하였다.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률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출생아 수(천 명)	614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445
증 감(천 명)	-21	20	-80	-63	-2	-18	-38	13	45	-27	-21
증감률(%)	-3.2	3.3	-12.5	-11.3	-0.3	-3.6	-8.0	3.0	10.0	-5.5	-4.4
조출생률 (인구 1천명당 명)	13.0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9.0

자료: 통계청, 2009 출생통계 잠정결과



〈그림 2-5〉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률

전국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대 여성의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경우 1999년 83천명에서 2009년 24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대 후반(25~29세) 여성의 경우 역시 1999년 331천명에서 2009년 169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 1999년에 비해 출생아 수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출생아 수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2009년 출생아 수는 21천명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20대 후반(25~29세) 여성의 출생아 수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경우 2008년 비해 1천명 정도의 출생아 수의 증가를 보였지만 그 수가 미미하여 출산율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단위: 천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	2009 (B)	B-A
총 출생아 수		614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445	-21
모의 연령별	20~24세	83	74	61	52	47	40	33	31	32	28	24	-4
	25~29세	331	328	273	226	219	199	175	173	187	169	156	-13
	30~34세	156	183	174	169	179	185	177	188	206	199	193	-6
	35~39세	33	37	35	34	36	39	41	47	58	60	61	1

자료 :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전라북도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 또한 전국적인 현황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대 모의 출생아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30대 모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있지만 출생아 수의 증가 규모가 크지 않아 출산율 증가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표 2-17〉 전라북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출생아 수		24,260	24,936	21,993	19,026	18,253	17,087	15,618	15,450	17,111	15,878
모의 연령별	20~24세	4,372	4,034	3,392	2,947	2,548	2,133	1,682	1,574	1,684	1,514
	25~29세	12,668	12,786	10,844	8,966	8,416	7,418	6,541	6,250	6,787	6,187
	30~34세	5,312	6,129	5,809	5,437	5,636	5,836	5,598	5,698	6,347	6,032
	35~39세	1,311	1,375	1,332	1,178	1,168	1,235	1,314	1,458	1,814	1,717

자료 :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변화

전국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과 비교하여 2009년 현재 둘째아이의 감소율이 -30.9%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999~2009년 동안 첫째 아이 감소가 77천명, 둘째 아이 감소가 76천명, 셋째 아이 감소가 18천명으로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감소폭이 셋째아이의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출생아 수 변화에서 첫째 아이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25.1% 감소한 반면 둘째아이 감소는 30.9%로 5.8%p 높았고, 셋째 아이의 30.0%에 비해서도 약간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셋째 이상의 출생아보다 바로 둘째아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2-18)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단위: 천명, %)

	1999 (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B)	B-A	
												증감	증감률
계*	614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445	-169	-27.5
첫째 아	307	298	263	238	241	239	223	231	262	242	230	-77	-25.1
둘째 아	246	268	234	202	199	184	167	171	182	176	170	-76	-30.9
셋째 아 이상	60	66	56	49	46	45	41	42	46	44	42	-18	-30.0

*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전라북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현황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첫째아이 출생아 수는 1999년 11,302명에서 2008년 7,398명으로 3,904명이 감소하여 34.5%가 감소하였다. 둘째아이 출생아 수는 1999년 9,376명에서 2008년 6,149명으로 3,227명 감소, 셋째아이 출생아 수는 지난 9년 동안 1,140명이 감소하였다.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셋째아이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첫째아이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인 현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교육 및 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인구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9〉 전라북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단위: 명, %)

	1999 (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	B-A	
											증감	증감률
계*	24,260	24,936	21,993	19,026	18,253	17,087	15,618	15,450	17,111	15,878	-8,382	-34.6
첫째 아	11,302	10,908	9,688	8,462	8,142	7,727	7,050	7,077	8,131	7,398	-3,904	-34.5
둘째 아	9,376	10,131	9,055	7,788	7,430	6,770	6,141	6,040	6,336	6,149	-3,227	-34.4
셋째 아 이상	3,570	3,861	3,174	2,599	2,469	2,411	2,258	2,190	2,521	2,218	-1,352	-37.9

*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의 변화를 함께 출산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부안군의 경우 2000년 출생아 수가 709명에서 2008년 339명으로 52.19%가 감소하였고, 정읍시 49.16%, 고창 46.64%, 김제 41.11%, 남원 40.12%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첫째 아이 출생아 수의 증가율이 높거나 감소폭이 작은 반면,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둘째아이부터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0〉 전라북도 및 시·군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비교(2000~2008)

(단위 : 명,%)

지역	출산순위	2000 (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	증감률 (B-A)
전라북도	총계	24,936	21,993	19,026	18,253	17,087	15,618	15,450	17,111	15,878	-36.32
	1아	10,908	9,688	8,462	8,142	7,727	7,050	7,077	8,131	7,398	-32.18
	2아	10,131	9,055	7,788	7,430	6,770	6,141	6,040	6,336	6,149	-39.31
	3아 이상	3,861	3,174	2,599	2,469	2,411	2,258	2,190	2,521	2,218	-42.55
	미상	36	76	177	212	179	169	143	123	113	-
전주시	총계	8,834	7,730	6,682	6,470	6,136	5,723	5,608	6,165	5,853	-33.74
	1아	3,896	3,482	2,995	3,011	2,858	2,669	2,637	3,028	2,784	-28.54
	2아	3,642	3,194	2,818	2,658	2,446	2,254	2,277	2,312	2,313	-36.49
	3아 이상	1,281	1,020	798	746	775	740	645	780	712	-44.42
	미상	15	34	71	55	57	60	49	45	44	-
군산시	총계	3,731	3,316	2,732	2,625	2,522	2,269	2,292	2,513	2,324	-37.71
	1아	1,740	1,562	1,256	1,221	1,126	1,044	1,056	1,261	1,141	-34.43
	2아	1,544	1,349	1,150	1,069	1,099	931	941	921	913	-40.87
	3아 이상	444	396	299	293	266	262	276	312	251	-43.47
	미상	3	9	27	42	31	32	19	19	19	-

지역	출산순위	2000 (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	증감율 (B-A)
익산시	총계	4,537	4,031	3,574	3,471	3,150	2,874	2,773	3,013	2,723	-39.98
	1아	1,992	1,787	1,656	1,581	1,447	1,293	1,257	1,386	1,253	-37.10
	2아	1,875	1,721	1,435	1,441	1,256	1,181	1,122	1,161	1,087	-42.03
	3아 이상	663	504	451	407	407	373	370	450	370	-44.19
	미상	7	19	32	42	40	27	24	16	13	-
정읍시	총계	1,674	1,431	1,316	1,183	1,090	954	880	1,005	851	-49.16
	1아	693	630	547	507	475	376	366	430	354	-48.92
	2아	685	567	511	474	419	398	345	399	329	-51.97
	3아 이상	295	233	248	189	188	171	160	168	160	-45.76
	미상	1	1	10	13	8	9	9	8	8	-
남원시	총계	1,179	1,136	951	929	840	737	708	745	706	-40.12
	1아	522	461	377	368	355	280	286	321	272	-47.89
	2아	444	465	391	391	318	294	271	267	280	-36.94
	3아 이상	212	208	175	156	158	152	144	149	151	-28.77
	미상	1	2	8	14	9	11	7	8	3	-
김제시	총계	1,153	1,002	880	811	781	682	730	763	679	-41.11
	1아	495	446	407	357	345	294	338	369	320	-35.35
	2아	430	384	327	310	307	266	252	252	241	-43.95
	3아 이상	228	171	139	130	119	116	134	138	112	-50.88
	미상	0	1	7	14	10	6	6	4	6	-
완주군	총계	1,068	965	929	917	860	793	875	909	877	-17.88
	1아	417	402	417	383	393	380	392	433	394	-5.52
	2아	476	395	378	368	327	282	325	339	328	-31.09
	3아 이상	173	164	128	141	133	125	148	130	148	-14.45
	미상	2	4	6	25	7	6	10	7	7	-
진안군	총계	299	242	213	196	174	163	176	269	283	-5.35
	1아	143	93	103	83	85	76	81	138	157	9.79
	2아	105	99	78	82	60	48	51	88	93	-11.43
	3아 이상	51	50	31	31	28	38	41	41	31	-39.22
	미상	0	0	1	0	1	1	3	2	2	-
무주군	총계	239	205	178	180	180	179	192	226	206	-13.81
	1아	110	81	78	65	79	92	94	100	84	-23.64
	2아	90	84	74	78	66	59	60	87	88	-2.22
	3아 이상	37	40	25	34	33	26	34	36	32	-13.51
	미상	2	0	1	3	2	2	4	3	2	-
장수군	총계	259	231	170	179	176	180	156	198	207	-20.08
	1아	111	88	68	72	76	75	73	69	114	2.70
	2아	95	92	68	65	54	62	55	78	55	-42.11
	3아 이상	53	51	33	40	44	42	27	49	36	-32.08
	미상	0	0	1	2	2	1	1	2	2	-
임실군	총계	304	267	219	226	191	173	179	239	266	-12.50
	1아	117	94	78	90	82	82	88	128	120	2.56
	2아	115	112	94	75	63	53	51	65	110	-4.35
	3아 이상	72	61	45	61	45	35	37	42	34	-52.78
	미상	0	0	2	0	1	3	3	4	2	-

지역	출산순위	2000 (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	증감율 (B-A)
순창군	총계	311	289	228	231	183	211	201	278	223	-28.30
	1아	132	115	97	90	75	92	97	119	87	-34.09
	2아	105	118	77	101	69	78	56	93	83	-20.95
	3아 이상	72	56	50	38	38	39	47	64	50	-30.56
	미상	2	0	4	2	1	2	1	2	3	-
고창군	총계	639	566	464	380	385	327	346	385	341	-46.64
	1아	243	212	179	135	154	138	157	171	157	-35.39
	2아	245	234	192	149	132	113	121	129	116	-52.65
	3아 이상	149	118	90	96	94	74	65	83	67	-55.03
	미상	2	2	3	0	5	2	3	2	1	-
부안군	총계	709	582	490	455	419	353	334	403	339	-52.19
	1아	297	235	204	179	177	159	155	178	161	-45.79
	2아	280	241	195	169	154	122	113	145	113	-59.64
	3아 이상	131	102	87	107	83	65	62	79	64	-51.15
	미상	1	4	4	0	5	7	4	1	1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3) 출산순위별·모의 연령별 출생 구성비

출산순위별·모의연령별 출생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9년 첫째아이 출생 구성비는 52.0%로 2008년 52.3%보다는 0.3% 감소하였으며, 1999년과 비교해서는 1.9% 증가하여 여전히 출생아의 절반이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아이 출생 구성비는 38.5%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여 1.6% 감소하였으며, 셋째아이 구성비는 9.5%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여 0.3%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출생 구성비의 경우 20대 초반(20~24세) 모의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는 과거 10년 전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20대 중반(25~29세) 모의 경우는 첫째아의 구성비는 높아진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모의 경우 첫째아의 구성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30대 후반(35~39세) 모의 경우는 첫째아와 둘째아이의 구성비는 증가하였지만, 셋째아이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20대 모의 경우 첫째아이의 구성비는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반면, 둘째아이와 셋째아이의 구성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0대 초반(30~34세) 모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이의 구성비가 각각 40%대로 비슷

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체 평균인 9.5%와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30대 후반(35~39세) 모의 경우는 둘째아이의 구성비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와 비교해서는 7.0%가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전체 평균보다 14.1%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였지만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12.1%가 감소한 수치이다.

〈표 2-21〉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B-A		
		(A)										(B)	증감	증감율	
총출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50.1	47.2	47.6	48.7	49.5	51.1	51.7	52.0	53.5	52.3	52.0	1.9	3.79	
	둘째 아	40.1	42.4	42.3	41.3	41.0	39.3	38.7	38.5	37.1	38.1	38.5	-1.6	-3.99	
	셋째 아 이상	9.8	10.4	10.1	10.0	9.5	9.6	9.6	9.5	9.4	9.6	9.5	-0.3	3.06	
모의 연령별	20~24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75.6	73.4	73.0	73.0	73.7	76.6	77.1	78.1	79.6	78.2	75.8	0.2	0.26
		둘째 아	22.9	24.6	24.9	24.7	24.1	21.5	21.0	20.1	18.5	20.1	22.4	-0.5	-2.18
		셋째 아 이상	1.6	2.0	2.1	2.3	2.2	1.9	1.9	1.8	1.9	1.8	1.8	0.2	12.5
	25~29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56.4	54.6	55.9	58.4	60.4	63.2	64.9	66.2	68.1	67.8	67.1	10.7	18.97
		둘째 아	39.0	40.7	39.8	37.5	35.9	32.9	31.4	30.3	28.3	28.6	29.2	-9.8	-25.13
		셋째 아 이상	4.6	4.7	4.3	4.1	3.8	3.9	3.7	3.6	3.5	3.9	3.7	-0.9	-19.57
	30~34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27.4	27.1	29.6	32.5	34.3	37.4	39.3	40.6	42.5	42.6	43.9	16.5	60.22
		둘째 아	53.4	54.4	54.2	52.7	52.5	50.4	49.1	48.6	47.0	47.2	46.4	-7.0	-13.11
		셋째 아 이상	19.2	18.5	16.2	14.7	13.2	12.2	11.6	10.8	10.4	10.8	9.7	-9.5	-49.48
	35~39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25.4	24.0	25.9	26.5	27.6	28.0	28.9	29.0	31.1	29.9	30.7	5.3	20.87
		둘째 아	38.9	39.6	39.3	40.2	40.9	41.1	41.9	43.3	43.0	45.0	45.7	6.8	17.48
		셋째 아 이상	35.7	36.3	34.8	33.3	31.5	30.9	29.2	27.7	25.9	25.0	23.6	-12.1	-33.89

*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전라북도의 출산순위별·모의연령별 출생 구성비의 경우 2009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비는 다소 감소하였다.

연령별 출생 구성비의 경우 20대 초반(20~24세) 모의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는 과거 1999년과 비교해 둘째아 출생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20대 중반(25~29세) 모의 경우는 첫째아의 구성비는 높아진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모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의 구성비

는 증가한 반면,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30대 후반(35~39세) 모의 경우는 첫째아와 둘째아의 구성비는 증가하였지만, 셋째아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표 2-22〉 전라북도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

(단위: %)

		1999 (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	B-A	
												증감	증감율
총출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46.6	43.7	44.1	44.5	44.6	45.2	45.1	45.8	47.5	46.6	0	0
	둘째 아	38.7	40.6	41.2	40.9	40.7	39.6	39.3	39.1	37.0	38.7	0	0
	셋째 아 이상	14.7	15.5	14.4	13.7	13.5	14.1	14.5	14.2	14.7	14.0	-0.7	-4.76
모의연령별	20~24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70.0	68.9	68.9	64.5	66.7	69.6	68.7	70.0	71.6	70.4	0.4	0.57
	둘째 아	27.2	27.2	28.0	28.0	26.6	25.2	25.2	25.1	23.8	24.4	-2.8	-10.29
	셋째 아 이상	2.8	3.8	3.0	4.3	3.7	2.7	3.4	3.2	3.1	3.1	0.3	10.71
	25~29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49.8	48.1	48.7	50.8	51.7	54.4	55.7	56.9	58.7	59.1	9.3	18.67
	둘째 아	41.3	43.0	43.2	41.7	41.0	38.2	37.0	35.8	34.1	33.3	-8.0	-19.37
	셋째 아 이상	8.9	8.9	8.0	7.2	6.8	7.0	7.1	6.9	6.8	7.1	-1.8	-20.22
	30~34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22.9	20.9	24.4	26.4	28.0	29.3	30.3	32.8	34.4	33.8	10.9	47.60
	둘째 아	46.2	49.5	49.6	50.5	50.2	48.9	49.1	48.5	45.9	49.0	2.8	6.06
	셋째 아 이상	31.0	29.6	26.0	22.6	21.6	21.5	19.5	55.5	19.4	17.0	-14.0	-45.16
35~39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첫째 아	24.1	22.2	24.1	22.9	23.7	22.8	25.3	23.5	28.4	26.2	2.1	8.71	
둘째 아	30.7	28.8	32.7	33.4	32.1	37.0	33.8	38.8	34.3	39.0	8.3	27.04	
셋째 아 이상	45.2	48.9	43.2	43.1	42.2	40.0	40.7	37.5	36.6	34.7	-10.5	-23.23	

* 미상 포함

자료: KOSIS,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20대 모의 경우 첫째아의 구성비는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의 구성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0대 초반(30~34세) 모의 경우 둘째아 구성비가 각각 49%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30대 후반(35~39세) 모의 경우는 둘째아와 셋째아의 구성비가 30%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북은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게 셋째아의 출생 구성비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셋째아의 구성비의 감소폭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30대 초반 모의 경우 전국 둘째아의 출생 구성비는 감소추세 있는 반면, 전북은 1999년과 비교해 둘째아의 구성비가 2.8%의 증가를 보였다.

3. 가임여성 인구변화

1) 전라북도 가임기여성의 특성

한 지역의 출산수준은 가임기여성의 규모와 특성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전라북도 가임여성인구(15~49세)는 444,693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26.95%)보다 낮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경우 전주시가 27.63%로 가장 높으며, 장수가 15.76%로 전체인구대비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출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25~29세, 30~34세 연령층 비율이 전북의 경우 전국보다 낮으며, 15~19세, 및 40대 연령층은 전국보다 높다. 전반적으로 시단위 지역의 가임기여성 비율이 군단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주출산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5~34세의 연령층은 시단위 지역이 높으며, 45세~49세 연령층은 군단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3〉 전라북도 가임기여성의 특성(2009년)

(단위 : 명,%)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총인구대비
전국	13,415,117 (100.0)	1,630,998 (12.15)	1,496,687 (11.15)	1,895,066 (14.12)	1,900,342 (14.16)	2,201,693 (16.41)	2,152,979 (16.04)	2,137,352 (15.93)	26.95
전북	444,693 (100.0)	61,519 (13.83)	53,136 (11.94)	57,522 (12.93)	57,977 (13.03)	70,924 (15.94)	70,507 (15.85)	73,108 (16.44)	23.97
전주시	175,464 (100.0)	24,384 (13.89)	20,718 (11.80)	22,748 (12.96)	23,074 (13.15)	28,680 (16.34)	28,534 (16.26)	27,326 (15.57)	27.63
군산시	65,241 (100.0)	8,374 (12.83)	7,193 (11.02)	8,670 (13.28)	9,247 (14.17)	11,101 (17.01)	10,037 (15.38)	10,619 (16.27)	24.44
익산시	77,765 (100.0)	11,173 (14.36)	9,268 (11.91)	9,680 (12.44)	9,729 (12.51)	12,444 (16.00)	12,640 (16.25)	12,831 (16.49)	25.35
정읍시	25,837 (100.0)	3,728 (14.42)	3,076 (11.90)	3,138 (12.14)	3,389 (13.11)	4,118 (15.93)	4,039 (15.63)	4,349 (16.83)	21.25
남원시	18,482 (100.0)	2,634 (14.25)	2,173 (11.75)	1,171 (6.33)	2,340 (12.66)	2,920 (15.79)	3,135 (16.96)	3,109 (16.82)	21.08
김제시	18,371 (100.0)	2,644 (14.39)	2,433 (13.24)	2,348 (12.78)	2,221 (12.08)	2,544 (13.84)	2,738 (14.90)	3,443 (18.74)	19.38
완주군	17,624 (100.0)	2,173 (12.32)	2,072 (11.75)	2,659 (15.08)	2,768 (15.70)	2,777 (15.75)	2,362 (13.40)	2,813 (15.96)	21.00
진안군	4,804 (100.0)	600 (12.48)	633 (13.17)	736 (15.32)	642 (13.36)	673 (14.00)	651 (13.55)	869 (18.08)	17.43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총인구대비
무주군	4,637 (100.0)	642 (13.84)	541 (11.66)	593 (12.78)	607 (13.09)	679 (14.64)	733 (15.80)	842 (18.15)	16.82
장수군	4,068 (100.0)	539 (13.24)	564 (13.86)	568 (13.96)	461 (11.33)	551 (13.54)	657 (16.15)	728 (17.89)	15.76
임실군	5,168 (100.0)	715 (13.83)	743 (14.37)	733 (14.18)	585 (11.31)	642 (12.42)	784 (15.17)	966 (18.69)	16.83
순창군	5,281 (100.0)	722 (13.67)	688 (13.02)	734 (13.89)	619 (11.72)	745 (14.10)	818 (15.48)	955 (18.08)	17.49
고창군	10,695 (100.0)	1,620 (15.14)	1,527 (14.27)	1,266 (11.83)	1,060 (9.91)	1,449 (13.54)	1,708 (15.97)	2,065 (19.30)	17.79
부안군	11,256 (100.0)	1,571 (13.95)	1,507 (13.38)	1,478 (13.13)	1,235 (10.97)	1,601 (14.22)	1,671 (14.84)	2,193 (19.48)	18.69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 전라북도 시군 가임여성 인구변화

전라북도의 혼인 건수는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0년과 비교해 1,757건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천명당 해당 년도의 혼인 비율인 조혼인율은 2000년 이후 5.1%~5.8%의 범위에서 해마다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조혼인율과 비교해 보면 2000년대에 평균적으로 1%가 적은 조혼인율을 보이고 있다.

〈표 2-24〉 전라북도 혼인력 추이

(단위 : 명,%)

	혼인건수		조혼인율(천명당)	
	전국	전북	전국	전북
2000	332,090	11,362	7.0	5.7
2001	318,407	10,281	6.7	5.1
2002	304,877	10,687	6.3	5.4
2003	302,503	10,246	6.3	5.2
2004	308,598	10,111	6.4	5.2
2005	314,304	10,196	6.5	5.4
2006	330,634	10,429	6.8	5.6
2007	343,559	10,864	7.0	5.8
2008	327,715	10,399	6.6	5.6
2009	309,759	9,605	6.2	5.2

자료: KOSIS, 혼인통계

전라북도 가임여성(15세~49세)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다소 차별적인 현황을 보이고 있다. 20대 초반의 가임여성(20~24세)의 경우 2000년 84,356명에서 2009년 53,136으로 37.01%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45~49세의 가임여성은 25.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전라북도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가임여성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고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25~34세 연령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읍시의 경우 25~39세 여성인구 감소 수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주시와 군산시는 35~39세 여성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완주군의 경우 30~39세 여성인구가 증가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였다.

〈표 2-25〉 전라북도 및 시군 가임여성인구변화(2000~2009)

(단위 : 명)

구분	연령	2000 (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	증감 (B-A)
전라북도	15~19세	81,793	76,275	68,670	64,720	61,102	58,844	58,835	59,598	60,213	61,519	-24.79
	20~24세	84,356	84,271	79,825	77,655	71,604	66,253	60,921	57,005	54,231	53,136	-37.01
	25~29세	78,711	75,866	71,722	67,656	63,134	61,817	61,129	60,303	59,958	57,522	-26.92
	30~34세	75,231	77,855	74,922	75,001	72,254	69,293	65,532	63,752	60,006	57,977	-22.93
	35~39세	73,359	71,780	69,576	72,466	71,455	71,059	72,294	72,004	71,126	70,924	-3.32
	40~44세	73,978	77,797	77,156	77,122	73,855	70,400	67,796	67,350	69,432	70,507	-4.69
	45~49세	58,077	61,346	62,878	66,670	68,682	71,656	74,641	75,381	74,886	73,108	25.88
전주시	15~19세	26,717	25,280	23,802	22,554	22,438	21,945	22,566	23,064	23,745	24,384	-8.73
	20~24세	27,968	27,876	27,518	27,372	25,388	24,000	22,516	21,210	20,852	20,718	-25.92
	25~29세	28,349	26,952	26,172	24,342	23,448	23,141	23,185	22,960	23,244	22,748	-19.76
	30~34세	27,391	27,894	28,011	27,634	27,529	26,668	25,691	24,863	23,859	23,074	-15.76
	35~39세	26,989	26,559	26,571	27,370	27,852	27,842	28,610	28,543	28,564	28,680	6.27
	40~44세	26,202	27,668	28,320	28,368	27,951	27,160	26,848	26,754	28,012	28,534	8.90
	45~49세	19,119	20,332	21,445	22,298	23,813	25,154	26,553	27,238	27,657	27,326	42.93
군산시	15~19세	11,290	10,437	9,372	8,625	8,274	7,930	7,845	7,909	8,191	8,374	-25.83
	20~24세	11,534	11,559	11,081	10,620	9,923	9,115	8,261	7,660	7,302	7,193	-37.64
	25~29세	11,886	11,225	10,673	9,882	9,265	8,973	8,944	8,792	8,993	8,670	-27.06
	30~34세	11,150	11,506	11,371	11,150	11,027	10,701	10,036	9,721	9,381	9,247	-17.07
	35~39세	10,771	10,298	10,005	10,125	10,119	10,287	10,641	10,779	10,896	11,101	3.06
	40~44세	11,277	11,585	11,398	11,118	10,654	9,959	9,526	9,345	9,712	10,037	-11.00
	45~49세	8,541	9,009	9,372	9,926	10,344	10,760	10,958	10,896	10,841	10,619	24.33

구분	연령	2000 (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	증감 (B-A)
익 산 시	15~19세	13,536	12,654	11,751	11,013	10,628	10,445	10,522	10,720	10,861	11,173	-17.46
	20~24세	13,885	13,933	13,495	13,169	12,304	11,391	10,519	9,926	9,422	9,268	-33.25
	25~29세	14,309	13,686	12,945	11,859	11,093	10,840	10,602	10,387	10,204	9,680	-32.35
	30~34세	14,199	14,505	14,058	13,558	13,365	12,604	11,802	11,369	10,416	9,729	-31.48
	35~39세	13,613	13,272	13,155	13,319	13,335	13,238	13,302	13,149	12,681	12,444	-8.59
	40~44세	13,023	13,592	13,714	13,557	13,409	12,843	12,332	12,331	12,583	12,640	-2.94
	45~49세	9,489	10,204	10,631	11,303	11,834	12,494	13,014	13,207	13,080	12,831	35.22
정 읍 시	15~19세	6,172	5,683	4,748	4,913	3,869	3,612	3,565	3,605	3,590	3,728	-39.60
	20~24세	6,425	6,287	5,535	6,168	4,755	4,242	3,765	3,430	3,223	3,076	-52.12
	25~29세	5,539	5,295	4,632	5,182	4,050	3,820	3,660	3,458	3,400	3,138	-43.35
	30~34세	5,209	5,316	4,659	5,691	4,437	4,265	3,921	3,756	3,542	3,389	-34.94
	35~39세	4,878	4,686	4,271	5,277	4,231	4,181	4,241	4,199	4,141	4,118	-15.58
	40~44세	4,796	5,050	4,738	5,304	4,406	4,138	3,924	3,899	4,028	4,039	-15.78
	45~49세	4,063	4,250	4,153	4,775	4,340	4,366	4,589	4,497	4,432	4,349	7.04
남 원 시	15~19세	4,194	3,839	3,311	3,151	2,806	2,625	2,585	2,573	2,609	2,634	-37.20
	20~24세	4,361	4,297	3,961	3,862	3,414	3,043	2,679	2,399	2,227	2,173	-50.17
	25~29세	3,664	3,465	3,367	3,245	2,901	2,738	2,604	2,425	2,328	2,171	-40.75
	30~34세	3,545	3,740	3,478	3,522	3,192	3,074	2,791	2,670	2,443	2,340	-33.99
	35~39세	3,229	3,213	3,153	3,457	3,388	3,263	3,273	3,097	3,011	2,920	-9.57
	40~44세	3,398	3,539	3,495	3,534	3,194	2,986	2,852	2,802	2,994	3,135	-7.74
	45~49세	2,795	2,956	2,922	3,161	3,151	3,276	3,356	3,363	3,326	3,109	11.23
김 제 시	15~19세	4,448	4,101	3,592	3,372	2,958	2,891	2,760	2,680	2,630	2,644	-40.56
	20~24세	4,804	4,740	4,384	4,227	3,729	3,326	2,968	2,690	2,496	2,433	-49.35
	25~29세	3,713	3,638	3,437	3,263	3,026	2,923	2,827	2,685	2,581	2,348	-36.76
	30~34세	3,263	3,345	3,154	3,120	2,881	2,722	2,632	2,509	2,319	2,221	-31.93
	35~39세	3,374	3,218	2,998	3,091	2,913	2,850	2,800	2,726	2,652	2,544	-24.60
	40~44세	3,725	3,906	3,817	3,738	3,451	3,153	2,897	2,759	2,743	2,738	-26.50
	45~49세	3,289	3,367	3,364	3,615	3,620	3,707	3,772	3,699	3,575	3,443	4.68
완 주 군	15~19세	3,029	2,802	2,479	2,282	2,154	2,082	2,036	2,008	2,097	2,173	-28.26
	20~24세	3,582	3,679	3,355	3,205	2,942	2,713	2,541	2,301	2,113	2,072	-42.16
	25~29세	3,358	3,498	3,339	2,986	2,863	3,030	2,982	2,840	2,821	2,659	-20.82
	30~34세	2,683	3,087	3,120	3,158	3,039	3,041	2,914	2,835	2,735	2,768	3.17
	35~39세	2,319	2,301	2,193	2,301	2,368	2,508	2,604	2,608	2,770	2,777	19.75
	40~44세	2,388	2,583	2,571	2,568	2,499	2,415	2,230	2,258	2,287	2,362	-1.09
	45~49세	2,218	2,350	2,387	2,505	2,549	2,703	2,876	2,898	2,907	2,813	26.83
진 안 군	15~19세	1,154	1,087	926	855	841	703	603	742	579	600	-48.01
	20~24세	1,257	1,337	1,163	1,096	1,099	964	746	814	655	633	-49.64
	25~29세	837	899	828	816	809	751	693	877	735	736	-12.07
	30~34세	728	867	719	754	804	646	568	783	623	642	-11.81
	35~39세	732	759	693	716	765	710	649	776	641	673	-8.06
	40~44세	865	949	891	885	849	755	650	756	639	651	-24.74
	45~49세	852	954	895	910	940	949	935	1,045	921	869	2.00

구분	연령	2000 (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	증감 (B-A)
무주군	15~19세	1,068	1,053	847	725	640	608	586	649	654	642	-39.89
	20~24세	980	1,074	881	805	757	697	612	635	603	541	-44.80
	25~29세	756	797	725	595	580	592	584	645	628	593	-21.56
	30~34세	839	925	759	697	666	637	587	637	592	607	-27.65
	35~39세	830	859	747	724	734	704	693	695	722	679	-18.19
	40~44세	868	954	892	840	772	730	690	722	728	733	-15.55
	45~49세	811	832	800	826	808	843	902	925	866	842	3.82
장수군	15~19세	1,193	1,109	854	926	786	670	623	704	556	539	-54.82
	20~24세	1,260	1,259	1,009	1,109	897	723	675	760	621	564	-55.24
	25~29세	846	854	641	823	657	607	568	740	603	568	-32.86
	30~34세	779	864	649	808	686	564	535	662	488	461	-40.82
	35~39세	745	791	618	780	711	605	612	715	573	551	-26.04
	40~44세	863	912	779	864	726	646	612	708	662	657	-23.87
	45~49세	893	909	798	920	889	831	842	892	781	728	-18.48
임실군	15~19세	1,337	1,235	1,040	959	835	811	753	802	714	715	-46.52
	20~24세	1,386	1,345	1,212	1,132	996	1,013	1,005	930	808	743	-46.39
	25~29세	944	966	877	819	806	773	780	814	794	733	-22.35
	30~34세	924	941	768	764	709	672	626	631	583	585	-36.69
	35~39세	895	891	812	830	788	789	766	713	654	642	-28.27
	40~44세	982	1,054	978	955	885	832	791	799	797	784	-20.16
	45~49세	941	970	924	936	945	1,001	1,055	1,046	1,032	966	2.66
순창군	15~19세	1,313	1,162	975	864	846	796	805	771	749	722	-45.01
	20~24세	1,240	1,239	1,117	1,051	1,007	994	956	824	743	688	-44.52
	25~29세	831	786	744	690	707	749	864	858	817	734	-11.67
	30~34세	806	802	717	695	739	752	753	752	642	619	-23.20
	35~39세	840	797	772	757	804	788	834	857	786	745	-11.31
	40~44세	913	959	902	922	905	870	834	824	848	818	-10.41
	45~49세	895	925	903	889	924	971	1,054	1,089	1,013	955	6.70
고창군	15~19세	3,180	2,918	2,507	2,293	2,048	1,911	1,856	1,705	1,639	1,620	-49.06
	20~24세	2,675	2,648	2,430	2,340	2,040	1,904	1,739	1,673	1,567	1,527	-42.92
	25~29세	1,729	1,757	1,518	1,483	1,297	1,278	1,269	1,281	1,287	1,266	-26.78
	30~34세	1,810	1,969	1,719	1,807	1,516	1,372	1,255	1,184	1,101	1,060	-41.44
	35~39세	1,946	1,965	1,705	1,887	1,696	1,614	1,611	1,569	1,477	1,449	-25.54
	40~44세	2,323	2,472	2,298	2,207	1,990	1,899	1,760	1,629	1,685	1,708	-26.47
	45~49세	2,051	2,124	2,119	2,309	2,226	2,277	2,336	2,298	2,165	2,065	.68
부안군	15~19세	3,162	2,915	2,466	2,188	1,979	1,815	1,730	1,666	1,599	1,571	-50.32
	20~24세	2,999	2,998	2,684	2,499	2,353	2,128	1,939	1,753	1,599	1,507	-49.75
	25~29세	1,950	2,048	1,824	1,671	1,632	1,602	1,567	1,541	1,523	1,478	-24.21
	30~34세	1,905	2,094	1,740	1,643	1,664	1,575	1,421	1,380	1,282	1,235	-35.17
	35~39세	2,198	2,171	1,883	1,832	1,751	1,680	1,658	1,578	1,558	1,601	-27.16
	40~44세	2,355	2,554	2,363	2,262	2,164	2,014	1,850	1,764	1,714	1,671	-29.04
	45~49세	2,120	2,164	2,165	2,297	2,299	2,324	2,399	2,338	2,290	2,193	3.44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제 3 절 전라북도 저출산 요인분석

1. 인구이동 및 유출

1)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변화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 인구가 적은 것은 합계출산율보다 출생아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라북도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 인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14.74%에서 2009년 12.41%로 2.33%p가 감소하였으며, 2009년 전국 현황은 15.27%로 전북과는 2.86%가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주 출산연령층 여성 인구의 감소 추세와 함께 전북은 급격한 인구유출과 맞물려 전국적인 상황보다 주 출산연령층 여성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표 2-26〉 전라북도 및 전국의 25~34세 여성 비율 변화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5	2009
전북	14.74	15.31	13.85	12.41
전국	19.12	18.21	16.68	15.2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 전라북도 여성인구 이동

인구이동은 전출과 전입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입은 다른 지역에서 전북지역으로 들어온 인구이고, 전출은 전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 인구이다. <표 2-27>은 전북의 가임기 여성이 어느 정도의 유출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규모의 결과이다. 2000년 이후 전라북도 인구의 순이동 추이는 해마다 인구의 유입보다 전출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과 2004년은 5만명이 넘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순이동하였다. 2004년을 기점으로 전라북도 인구 유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 순이동은 4,80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여성 인구유출에서 가임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9년의 경우 전체 여성의 인구 유

출은 3,129명인데 가임여성기의 인구유출은 3,328명으로 오히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임기 여성의 인구유출이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임기 여성의 인구유출의 심화는 결국 전북 출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2-27〉 전라북도 여성의 순이동 추이

(단위 : 명)

연도	전체	전체 여성	가임 여성 (15~49세)	주출산 여성 (25~34세)		
				25~29세	30~34세	
2000	-21,590	-10,525	-8,890	-3,407	-3,128	-279
2001	-1,911	702	-2,390	-1,054	-1,753	699
2002	-56,735	-31,026	-20,888	-7,213	-4,482	-2,731
2003	-3,039	-183	-4,849	-1,593	-2,276	683
2004	-50,969	-28,239	-18,173	-6,510	-4,047	-2,463
2005	-24,477	-13,111	-10,258	-3,779	-2,812	-1,092
2006	-19,162	-10,146	-7,792	-2,947	-2,345	-602
2007	-10,874	-5,657	-5,155	-1,839	-1,654	-185
2008	-10,550	-6,236	-5,019	-1,842	-1,520	-322
2009	-4,806	-3,129	-3,328	-1,142	-1,092	-50

주 : 순이동 = 전입인구 - 전출인구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표2-28〉과 〈표2-29〉는 전라북도 가임여성의 순이동률 및 순이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전체여성의 순이동률은 -0.3%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젊은층 여성의 순이동률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높은 이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젊은층 여성의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연령대 보다 더 높은 인구유출을 보이고 있다.

〈표 2-28〉 전라북도 가임여성의 전입·전출 및 순이동률(2009)

(단위 : %)

구분	전체	전체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입	16.9	16.8	14.0	19.9	29.5	26.1	20.5	17.4	14.5
전출	17.2	17.1	15.0	23.5	31.4	26.1	20.3	17.3	14.3
순이동률	-0.3	-0.3	-1.0	-3.6	-1.9	-0.1	0.2	0.1	0.1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이동률=이동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

(전입률은 전입자수, 전출률은 전출자수, 순이동률은 전입자수와 전출자수의 차이로 계산)

* 주민등록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표 2-29〉 전라북도 가임기여성 순이동률 추이(2000~2009)

(단위 : %)

구분	전체	전체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0	-1.1	-1.0	-1.2	-4.8	-3.9	-0.4	-0.4	-0.1	0.0
2001	-0.1	0.1	-0.3	-4.1	-2.3	0.9	0.9	0.7	0.6
2002	-2.9	-3.1	-4.2	-8.2	-6.1	-3.6	-2.5	-1.7	-1.4
2003	-0.2	0.0	-0.7	-5.6	-3.3	0.9	1.0	0.7	0.6
2004	-2.6	-2.9	-3.1	-7.4	-6.2	-3.3	-2.8	-1.8	-1.3
2005	-1.3	-1.4	-1.6	-6.2	-4.5	-1.4	-0.9	-0.4	-0.4
2006	-1.0	-1.1	-1.3	-5.8	-3.8	-0.9	-0.4	-0.3	-0.1
2007	-0.6	-0.6	-1.1	-4.3	-2.7	-0.3	0.0	-0.1	-0.1
2008	-0.6	-0.7	-1.3	-4.1	-2.5	-0.5	-0.1	-0.1	0.0
2009	-0.3	-0.3	-1.0	-3.6	-1.9	-0.1	0.2	0.1	0.1

자료: KOSIS, 인구이동통계

2009년 시·도별 가임여성의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고,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다. 가임기 여성의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15~19세는 울산이 -1.6%로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인구유출 비율을 보였다. 20~24세 여성의 순이동률은 전남 다음으로 전북이 -3.6%를 보였으며, 25~29

세는 부산 다음으로 전북이 -1.9%의 높은 인구유출을 보였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층 여성의 인구유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30〉 시·도별 가임여성의 순이동률(2009)

(단위 : %)

구분	전체	전체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서울	-0.5	-0.4	0.1	1.5	1.1	-1.9	-1.8	-0.7	-0.6
부산	-0.8	-0.8	-0.4	-1.4	-3.2	-1.8	-0.4	-0.3	-0.5
대구	-0.5	-0.4	-0.9	-1.5	-1.8	-0.3	0.2	-0.3	-0.5
인천	0.1	0.1	-0.4	0.3	0.3	0.4	0.1	-0.1	-0.1
광주	0.2	0.2	-0.4	-1.0	-0.6	0.8	0.7	0.2	-0.2
대전	-0.4	-0.4	-0.5	-1.0	-1.1	-0.5	-0.3	-0.2	-0.6
울산	-0.5	-0.4	-1.6	-2.2	-0.7	0.2	-0.2	-0.5	-0.3
경기	0.8	0.8	0.4	1.5	1.9	1.7	0.7	0.2	0.5
강원	0.1	0.1	0.0	-3.4	-1.3	0.6	0.5	0.2	0.4
충북	0.2	0.0	-0.7	-2.3	-0.9	0.3	0.3	0.1	0.6
충남	0.6	0.5	1.6	-2.0	1.4	1.5	1.0	0.6	0.6
전북	-0.3	-0.3	-1.0	-3.6	-1.9	-0.1	0.2	0.1	0.1
전남	-0.4	-0.5	-1.1	-4.5	-1.6	-0.2	-0.2	0.1	0.4
경북	-0.3	-0.4	0.7	-2.8	-1.5	-1.1	-0.9	0.1	0.4
경남	0.3	0.2	-0.9	-2.0	1.6	1.4	0.2	0.1	0.3
제주	-0.2	-0.2	-0.4	-2.0	-1.1	-0.1	-0.1	0.0	-0.1

자료: KOSIS, 인구이동통계

2. 가치관의 변화: 결혼관 및 자녀관

1) 결혼관의 변화: 만혼화와 비혼화

한국사회의 가족은 결혼연령의 상승, 혼인율의 저하, 출산율 감소, 가족구조의 다양성 등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가족의 모습과 함께 혼인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제도가 붕괴되어가면서 가정생활의 목표역시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고학력화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출산이나 육아로 자아실현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의식의 변화가 출산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남성 29.4%, 여성 12.9%),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결혼계획과 관련하여서도 미혼남성의 5.5%가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0%는 결혼에 대하여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³⁾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희망 및 유보의 입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남녀 모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매우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 지현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미혼율의 증가는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출산 적정연령을 미혼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혼율의 상승은 곧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남녀 미혼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및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미혼율이 남녀 모두 낮아지고 있으나, 그 감소폭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여성의 경우 1990년 27.0%에서 2005년 19.6%로 7.4%p 감소하였으나, 전라북도 남성의 경우 1990년 40.2%에서 2005년 28.5%로 11.7%p 감소하였다.

〈표 2-31〉 전라북도 및 전국 15세 이상 인구의 미혼율 변화

(단위 : 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전북	여성	210,908(27.0)	180,890(23.9)	168,963(22.0)	142,793(19.6)
	남성	305,132(40.2)	265,398(36.4)	221,014(31.5)	186,890(28.5)
전국	여성	4,517,359(27.8)	4,454,017(25.7)	4,598,418(25.0)	4,669,490(24.5)
	남성	6,113,914(38.2)	6,107,620(35.9)	5,583,668(32.4)	5,648,756(31.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뿐만 아니라 혼인연령이 상승함으로써 출산연령이 상승되고, 이는 저출산 추세에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09년 전라북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8.27세로 1990년 24.38세보다 3.4세 정도 증가하였으며, 2009년 전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1.53세로 1990년 28.36세보다 3.4세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을

3) 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알 수 있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연령의 상승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 2-32〉 전라북도 및 전국 초혼연령의 변화

(단위 : 세)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북	여성	24.38	24.79	25.72	27.19	27.34	27.67	27.90	28.27
	남성	27.50	28.11	28.81	30.76	30.96	30.96	31.37	31.53
전국	여성	24.78	25.32	26.49	27.72	27.79	28.09	28.32	28.71
	남성	27.79	28.36	29.28	30.87	30.96	31.11	31.38	31.6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자녀관의 변화

자녀관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비율은 1991년 90.3%, 1997년 73.7%, 2000년 58.1%, 2003년 54.5%, 그리고 2006년에는 53.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⁴⁾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6년)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 ¹⁾	90.3	8.5	-	-	1.2	100.0(7,448)
1997 ²⁾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³⁾	58.1	41.5	31.5	10.0	0.5	100.0(6,363)
2003 ⁴⁾	54.5	44.9	32.3	12.6	0.6	100.0(6,593)
2006 ⁵⁾	53.8	46.2	34.1	12.1	-	100.0(5,386)

주 : 1991년은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지만을 질문함

자료 :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특히 20~30대 젊은 여성들은 과거 세대 여성과는 다른 가치관과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여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과거와 달리 자녀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자녀 교육이 강조되고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 자녀양육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는 자녀출산의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공선진 외, 2006).

3. 자녀양육비 증대와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1) 자녀양육비 증대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질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유보하거나 희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자녀의 사회적 지위 성취를 위해서 자녀 교육이 강조되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2008년 전북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10~50만원 미만'이 23.8%, '50~100만원미만'이 11.7%, '10만원미만'이 5.4%, '100~150만원미만'이 3.5%, '150만원이상'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부로 나누어 교육비 지출현황을 보면 시부의 경우 25.5%가 '10~1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부의 경우는 15.1%로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시군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3〉 전라북도 교육비 지출현황

(단위 : %)

구분	교육비 지출없음	10만원 미만	1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이상
2008	54.3	5.4	23.8	11.7	3.5	1.3
시부	50.5	5.9	25.5	13.0	3.8	1.3
군부	73.0	3.2	15.1	5.7	1.7	1.4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2008 전북사회통계조사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서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담스럽다’의 비율이 80.2%로 나타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담스럽지 않다’의 비율은 5.5%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4〉 전라북도 및 전국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

연도	계	학생있는 가구	부담스럽다			보통	부담스럽지 않다		
			소계	매우	약간		소계	별로	전혀
전북	100.0	41.4	80.2	38.7	41.5	14.3	5.5	4.6	0.8
전국	100.0	47.0	79.8	39.8	40.0	15.6	4.6	4.1	0.5

자료: 통계청, 2008 사회조사보고서

2)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연령대별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가 차별화되고 있다. 주출산 연령층인 40세 미만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많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은 것은 출산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특히 임금근로자의 혼인·출산에 따른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출산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M자형을 띠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2-35〉 연령대 -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취업	0.33	0.62	1.42	1.88	1.98	2.07	2.42	2.86
실업	0.09	0.30	0.91	1.57	1.69	1.81	2.04	2.30
비경제활동	0.80	1.10	1.62	1.91	1.95	1.98	2.23	2.53

자료: 통계청,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2009

〈표 2-36〉 종사상 지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평균 출생아수
임금근로자	1.7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13
고용원을 둔 사업주	1.91
무급가족종사자	2.3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2009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증가와 양성평등의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자녀양육업무는 여전히 취업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가족 내 가사분담이나 양육이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직업의식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는 여성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자아욕구 등의 증대, 그리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7년 50.3%까지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50%에 가까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2009년 전라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3%로 남성의 70.1%에 비해 약 20%정도 낮다.

〈표 2-37〉 전라북도 및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추이(2000~2009)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북	여자	47.7	48.6	48.0	48.0	47.1	48.1	49.8	50.3	49.7	49.3
	남자	69.8	70.7	70.2	71.1	71.1	70.5	70.1	71.3	71.2	70.1
	계	58.3	59.1	58.6	59.0	58.5	58.8	59.5	60.4	60.1	59.4
전국	여자	48.8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49.2
	남자	74.4	74.3	75.0	74.7	75.0	74.6	74.1	74.0	73.5	73.1
	계	61.2	61.4	62.0	61.5	62.1	62.0	61.9	61.8	61.5	6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0~2009). 각년도 연평균 경제활동참여율

2)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변화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는 점차 변화하여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1998년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북의 경우 27.6%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51.4%로 23.8%p 증가하였다. 전라북도 여성중에서 가정과 관계없이 여성이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998년 30.0%에서 2006년 54.1%로 24.1%p 증가하였다. 반면, 결혼 후 ‘가정에만 전념’ 하겠다는 전라북도 여성은 1998년 9.6%에서 2006년 5.5%로 줄어들어 전라북도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취업을 계속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북도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많이 줄어든 반면,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8〉 전라북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단위 : %)

	결혼전 까지	첫자녀 출산전 까 지	자녀 성장후	결혼전과 자녀 성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	모르겠다
1998	13.5	7.2	14.1	23.9	27.6	11.0	2.7
남	14.8	7.7	14.0	22.9	24.9	12.5	3.2
여	12.3	6.7	14.3	24.9	30.0	9.6	2.3
2006	4.7	5.2	13.3	25.4	51.4	7.3	5.1
남	5.7	6.0	14.3	25.8	48.3	9.3	5.2
여	3.8	4.5	12.5	25.1	54.1	5.5	4.9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6년도 자료

하지만 전라북도의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들이 일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 1998년 조사를 보면 ‘가사부담’의 비율이 39.7%로 다른 장애요인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다. 2006년 ‘육아부담’과 ‘가사부담’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육아부담’은 48.9%, ‘가사부담’은 7.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부담이 여성취업 장애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편견’이 여성들의 취업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비율은 2006년 16.8%로 육아부담 다음으로 높은 비율 보이고 있다.

결국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39〉 전라북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단위 : %)

	사회적 편견관행	직업의식 책임감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대한 여성능력 부족	구인정보 구하기 어려움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모르겠다
1998	27.6	9.0	12.7	5.2	-	26.5	13.3	0.1	5.6
남	29.0	11.9	12.0	5.5	-	22.9	13.1	0.1	5.5
여	26.3	6.4	13.3	4.9	-	29.8	13.6	-	5.7
2006	16.8	2.9	10.8	1.8	2.8	48.9	7.6	0	8.3
남	19.1	3.7	10.4	2.0	2.6	47.5	7.0	0.1	7.6
여	14.6	2.1	11.3	1.7	3.0	50.2	8.2	-	8.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6년도 자료

3) 가사분담 실태

「사회통계조사」(통계청, 2008)의 15세 이상 인구 중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도민의 71.1%가 ‘부인주도’라고 응답하여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 2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인 전적 책임’이라는 의견도 5.0%를 차지하여 ‘남편 전적 책임’이라는 견해 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40〉 전라북도 및 전국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15세 이상 인구)

(단위 : %)

지역	부인이 주도	부인 전적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전북	71.1	5.0	66.1	27.7	1.2	1.1	0.2
전국	66.5	6.7	59.8	32.4	1.1	0.9	0.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8), DB 웹서비스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달리 실제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사회통계조사」(통계청,2008) 결과에 의하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제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주도’로 가사가 분담되는 경우가 88.4%, ‘공평하게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은 10.6%에 불과하며, 특히 ‘부인 전적 책임’의 경우는 36.2%로 나타나 대부분 여성들이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1〉 전라북도 및 전국의 가사분담 실태

(단위 : %)

지역	부인이 주도	부인 전적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전북	88.4	36.2	52.2	10.6	1.0	0.9	0.1
전국	89.5	35.7	53.8	9.0	1.5	1.2	0.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8), DB 웹서비스

주: 부부 중 부인이 응답한 것임.

4) 육아 인프라의 미흡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에서는 취업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임신 및 출산 후 희망하는 근무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58.1%)’,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수행할 시간 부족(19.2%)’, ‘아이를 맡길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된다. 2005년 조사에서는 취업 중인 미혼여성들이 임신·출산 후에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이 79.8%였는데 2009년 조사에서는 58.2%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이러한 자발적인 이유 대신 일-가정 양립 곤란과 육아인프라 미흡 등 사회적 여건의 이유들은 2005년 6.7%에서 2009년 28.1%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 곤란이나 육아인프라 미흡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환경의 열악함을 의미하며, 이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은 물론 결혼 및 출산 포기까지 이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42〉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임신·출산 후 경력단절 이유

(단위 : %)

구분	2005	2009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79.8	56.9
아이를 맡길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서	4.8	6.6
본인의 건강문제	1.0	1.0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수행할 시간부족	1.9	24.3
기타 ¹⁾	12.5	1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주: 1) 아이를 맡길 경제적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등을 포함

저출산대응 정책 흐름과 전라북도 현황

제 1 절 출산정책 흐름과 내용

제 2 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현황과 문제점

제 3 장 저출산대응 정책 흐름과 전라북도 현황

제 1 절 출산정책 흐름과 내용

1.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자체의 대응

저출산 현상은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 가족형성과 가족확대의 가족주기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결과로서, 넓게는 일반적인 가족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가족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의 추진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국가적 과제를 선도하여 모범을 세우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보육이나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의 서비스의 내실화는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며 완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두드러지고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거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복지시책은 일부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인구고령화,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계층 뿐만 아니라 주민전체가 정책 대상이 될 것이다.

과거 복지시책은 일부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인구고령화,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계층 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대상이 될 것이다. 가족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통해 지역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송다영, 2005).

그러나 지역단위 가족관련 서비스의 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이란 정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의 동원과 흡수, 자원관리, 현재 활동의 평가 등 다국면적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김혜정, 2006).

이러한 정책역량의 양과 질은 주민의 정책체감도와 정책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만 실로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김춘희, 2002; 송다영, 2005; 박병현, 2004; 강천동, 2004 등).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이란 정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의 동원과 흡수, 자원관리, 현재 활동의 평가 등 다국면적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 환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부족,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부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한, 정책담당부서의 다원화 내지 분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업무는 주변적이고 제한적인 위상에 놓여 있어, 가족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미흡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 업무만을 전담할만한 충분한 인력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소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성마저 낮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이삼식 외, 2006).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은 출산을 저하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에 한계성을 안고 있다(송다영, 2005). 또한 서비스나 업무의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원화된 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사업집행과정의 불연속성과 서비스의 파편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배정할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 계획부터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중앙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며, 그 결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단위 가족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조직과 법적 체계를 진단하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욕구를 반영한 인구정책 특성을 진단하는 것이다.

1) 저출산 대응 정책수행 체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행조직의 형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T/F체계, 기존부서전담체계, 분산조직체계가 해당된다. 인구정책 수행조직의 형태에 따른 각각의 특징과 이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2007년 인구정책경진대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T/F체계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체계이다. T/F는 사업부서 또는 담당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서구의 경우에 복지지원과, 보육, 아동, 가족보건, 행정지원, 인사, 예산, 인력개발, 여직원회 등 담당인력이 T/F에 참여 하고 있다. T/F내 부서간 연계 수단으로는 정례회의, 수시회의 등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저출산 대응 T/F는 부산 연제구, 인천서구, 대전 서구와 중구, 경기 성남시, 전남 목포시 등 대도시 에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기존 전담부서체계는 기존의 부서 중 한 부서를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전담'부서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중소도시에서 보다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전담부는 주로 보건소이다.

분산조직체계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총괄 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진 않고, 기존의 저출산 관련 부서들이 각각의 업무를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분산조직체계를 취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일부지역에서만 분산조직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농촌(군)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3-1〉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조직체계

구분	특징	지역사례
T/F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따른 3~4개의 전담부서가 있으며, 1개의 총괄부서가 있음 · 출산장려시책 개발 및 체계적인 추진관리 ·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각 업무추진 · 정례회의, 수시회의를 통해 분야별 추진상황보고 및 시책발굴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연제구(복지지원과, 총무과, 보건소) · 부산해운대구(여성아동팀, 보육지원팀, 보건소) · 인천서구(복지서비스과, 기획공보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 대전서구(복지지원과, 보육아동, 가족보건, 행정지원, 인사, 예산, 인력개발, 여직원회 등) · 대전중구(여성아동, 보육, 모자담당, 총무, 인사, 노인, 방문보건 등) · 경기성남시(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 전남목포시(보건산업과, 기획실, 사회복지과, 총무과)
기존부서 전담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업무외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업무 경우 · 고유업무로 적극적 추진미흡(지역 밀착형프로그램개발미흡) · 해당 팀의 성격에 따라 정책방향 좌우경향 · 보건소의 경우, 관련부서의 행정 협조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남구(가정복지과) · 광주남구(보건소) · 경기 김포시(보건소) · 경기 화성시(보건소) · 강원 동해시(주민생활지원팀) · 전남화순군(보건소) · 경북영주시(보건소) · 경북영주시(보건소) ·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
분산조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출산,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업무를 원 소관부서에서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수행 · 부서간 업무 연계 및 역할분담 불분명 ·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미흡 · 지역에 따라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중구(가정복지과, 보건소, 총무과, 전산정보과) · 부산동래구(여성청소년담당, 가족보건담당, 총무담당과) · 대구중구(건강증진, 주민복지과) · 인천동구(주민복지과, 보건소) · 인천옹진군(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 광주동구(복지사업과, 총무과, 보건소) · 울산북구(복지서비스과, 보건소) · 경기남양주시(가족여성과, 총무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 강원평창군(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정책부, 보건의료원) · 강원양양군(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 충북청주시(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 충북청주시(보건소, 총무과, 자치정보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충북단양군(생활지원과, 보건소, 농정과, 건강증진과) · 충남청양군(사회복지과, 보건산업과) · 전남함평군(보건소,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산과) · 전남강진군(조직관리팀, 방문보건계) · 경북성주군(자치혁신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 경북의성군(기획실, 총무과, 노인여성복지과, 보건소) · 경남김해시(주민생활지원과, 허가과, 건강증진과, 여성아동과, 농업경영과)

이상의 세 유형의 조직체계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T/F조직체계의 장점으로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

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해당지역의 환경이나 주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다 적합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T/F조직체계는 정책들 간 우선순위 조정이나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1명의 인력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이른바 종합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여러 부서의 인력들이 T/F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T/F조직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부서전담체계의 장점은 기존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한 부서에서 저출산 대응 업무를 집중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정책간 우선순위 조정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출산 대응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가족정책, 보육·교육, 여성정책, 노동 등 광범위하여, 전담부서 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력규모나 전문성의 측면에 한계가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구조상 힘이 약한 부서에서 저출산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저출산 대응업무가 전담부서의 업무 위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타부서의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나 예산배분 등에 대한 조정권을 갖지 못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전담부서는 원래 맡고 있는 고유 업무에 저출산 대응 업무들을 추가적으로 맡게 되는 경향이 있어, 두 업무가 모두 부실해질 수 있다. 결국 전담부서가 지역 환경과 주민 욕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끝으로 분산조직체계의 장점으로는 기존의 업무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들이 개별적이면서도 분산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정책(프로그램) 간 유기적인 연계성이 약하며, 이에 따라 정책간 우선순위나 예산배분 등의 조정이 곤란하게 된다. 그 경우 예산이

충분치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발이나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형태의 조직체계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다.

2)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자치법규: 조례, 규칙)의 제·개정이 중요하다.

〈표 3-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구분	조례명(주요 내용)
출산 임신 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구 출산양육금지원금 지원조례(2007.4.10 제정) · 부산해운대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임산부직접방문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면제) · 옹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2007.7.26 개정) · 옹진군 영유아보육료지급에관한조례(2007.1.11제정) · 광주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7.3.30제정) · 광주남구 출산장려신생아건강보험지원에 관한조례(2007.1.10제정) · 대전서구 출산장려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출산장려기금재원조성,기금손속기한 및용도, 출산장려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운용, 임신출산용품지원,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임신부산전관리등) ·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2007.6.27 제정) ·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2007.7.31공포) · 김포시 신생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2007.7.31공포) · 화성시 신생아출산지원금 지원에관한 조례(2006.4.28제정) · 화성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2006.2.24 제정) · 동해시인구늘리기시책지원에관한조례(출산장려금, 인구늘리기위원회설치및운영등) ·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2007.1.5제정) · 청주시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지원조례((2007.1.5제정) · 청양군신생아출산지원에 관한 조례(2007.4.20제정) · 목포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첫째아 10만원, 둘째아5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150만원 이상) · 강천군신생아양육지원금, 출산준비금지원(출산3개월전부터주민등록을두고있는가족지원)
보육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남구영유아보육조례(보육정책위원회구성 및 운영,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인천광역시 서구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보육시설업무에 대한 규정) · 광주남구 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성남시보육사업운영조례(시설설치운영보조금지원에 대한규정) · 김포시직장어린이집운영규정(입소절차,입소자격,보육료납부,비용부담등)
다문화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2007.3.15제정) · 단양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관한조례(2007.5.30제정) · 청양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2007.4.20제정) · 강진군거주외국인지원(한국어및기초생활적응교육,고충·생활·법률·취업등상담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등)

법제화 영역은 크게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법제화는 대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지원과 출산 후 양육지원으로 구분된다. 임신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사례로는 임신부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제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부산 해운대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목포시 임신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출산준비금 지원’등이 해당된다.

기초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례들은 출산 후 양육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출산 후 일시금지원, 수당형태의 매월 지원, 보육료지원, 보험료지원 등이 해당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구문제들을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구정책 일반에 대한 법제화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제화란 지역의 인구문제들을 명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주민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개별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 저출산정책 분류별 사업현황

1) 중앙정부의 정책분류별 사업현황

정부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2010년까지 저출산 정책에 총 국가예산 18조 8,917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분야의 정책을 크게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육성의 3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3개의 대분류로는 정책목표들의 파악이 쉽지 않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류한(국회예산정책처, 2007) 기준에 의하면 저출산정책과 관련한 70개 사업을 다음

과 같이 10개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3-3〉 저출산 정책의 분류별 사업내역

정책분류	사업내역
1) 영유아양육비지원정책	차등보육료지원, 민3~4세차등교육비지원, 민5세아무상보육·교육비지원, 두자녀이상보육·교육비지원, 장애아무상보육·교육비지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아동수당제도도입검토
2)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직장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시립유치원기본보조금, 유치원종일제 확대, 시간연장형및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확대
3) 방과후 활동 및 학습지원정책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지원, 저소득층을 위한바우처제도도입,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 확대, 사이버가정학습내실화, 지역아동센터확충및운영내실화, 지역아동센터확충및운영내실화,
4) 일과가정의 양립지원정책	산전후휴가급여지원확대및유사산휴가급여지원, 육아휴직, 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설, 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위한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전업주부노동시장복귀프로그램운영, 경력단절여성인재뱅크운영
5) 임신과출산지원정책	신생아의체계적인건강관리를 위한기반구축,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제공,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성영유아건강검진강화, 인공임신중절예방, 모유수유지원확대, 산모도우미지원, 시험관아기시술비용지원, 여성생식보건증진프로그램
6) 학교교육 및 빈곤아동지원정책	저출산고령화관련학교교육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내실화, 희망스타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7) 가족생활 및 가족친화적기업지원정책	가족생활교육및가족상담서비스내실화, 가족단위여가문화지원, 가족친화적기업경영모델개발, 기업인증제등가족친화적기업지원, 가족친화적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8) 국내입양지원정책	입양문화발전을위한의식개선, 입양가정에입양수수료지원, 입양아양육수당전면도입,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인상
9) 아동및청소년의 안전지원정책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실종아동보호및지원,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강화, 약물남용등예방및치료재활, 아동권리홍보및모니터링
10) 세제 및 주택마련지원정책	다자녀가정에유리한중장기세제개편, 다자녀가구예주택분야관련인센티브부여, 주택자금대출혜택부여

이상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상의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매우 높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1) 영유아 양육비지원 정책 대다수의 사업들은 가구 소득수준 및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여부에 따라 수혜조건을 한정하여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조성은 가임연령층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취업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과도 연장선상에 있다.

3)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맞벌이 부부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이며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4) 방과후활동 및 학습지원 사업은 ‘자녀교육비부담’이 전 소득계층에서 기혼 여성의 출산중단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나 방과후 활동 및 학습지원 정책의 사업들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시설 이용자나,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 및 내용이 한정되어,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5) 학교교육 지원정책 및 가족생활·가족친화적기업 지원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세대의 출산 및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추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이는 세부 활동 내역의 실효성 및 홍보부족, 관련부처 간 의사소통의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출산장려 시책 사업내용

(1) 경제적 지원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다음의 <표4-1>과 같다. 표에 의하면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출산 축하금, 보육비 지원, 간식비 지원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보육비 지원, 간식비 지원 등은 적용대상이 저소득층 자녀로 제한되어 있어 저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체감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출산축하금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별 자치법규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으며 금액은 월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자체별, 출생순위별 차이가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첫째아부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한편, 도시지역에서는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지자체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출산 축하금 지원이다. 2006년부터 지자체 사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임신(29%) → 양육(24.9%) → 출산(23.6%) → 인식개선(5.5%) → 결혼지원(3.1%)에서 2009년에는 출산(27.8%) → 양육(27.2%) → 임신(21.4%) → 국제결혼이민자지원(7%) → 인식개선(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업비중이 확대 중이며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양육우대지원 정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임실로 단 4곳에 지나지 않았다.

〈표 3-4〉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

시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출산축 하금 지원	출생신고 신생아	첫째아부터지원(20만원~300만원)						○	○	○	○	○	○			
		둘째 아부터 지원(50~100만원)			○	○	○	○		○	○	○	○		○	○
		셋째 아부터 지원(50만원)	○				○	○		○	○	○	○		○	○
보육비 지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 애인 여성	출생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	○				○	○			○				
	결혼이민자 가정 만 0세~5세의 영유아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인당 162천원~361천원)														
	법정 저소득계층(1층) 의 아동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의 차액(월2만원씩) 지원				○				○					○	
	5세 이하 공무원 자녀	정부 보육비 지원(가30~30%)	○		○	○		○	○	○		○	○		○	
	두 자녀 이상의 보육 시설 동시 이용 도시 근로자기구 월평균수 득 100% 수준이하)	둘째아부터 보육료지원	○		○	○		○	○	○		○	○		○	○
	36개월 미만 셋째 자 녀 보육료 지원	36개월까지 월 보육료 150,000원 지 원(저소득·차상위 가구 우선)	○			○	○		○	○		○			○	
	만5세아동(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원 소득 인정액 기준 무상보육 료 지급	○		○	○		○	○	○		○	○		○	○
	만 0~4세 저소득층 (도시근로자기구 월평 균소득 70% 수준이하)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월50,10 0~372,000원)	○		○	○		○	○	○		○	○		○	○
취학전 만2세 이하 모든 장애아	보육시설을 이용 시 무상보육료 지급	○		○	○		○	○	○		○	○		○		
양육비 지원	농업인영유아	연령별 보육료 차등지원	○	○		○	○	○	○	○	○	○	○	○	○	
	만0세~18세 입양	월10만원(국비70·세비30)	○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 수급자로서 1~3급 여성장애인의 만7세 미만 자녀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			○			○						○	
간식비 지원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받는 아동	1인당 연25천원 이내	○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 여 등 지급	출산 여성공무원 및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 원	90일의 산전후 휴가·급여전액 지급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 3일간의 출 산휴가보장	○	○		○	○	○	○	○	○	○	○	○	○	
불임부 부지원 사업	법적혼인 44세 이하 여성(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55만원 최 대2회 510만원·일반회 150만원 최대2회 300만원 시험관 이기 등 보 조생식술	○	○	○	○		○	○	○	○	○	○	○	○	

이외에 군산시의 경우에는 출산축하를 위하여 모든 출생아에게 5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인력 및 물품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인력지원으로 산모도우미,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물품지원으로 유축기 대여, 다자녀 카드 발급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모도우미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유축기 대여는 비교적 도시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의 경우에는 분만용품, 출산축하 용품 지급 등의 지원이 도시에 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5〉 출산장려를 위한 인력 및 물품지원

시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아이돌보미 사업	만3개월~12세 자녀가 있는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1~2명 가산 2시간 2천원~8천원	○	○		○		○	○	○	○	○			○	○
산모도우미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산모	1인당 567천원(본인부담금 46천원),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 2주(12일) 지원	○	○	○	○	○	○	○		○	○			○	○
	출산 전후 90일 이내 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1일 28,000원, 45일내)	○	○		○		○	○	○		○	○		○	○
보육시설 운영	만5세 이하 공무원 자녀	시설의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				○
제대소독 용품지급	24주 이내의 임산부	태이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유축기대여	수유부	유축기 대여		○	○	○	○	○								○
분만용품 지급	임산부	아기속싸개, 면봉, 체온계, 제대소독약 등										○				○
모자 건강관리	임산부 및 자녀	영유아용 정장제, 해열제 및 체온계 등 지급														○
다자녀가정 우대 아이조이카드 발급	2자녀이상 가정	물품구입, 시설이용 등 우대 혜택	○	○	○	○	○	○	○	○	○				○	○
차량보조시스템 구입비지원			○	○	○	○	○	○	○		○	○			○	○
출산축하용품 지급				○											○	○

(3) 건강 및 의료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으로는 크게 결혼예비 부부를 위한 각종 검사, 임산부의 건강 및 산전검사, 태아이상선별 검사, 영유아를 위한 예방접종과 철분제

〈표 3-6〉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지원

사책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산전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	○	○	○		○	○					○	○
태아이상 선별검사	혈액체혈·검진기관에 의뢰 10일 이내 결과 통보					○	○		○	○	○			○	○
철분제공급	철분제 월 30정씩 지급	○	○	○	○	○	○	○	○	○	○	○		○	○
예방접종	0세~6세의 영유아 예방접종	○	○		○	○	○	○	○	○	○	○		○	○
시력검진	만3~6세 어린이집 이동		○		○	○	○		○	○	○			○	
구강보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임산부구강검사, 불소젤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현지순회 교육	○	○	○	○	○	○		○		○	○		○	○
난청검사	출생 후 4주 이내 신생아 난청검사 의뢰	○	○	○	○	○	○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	○	○	○	○		○	○	○			○	○
베이비마사지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전신 마사지 시범·실습				○	○									
아토피 예방사업	아토피 케어용품 만들기 교실, 아토피·천식 건강교실 운영, 아토피피부염질환자 의료비 지원, 아토피과을 위한 보습제 배부, 상담실 운영 등	○	○	○	○	○	○	○	○	○		○		○	
임산부 영양관리사업			○		○	○	○		○	○	○			○	○
혼인전 예비부부 무료검진				○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	○	○	○	○		○	○	○			○	○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미만의 출생아	○	○	○	○	○	○	○	○	○	○			○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대상	○	○	○	○	○	○		○		○			○	○
영유아영양제 지급						○						○		○	○
출생아 의료비지원	출생아 생후 6개월 이내, 최고 연간 20원까지 지원	○			○	○									
국기필수 예방접종사업	비씨지B형감염,피디티,경구용소아마비,홍역, 볼거리,풍진	○	○		○		○	○	○	○	○	○		○	○
임산부 기형아 검사	임부 16~17주대상 Triple염색제이상 및 신경관결손검사(에드워드증후군,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	○					○				○

공급 등 대상과 사업 내용이 비교적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건강관련 지원 대상은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모의 산전검사와 관련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동부권 지역 즉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에서는 사업이 거의 없으며 태아의 선별검사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 및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혼인전 예비부부 무료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군산 지역 단 한곳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출산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기혼자를 중심으로 집중화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혼 예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도 관심 있게 지원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웃 일본의 경우는 저출산 대책의 첫 단추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판단아래 기존의 기혼자 중심적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4) 정보제공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보제공 중 출산준비교실, 산모의 건강상담, 임신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임신부 건강체조 교실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신부의 지리적 접근성과 정보제공 기관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현상임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과 가임기 여성,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성상담·성교육’은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미흡하다. 주된 사업내용은 올바른 피임법과 성 지식, 성 행동에 따른 책임의식 등에 관한 교육으로 인공임신 중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의외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표 3-7〉 출산장려를 위한 정보제공

사책명	자원대상	사업내용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출산준비 교실	임산부 중 5개월 이상자	리마즈 호흡법 및 이완법, 태교, 임신 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의 필요성 지도		○		○	○	○				○			○	○
이유식 지도	임신, 수유부	이유식 교육 및 실습, 책자 배부	○	○		○	○	○	○	○		○			○	○
건강상담	임산부	산전관리방법, 고위험 임신 예방 및 치료법, 산후건강 및 가족계획 등 임신 전후에 필요한 모든 상담	○	○	○	○	○	○			○	○			○	○
성상담·성교육	유치부, 초·중·고생, 가임기 여성, 신혼부부 등	올바른 피임법 및 성지식,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보급, 성행동에 따른 책임의식 배양 등 상담 및 교육	○		○	○	○	○		○		○			○	○
유산예방 교육	등록 임산부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		○			○					
임산부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분만법 익히기, 산후체조 등			○		○	○	○							○	○
교육 및 홍보물제작 보급	모유수유홍보, 모자보건사업안내 홍보		○	○	○	○	○	○	○	○	○	○	○	○	○	○
출생축하카드 보내기	예방접종일 일정 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출생아 의료비지원 등 안내					○	○	○							○	○
영양 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맞는 체계적인 영양 교육 및 자료제공		○	○	○	○	○	○	○		○				○	○
인공임신 중절예방	홍보물배포 및 캠페인전개		○	○		○	○	○		○	○				○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	○	○	○			○				○	○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		○		○							○	○

(5) 사회분위기 조성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육아휴직 활성화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임

산부 홍보 등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주	군신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직장문화개선	임산부 공무원 출산장려 위해 일직, 숙직, 비상근무 제외						○	○	○					○	
출산직원 실적 가점제 운영	공무원 중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 실적 가점				○										
육아휴직 활성화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1년 이내 육아휴직제공(50만원/월), 결원보충	○	○		○		○	○	○	○	○	○		○	○
육아시간활용	1년 미만의 자녀 둔 여성공무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지원	○													
출생생비 불균형 해소	홍보실시,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태아성감별 행위 지도단속	○			○	○					○	○			○
양성평등가족 사업	5대 생활문화(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	○	○	○	○	○		○	○	○			○
임산부 홍보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	○	○	○	○	○	○		○	○			○	○
저소득층동거 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신부화장 및 머리손질, 드레스, 사진촬영, 부케 등	○	○		○		○	○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결혼비용 지원 (다문화가족 결혼 지원)				○							○			○
무료야회 결혼예식장 이용						○	○								○
결혼상담소 운영	회원등록 및 상담, 만남주선		○		○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철분제 지급, 임신,양육에 관한 보건의료 서비스				○		○	○		○					○

정읍에서는 공무원 가운데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제공하는 등 다자녀를 우대하는 포지티브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음이 타 지역에 비교하여 선도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지원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3. 출산정책 성과평가

1) 저출산정책의 인지도 평가

국회예산처가 추진한 저출산정책 설문조사 결과(온라인 패널 800명 대상)에 의하면 저출산정책의 인지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6.6%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이 응답자의 63.6%’,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정책’이 응답자의 59.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청소년 안전 지원 정책’은 응답자의 13.5%, ‘가족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 지원 정책’은 8.3%만이 설문조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타 정책에 비해 인지율이 매우 낮았다.

(N=800명, 단위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정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07, (주)엠브레인 용역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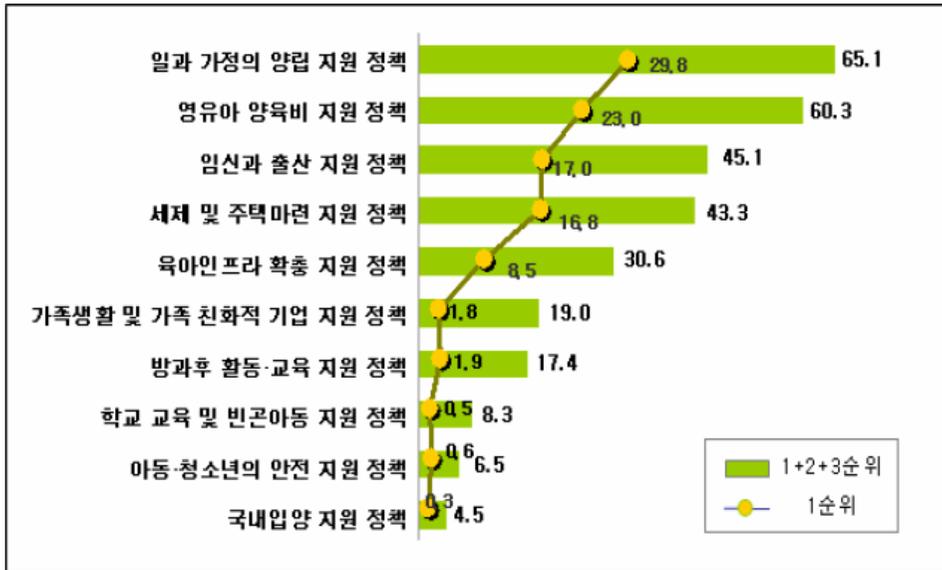
(그림 3-1) 저출산정책 인지도 평가

2) 저출산정책 효과성 우선순위 평가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을 1위부터 3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29.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23.0%)’,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17.0%)’,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정책(16.8%)’을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N=80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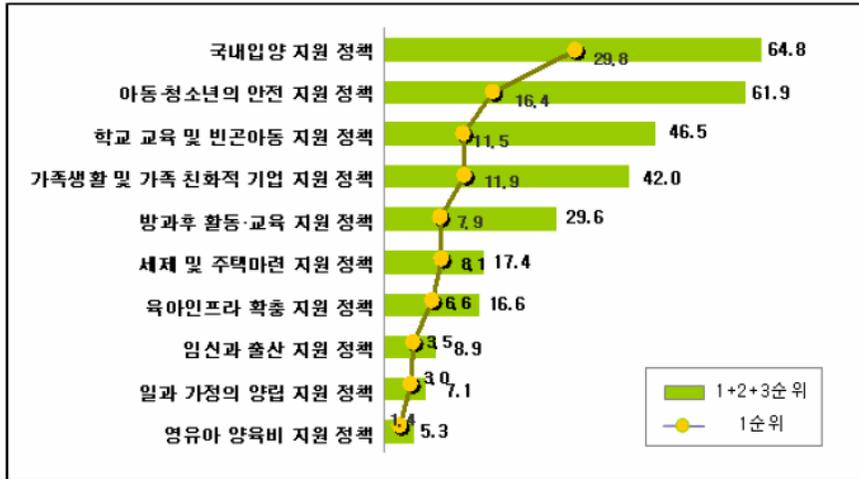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정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07, (주)엠브레인 용역보고서.

〈그림 3-2〉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 순위(온라인 패널 1차 응답)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의 순위를 3위까지 선택하는 문항의 응답결과 응답자들은 ‘국내입양 지원 정책(29.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지원정책(16.4%)’, ‘가족생활 및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정책(11.9%)’, ‘학교교육 및 빈곤 아동 지원 정책(11.5%)’ 순으로 응답하였다.

(N=80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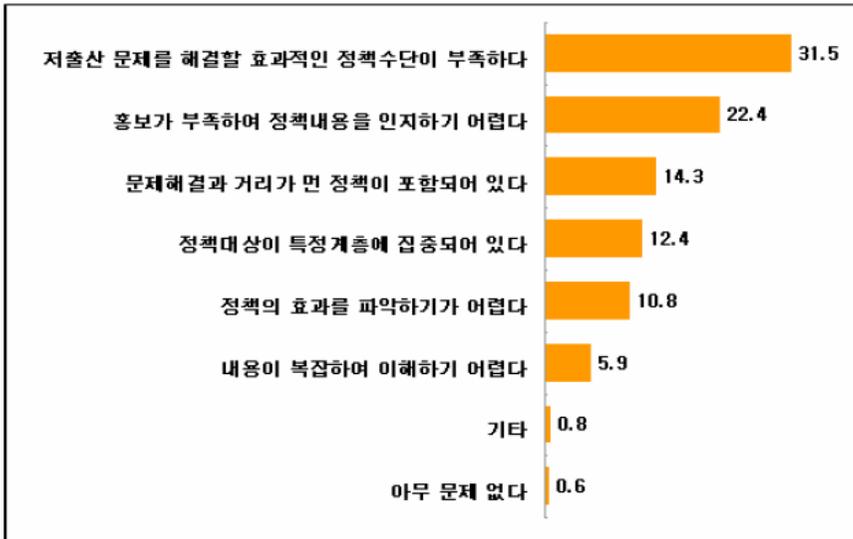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07, (주)엠브레인 용역보고서. 」

〈그림 3-3〉 가장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저출산 정책 순위(온라인 패널 1차 응답)

3) 저출산정책의 문제점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31.5%)’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22.4%)’가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14.3%, ‘정책대상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의 응답율은 12.4%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0.8%,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0.6%만이 ‘현재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여, 나머지 99.4%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저출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800명, 단위 : %, 0.1% 이하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정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07, (주)엠브레인 용역보고서.

〈그림 3-4〉 저출산정책의 문제점(온라인 패널)

제 2 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현황과 문제점

1. 출산정책 내용 및 예산

1) 저출산대응 전라북도 정책추진 현황

다음의 <표3-10>는 전라북도가 2010년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총 78개 사업, 3,437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지원의 사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영유아양육비지원으로 총 2,310억 원이며 전체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방과 후 활동 및 학습지원 정책으로 409억 원에 전체예산의 1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는 376억 원의 예산으로 전체사업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산장려 학자금지원은 셋째아부터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신규 사업이며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육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표 3-9〉 전라북도 저출산정책 사업내용(2010)

(단위: 개소, 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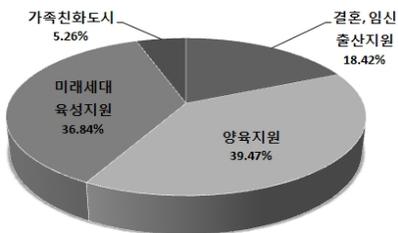
정책분류	사업내역	사업량	예산
1) 영유아양육비지원정책	· 영유아보육교육비 중산층까지 확대	87,000	2,072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2,950	36
	· 방과후학교확대등교육비부담경감	-	131
	·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원	6,570	71
	소계	-	2,310(67.2%)
2)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2	5
	·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14	15
	· 수요자중심의육아지원서비스(시간연장보육시설확대)	-	37
	· 유치원종일반운영및확대	501	111
	소계	-	168(4.9%)
3) 방과후 활동 및 학습지원정책	· 지역아동센터운영및아동복지교사지원	205	107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공부방운영	29	23
	· 농산여촌방과후운영사업지원	14개시군	229
	·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원	14개시군	35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6	15
소계	-	409(11.9%)	
4) 일과가정의 양립지원정책			
5) 임신과출산지원정책	· 산전검사료,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20,000	4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5
	·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지원	1,940	16
	·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2,350	13
	· 영양플러스사업, 모유수유지원	-	25
	· 국가필수 예방접종지원	331,000	10
소계	-	73(2.1%)	
6) 학교교육 및 빈곤아동지원정책	· 드림스타트사업확대(드림센터운영)	5	15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1,617	6
소계	-	21(0.6%)	
7) 가족생활및가족친화적 기업지원정책			
8) 국내입양지원정책	· 입양가정 양육부담경감(입양양육보조금)		5
	소계		5(0.1%)
9) 아동및청소년의 안전지원정책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강화	-	16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보호체계강화	3	10
	·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강화	-	24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6	8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11	1
	· 학교보건교육여건및환경개선(보건실현대화)	-	10
	· 학생대상질병예방프로그램 운영(흡연등)	-	6
	소계	-	75(2.2%)
10) 세제 및 주택마련지원정책			
11) 전라북도자체사업	· 출산장려학자금지원	1,000	27
	· 어린이기신나는매직버스운영	1대	1
	· 안심야간보육시설 시범운영	30	6
	· 출산장려 사회대협약 추진	10개분야 50명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6,700	80
	· 세자녀 이상보육료지원	1,580	19
	· 저소득층보육간식비 지원	31,000	45
	·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지원 등	13	198
	소계	-	376(10.9%)

2) 저출산대응 전라북도 정책예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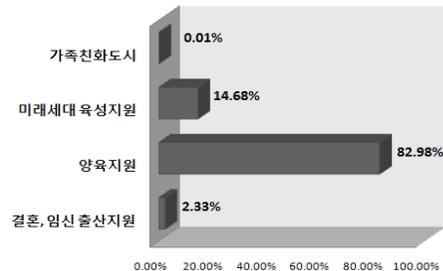
전라북도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은 2009년 2,921억원에서 2010년 3,437억 원으로 17% 증가하였으며, 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가족친화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쳐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예산의 82.9%가 양육지원에 편중 되어 있다. 특히 임신·출산지원과 가족친화지원부문의 예산은 각각 2.3%, 0.01%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지원 사업 예산비중은 낮고, 보육지원 사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친화적 지원 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생활 및 가족친화적 기업지원정책, 세제 및 주택마련지원, 육아휴직관련 대체인력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산에 영향을 주는 비교적 주요요인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전라북도는 향후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예산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부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출산 및 양육정책의 체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미흡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정책과 임신·출산지원 정책 등 주요한 저출산 대응정책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림 3-5〉 전라북도 저출산사업구성비



〈그림 3-6〉 전라북도 저출산사업예산 비중

2. 출산 및 양육 인프라 현황

1) 전라북도 시·군 출산 및 양육 인프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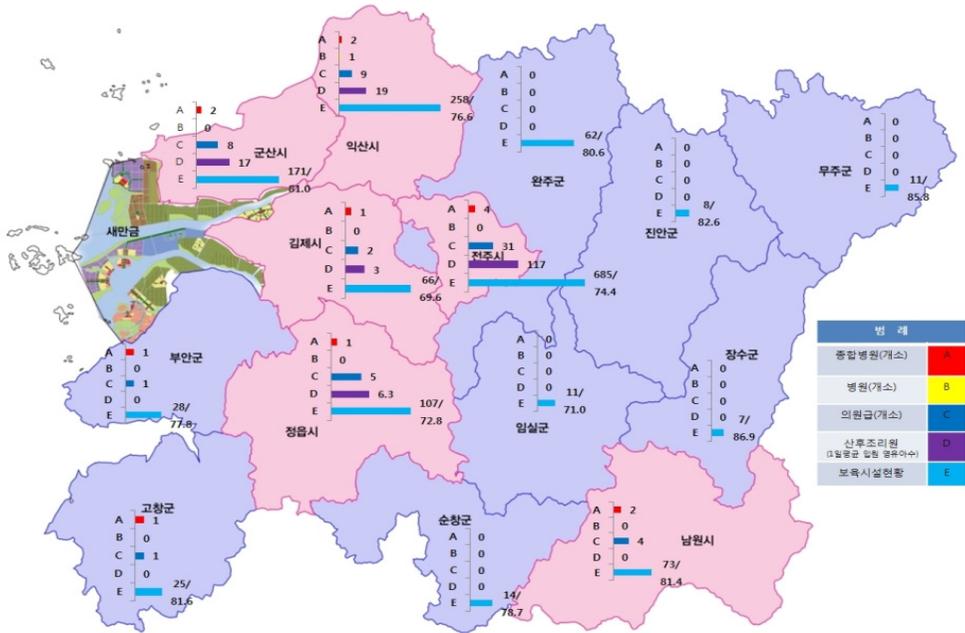
전라북도 지역별 출산 및 양육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산악권 지역이 출산관련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및 임신을 위한 병원과 의원의 절대부족 부족하며, 접경지역으로 원정출산 및 안정적인 출산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산후조리시설의 경우 전라북도에 2009년 12월 현재, 총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10개소는 전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외에 군산에 2개소, 익산3개소, 정읍 2개소, 김제 1개소로 동부권 시설에는 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표 3-10〉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지역분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출산관련 의료기관 현황							보육시설현황	보육아동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산후조리원		
	개소수	병상수	개소수	병상수	개소수	병상수	1일평균 입원 영유아수		
전주시	4				31	209	117	685	74.4
군산시	2				8	122	17	171	81.0
익산시	2		1	31	9	85	19	258	76.6
정읍시	1				5	45	6.3	107	72.8
남원시	2				4	24		73	81.4
김제시	1				2	22	3	66	69.6
완주군								62	80.6
진안군								8	82.6
무주군								11	85.8
장수군								7	86.9
임실군								11	71.0
순창군								14	78.7
고창군	1				1	3		25	81.6
부안군	1				1	2		28	77.8
총계	14		1	31	61	512	162.3	1,526	76.45

또한 64개 읍면동 지역에 보육시설 부재한 상황인데, 농촌지역의 보육욕구는 보육시설 이용 사유로서 ‘부모대신 보호(32.7%)’가 아닌 ‘사회성 및 전인적 발달(57.7%)’로 나타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 농촌이주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3-7〉 전라북도 저출산 관련자원 분포현황

2) 전라북도 시군 출산 및 양육 인프라

(1) 14개 시군 출산 및 양육 인프라 현황

다음의 <표3-11>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 시군의 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이다.

<표 3-11> 전라북도 시군 저출산 인프라 현황

인프라 현황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 인구대책위원회														
2) 저출산고령화TF팀		○							○				○	
3) 출산정책 위원회							○	○		○			○	
4) 출산전담전문부서 설치 (혹은 인구정책전담부서)	○													
5) 영유아 검진 시스템 구축 - 보건소 및 관련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되어 있다고 보는가?	○	○		○	○	○	○	○		○				○
6) 영유아 검진 시스템의 관리체계 - 영유아 검진 시스템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				○
7) 임신 및 출산인프라 구축 정도 (산부인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 군 단위는 실제 의료기관 개소수를 기입/예를 들면 고창군의 경우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음	○	○		○	○	○				○				
8) 보건소 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수행 여부)	○	○		○	○	○	○	○		○			○	○
9) 특수아 관리 시스템 구축 (정신지체아, 지체아, 특수지능소유자)														
10) 저출산 관련 지원 조례여부 - 출산, 임신, 양육지원 관련 조례명, 개수 기입			○		○	○	○		○	○	○			○
11) 출산장려정보센터														

인구대책 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은 한 지역도 없었으며 행정조직에서 저출산고령화 TF팀을 두고 있는 지역은 군산, 무주, 고창 등 3지역에 해당하였다.

출산정책 위원회도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등의 4개의 지역에 해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과 사업 등을 심이,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와 정책담당 부서의 구축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영유아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5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산부인과 의료 및 조산원 등의 유치 현황을 보면 동부산악권 지대는 <그림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수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으며 저출산 관련 조례를 만든 지역은 8곳에 해당한다.

(2)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표 3-12> 인프라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프라 현황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 인구대책위원회	○												○	
2) 저출산고령화TF팀	○		○	○	○		○		○		○		○	
3) 출산정책 위원회	○	○					○	○					○	
4) 출산전담전문부서 설치 (혹은 인구정책전담부서)	○	○	○		○	○					○		○	○
5) 영유아 검진 시스템 구축 - 보건소 및 관련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되어 있다고 보는가?	○	○		○	○	○	○	○	○		○		○	
6) 영유아 검진 시스템의 관리체계 - 영유아 검진 시스템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	○	○				
7) 임신 및 출산인프라 구축 정도 (산부인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			○	○	○			○		○		○	○
8) 보건소 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수행 여부)	○	○		○	○	○	○	○	○	○	○			○
9) 특수아 관리 시스템 구축 (정신지체아, 자폐아, 특수지능소유자)	○								○		○		○	○
10) 저출산 관련 지원 조례여부 - 출산, 임신, 양육지원 관련 조례명, 개수 기입	○			○	○	○	○			○	○			○
11) 출산장려정보센터	○										○			○

출산장려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운데에서도 지자체에서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출산관련 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평가,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인구대책 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 TF팀에 해당하는 기구의 부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띈다. 출산정책 위원회의 구성도 인구유출

이 심각하고 출산율저하가 심각한 군 단위 지역에서 오히려 미흡한 점도 인구 대응에 관한 적극적 지자체의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부분이다.

(3) 인프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이는 다음의 <표3-1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자체 출산전담 공무원의 생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출산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구에 대해서는 출산과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역의 인구정책은 각 지역이 처해있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서비스의 수요,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재정여건, 이용자 부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와 조례의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인프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인프라 현황	출산에 미치는 효과			
	효과 있다	효과 없다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필요하다	잠모름 (무응답)
1) 인구대책위원회		5	2	6
2) 저출산고령화TF팀	4	2	2	5
3) 출산정책 위원회	1	3	2	7
4) 출산전담전문부서 설치(혹은 인구정책전담부서)	4		3	6
5) 영유아 검진 시스템 구축 - 보건소 및 관련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되어 있다고 보는가?	4		3	6
6) 영유아 검진 시스템의 관리체계 - 영유아 검진 시스템의 관리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4		3	6
7) 임신 및 출산인프라 구축 정도 (산부인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 군 단위는 실제 의료기관 개소수를 기입/예를 들면 고창군의 경우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음	5		2	6
8) 보건소 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수행 여부)	5		4	4
9) 특수아 관리 시스템 구축 (정신지체아, 지적아, 특수지능소유자)	3		3	7
10) 저출산 관련 지원 조례여부 - 출산, 임신, 양육지원 관련 조례명, 개수 기입	5		2	6
11) 출산장려정보센터	3		3	7

3. 출산정책 효과와 문제점

1)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저출산정책의 지향을 통하여 정책 수혜율이나 국민의 인식변화 및 정책 수용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둘째 저출산정책이 출산력(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 수)에 미치는 효과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 시군에서 실시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추이, 신생아 수,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인구추이는 신생아수의 증가가 합계출산율의 영향인지, 유입인구에 의한 영향에 의한 변화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인구수, 신생아수, 합계출산율이 모두 증가한 지역은 인구유입의 효과이며,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생아 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지역의 출산율의 증가를 나타낸다.

14개 시군 모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진안과 장수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수, 신생아수, 합계출산율이 일률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유입효과가 있는 지역은 없다. 다만, 진안과 임실은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신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4〉 각 자치단체의 인구·신생아수·합계출산율 추이(2006~2008)

(단위 : 명,%)

지역		2006	2007	2008	지역		2006	2007	2008
전주시	인구수	624849	623,926	631,532	진안군	인구수	27,122	30,250	27,230
	신생아수	5,608	6,165	5,853		신생아수	176	269	283
	합계출산율	1,143	1,279	1,232		합계출산율	1.287	1.868	1.904
군산시	인구수	260,989	260,562	263,845	무주군	인구수	25,417	26,361	26,017
	신생아수	2,292	2,513	2,324		신생아수	192	226	206
	합계출산율	1.208	1.372	1.285		합계출산율	1.579	1.841	1.629
익산시	인구수	315,094	313,590	309,269	장수군	인구수	24,209	26,687	23,864
	신생아수	2,773	3,013	2,723		신생아수	156	198	207
	합계출산율	1.221	1.370	1.289		합계출산율	1.323	1.558	1.620
정읍시	인구수	126,249	124,239	122,842	임실군	인구수	31,976	31,952	31,133
	신생아수	880	1,005	851		신생아수	179	239	266
	합계출산율	1.125	1.360	1.200		합계출산율	1.171	1.623	1.876
남원시	인구수	91,265	89,247	88,356	순창군	인구수	32,485	32,035	30,920
	신생아수	708	745	706		신생아수	201	278	223
	합계출산율	1.255	1.413	1.411		합계출산율	1.251	1.703	1.454
김제시	인구수	100,238	97,615	95,807	고창군	인구수	62,030	60,962	60,328
	신생아수	730	763	679		신생아수	346	385	341
	합계출산율	1.296	1.431	1.347		합계출산율	1.243	1.465	1.335
완주군	인구수	83,199	82,972	83,757	부안군	인구수	63,243	61,879	60,872
	신생아수	875	909	877		신생아수	334	403	339
	합계출산율	1.519	1.636	1.611		합계출산율	1.057	1.343	1.169

2)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1)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의 83.0%는 양육지원에 편중, 가족친화제도의 실효성 미흡

전라북도의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은 2010년 78개 사업 3,437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위의 <표3-9>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가지의 핵심 분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가족친화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임신출산지원 사업으로는 <표 3-3>의 5)임신과 출산지원정책 8)국내입양지원이 해당하며 이들의 총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2.2%에 해당하고 있다. 이외에 ■양육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1)영유아양육비지원정책 2)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11)전라북도자체사업이 해당하며 이들의 총사업비는 2,854억 원으로 사업비 규모는 저출산 정책 총사업비인 3,437억 원 가운데 83.0%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세대 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3)방과 후 활동 및 학습지원 정책 6)학교교육 및 빈곤아동지원 정책 9)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지원 정책이 해당하며 이들의 사업비는 50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4.7%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 친화적 지원 사업으로는 4)일과가정의 양립지원정책 7)가족생활 및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정책 10)세제 및 주택마련지원정책 등이 해당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는 구체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정책이 해당되며 이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성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사용은 미흡하며 공기업에서보다는 사기업에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분위기 조성 등에서의 관의 유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대상 범위 확대 필요

저출산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정책과 임신·출산지원 정책 등 주요한 저출산 대응정책사업의 대상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정책이 미흡하여 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수혜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대응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지원으로 출

산수당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인 출산정책으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출산율 제고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상’이나 ‘상징적’인 의미의 경제적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육아 인프라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가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자녀양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도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보육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지원에 대해 통합적인 안내와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지역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3) 결혼지원 사업 소극적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6개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을 실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또한 6개 이외에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업으로 결혼 이전부터 지원하는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인 편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는 결혼지원과 출산연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가구 장기 전세지원·전세자금 우선공급’ 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건강관련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으로 그 대상이 소득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불임지원 등 사업의 내용이 이용자의 욕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의 한계와 장애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불임지원의 경우 정부지원 기준에 따라 3회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5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4) 핵심전담부서의 부재

저출산 대응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양육비용 경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조정 및 통합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들 간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T/F를 구성하여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다. 전라북도는 고령화저출산계에서 출산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기존의 관련부서들이 업무들을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개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컨설팅 지원이 요청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에 관한 지원모형을 개발, 컨설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5)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저출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 정책들을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스터플랜은 지역사회 진단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즉, 마스터플랜 형식의 법제화 노력은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책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이나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관련 정책 중 대부분의 정책들은 일회적인 이벤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평가·환류도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예산과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자체의 역량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제 4 장



저출산대응 정책 사례분석

제 1 절 타 지역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제 2 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제4장 저출산대응 정책 사례분석

제1절 타 지역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 인구경진대회 사례

1)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사례(2008)

〈표 4-1〉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사례(2008)

구분	지자체	주요내용(2008)
대통령 표창	전남 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양육비·출산준비금·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가사돌보미·문화체험·정착교육 실시 ·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카드 발급, 공보의를 활용한 공부방 운영
국무총리 표창	대전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24시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국제화센터를 건립, 외국어교육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
	경기 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녀 이상 고등학생 공납금 및 5자녀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3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및 교육, 자녀양육 지도
	전북 정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직영 : 미혼남녀 만남 주선, 예비부부교실, 합동결혼식,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자녀 아동수당(월 5만원) 지급
	제주 서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100만원) 지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셋째아 임산부 등에 대하여 출산전후 2개월간 한약 처방 지원, 3자녀 이상 병원원 무료예방 접종
장관 표창	<p>대구 북구 : 다자녀가정(4자녀 이상)에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p> <p>대구 수성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베이비시터 전문교육 실시</p> <p>대전 중구 :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영유아 양육서비스 제공</p> <p>울산 울주 : 산모·신생아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p> <p>경기 김포 : 신생아 보험료 지원 및 중학교 운영비 지원</p> <p>충남 서천 :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p> <p>경남 거제 : 결혼·임신·출산주기별 다양한 사업 추진</p>	

2)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사례(2009)

〈표 4-2〉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사례(2009)

구분	지자체	주요정책내용(2009)
대통령 표창	대구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부부관계를 위한 예비부부교육, “임산부 운전 중”스티커 및 열쇠고리 배부,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에비아빠 산후아빠 교실 운영,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아빠와 함께 예방접종일!”, 육아데이 운영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50%할인
국무총리 표창	서울 강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출산양육지원금(둘째아 100만원~여섯째아 이후 3,000만원),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 강남구 거주 12세이하 아동 예방접종 지원 맞벌이 부부 자녀 온종일 학교운영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볼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및 직장남녀 미팅 주선 등
	경기 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R(Recognition(인식), Response(공감), Realization(실현)) 홍보플랜 기획을 통한 주민인식개선 346개소 다자녀 가정 우대 할인 가맹점, 10개소 출산육아용품 구입 가맹점과의 협약을 통한 출산장려 인중 스티커 부착
	강원 영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싹 키우는 파파 할머니” 시책 추진으로 15개 보육시설 670명 아동지원으로 어려운 보육환경 개선
	전남 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내 거주 1자녀 가정 120만원, 2자녀 가정 240만원, 3자녀부터 360만원, 전 출산가정에 출산준비금 3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관련하여 국비 미지원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이주여성 출산·양육·교육·건강관리 체계 구축
장관 표창	<p>서울 용산구 : 「용산 i사랑 교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전국 최초 조례제정 대구 동구 : 한의약 불임치료 지원, 컬러풀 안심보험, 단계별 인구교육 등 인천 계양구 : 다자녀·다문화 가정 의료약제비, 셋째아 이상 출산용품 쿠폰 지원 광주 서구 : 셋째아 임신축하금, 쌍둥이 출산축하금 지원, 다문화·조손가정 지원 대전 대덕구 : 자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배달강좌제,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경기 성남시 : 초등학교 무료급식, 취학전 자녀 양육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충남 아산시 : 가정·결혼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결혼시책 추진 경남 마산시 : 셋째아 출산통장지원금,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가정 용품 지원</p>	

2. 타 지역 우수사례와 시사점

〈표 4-3〉 타 지역 우수사례

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1) 결혼지원	결혼예비학교/충주(2007)	-평생교육원위탁 -행복한 가정만들기, 다자녀의미 등 -예산:1,000만원 -교육수요자에게 풍진항체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건강검진 혜택여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교육프로그램 운영/제주(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을 원하는 기관, 단체, 모임 등 수요자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운영
2) 임신출산지원	신생아양육지원금/강진(2008)	-첫째아연간120만, 둘째아 연간240만원,세째아720만원, 생후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예산:1,079,000천원
	한약첨약지원/제주(2008)	-세째아 임신부에 대하여 출산전후 2개월간 한약첨약지원
3) 보육·교육·보건 서비스	개방형시간제보육서비스운영/대전서구(2007)	-회의참석,병원치료,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지원 -이용료:시간당 2,000원 -예산:운영비8,300천원/교사인건비34,440천원
	공보의를 활용한 공부방 운영/강진(2008)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영유아 양육서비스제공/대구중구(2008)	
	아빠와 함께 예방접종 육아데이운영/대구중구(2009)	
	새싹키우는 파파할머니/강원	
4) 자녀양육지원 - 보험방식 - 인센티브(다자녀) - 장학금지원	신생아건강보험/광주남구, /전남함평/경북성주/전남강진(2007,2008)	-보험보장내용:생명/상해보험.만기환급형 보험,5년납입/10년보장
	다자녀가정 우대/대전서구, 경기성남, 김포, 안산	-상수도요금감면 -공연관람10%할당제 -도서특별대출 -기행업체 할인우대
	-인재육성기금 -장학회/경기화성, 충남서천, 전남강진, 경북의성	-성적우수자, 특기생 -저소득층 자녀 -향토인재발굴 -군출연금+성금 방식
5)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임산부건강교실/전남강진(2007)	-결혼이민자중 임산부에게 산전관리, 고위험임산관리,분만과 진통과정, 산후관리지도 등 -소요예산:300천원
	이주여성출산양육교육건강관리체계 구축/전남장성군	
6) 공공기관가족친화적 직장환경개선	공공기관태교시간마련/대전서구	-본청 및 사업소,관내기관단체 등 -점심시간과 연계하여 휴식포함한 태교시간 마련 -음악감상과육아독서시간 활용
	임산부희망부서 우선배치/경북영주시	-출산전후한 여성공무원
7)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을 위한지역사회분위기조성1	3R홍보플래를 통한 주민인식개선/경기도김포	-인식,공감,실현(Recognition,Response, Realization)
8) 임신출산양육정보망구축	육아코디네이터사업/서울중구	-자녀양육에대한정보제공,대응기술제공/상담실운영
	Mam&Baby Homecare Service	-산부인과없는지역,소아과의료진료 및상담(전화콜)
	출산장려정보센터	-임신출산정보제공 및모자보건서비스제공

타 지역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출산가사돌보미 지원 사업(전남강진), 국제화센터 건립을 통한다문화가정 2세대 자녀교육 지원(대전동구),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직영운영(정읍), 결혼이주여성 및 영유아 맞춤형 건강관리(대구북구) 사업 등이 있다. 한방 등 지역특화 인프라를 이용한 지원 사업으로서는 출산전후 산모를 위한 한약첩약지원(제주서귀포), 한의약 불임 치료지원(대구동구) 등이 있으며, 다자녀 학자금지원 재정마련 사업으로는 다자녀학자금지원(경기안산), 다자녀가정 고등학생공납금 및 대학등록금전액지원 조례제정(경기안산), 남해군인구증대지원조례(경남 남해) 등이 있다.

제 2 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1.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주요내용(2008~2009)

1) “5가지 안심 플랜”에서의 소자화 대책(2008.7)

2008년 7월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금융 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미래에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일하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 것’, ‘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긴급대책-5가지 안심플랜”을 제시하였다.

5가지 안심플랜의 중점과제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실현의 괴리해소”,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정비”,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의 세 가지 목표 하에 <표4-3>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표 4-4> “5가지 안심플랜”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

비전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사회	
목표	1. 국민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실현의 괴리 해소 2.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정비 3.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	
전략	보육서비스 등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정비	1. 인정어린이원의 근본적 개혁 - ‘어린이교부금’ 창설 및 종합적인 재정지원 검토 - 교부금 신청·집행의 일원화 추진 - 인정어린이원 제도개혁 2. 보육서비스 등의 확대 - 대기아동이 많은 지역에 대한 보육시설 긴급정비 - 시간 연장보육 확대 - 충실한 병아·병후아(질병 후의 아동)보육 - 방과후 아동클럽 설치 촉진 - 가정적 보육(보육엄마)의 제도화 3. 육아 불안을 안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 일시 위탁사업 등의 확대 - 사회적 양호체제 등의 확대

비전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발달장애아 지원의 확대 - 각종 육아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4.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보육비 경감 검토 - 육아·개호휴직법의 재검토(충실한 자녀의 간호휴가제도) - 형제자매 같은 보육원 우선 입소 - 주택 지원 등 5.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의 틀 만들기 구축 -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 틀 구축에 대한 검토 6. 아동의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에루 재팬(Kaeru Japan)' 캠페인 추진 -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 어드바이저 양성지원 - 육아·개호휴직법 재검토에 관한 검토(육아기 단시간근무제도 강화 등)

2)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2009.1)

2009년 1월에는 제4기 일본 소자화 대책(2010~2014)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인 소자화대책담당대신의 주관 하에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대책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팀에서는 1995년 엔젤플랜 실시 이후 출산률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마련한다기 보다 이미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를 국민적 이해 및 관심 부족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팀에서는 출산 및 육아 당사자의 관점에서 매회 테마를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팀의 5대 핵심 논의 과제는 ① 일과 가정의 양립, ②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 해소, ③ 유아기 교육·보육의 무상화 등 교육비 절감, ④ 한부모 가정, 장애아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 ⑤ 지역에서의 육아 능력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 <표4-4>와 같다.

〈표 4-5〉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

테마	내용
연애·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대책의 첫 단추는 “연애·결혼”부터 ·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기혼자 중심적임을 반성 · 기혼자 중심적 대책으로는 저출산문제의 근본해결에 한계 · 저출산 문제는 미혼·만혼·비혼화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 · 따라서 연애·결혼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결혼 지원을 위한 국가적 정책 대안(예컨대, 새로운 만남의 장공,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고, 카운슬링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중요
젊은층의 고용과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층이 안심하고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이후에만 초점이 놓여짐 · life-cycle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젊은층 지원정책의 미비 · 젊은층에게 가족형성이 가능한 취업과 경제적 자립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혼이나 출산이후 생애로 연결해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해야 함.
불임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이나 가족형성에 관한 인식 보급 · 만혼화 등의 사회적 변화, 자궁내막증, 무정자증의 증가 등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임 · 특히 불임치료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소프트적 대응 요구 · 학교 수준에서부터 임신이나 불임치료에 관한 정확한 교육과 지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함 · 정책적 대안으로 불임치료의 ‘표준화’제고, 공적시설 및 연구강화, 카운슬링 인재 양성 등이 논의 중임
work-life bal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경제정세에 대응한 노동환경의 변화 필요 · 일과 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요구 · ‘work-life balance 헌장’, ‘일과 생활 양립의 조화를 위한 행동지침’, 부친육아지원책 마련 등이 요구
보육·육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여성의 사회활동 다양화, 육아능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적 관점에서 유아교육 무상화와 관련 보장제도개혁이 요구
한부모가정과 어린이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빈곤과 격차 간의 연쇄 방지 필요 · 어린이 빈곤 문제가 학력격차, 건강, 학대, 비행문제로 연결되는데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 요구(아동부양수당, 교비문제, 세제조치, 공공주택시설, 보육원의 방과 후 대책, 어린이 빈곤에 대한 성인교육 등) · 한부모가정(모자가정, 부자가정)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책 실시
학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 · 취약원조, 수업료감면, 장학금 등을 통한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가정·지역·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전체가 육아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 인제형성(차세대 인재 양성), 지역형성(공원/광장 등 교류공간 형성, 의료/보육지원 등 사회적 서비스 충실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지역의 육아 지원기능 강화
소아의료·주산기 의료·병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병아 발생 시 부모의 불안 해소 및 병아 보육에 대한 대응 충실
기존 회의내용의 종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1%를 어린이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시대변화로 가족, 지역, 직업영역이 담당해 온 결혼이나 육아지원기능이 저하되면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재구축 요구 · 국민적 관심 부재, 대처방법 미비, 재원부족(가족관계 시책 예산)을 해소 요구

2. 일본 저출산 대응정책의 시사점

2010년은 우리나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로서 2011년부터 새로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된다. 이러한 제 2차 기본계획에는 1차 기본계획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은 교훈과 반성을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형 새롭게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관련 이슈를 정책 내용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최근 저출산 정책 동향은 우리나라의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아직 출산률 회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출산정책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구조 개선과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출산률 회복은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최근 정책은 임신 이전의 학교교육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고 있다. 학교교육 분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족관, 자녀관, 성역할관을 변화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홍보정책까지도 전략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과제이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엔젤플랜을 제시한 이래 약 15년 남짓의 세월이 흘렀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의 최근 저출산 정책 동향이 잘 지적해주고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개선 방향

제 2 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세부추진시책(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개선 방향

1. 정책대상의 문제

1) 출산지원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확대

저출산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정책과 임신·출산지원 정책 등 주요한 저출산 대응정책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미흡하고 이로 인한 낮은 체감도가 문제이다. 중산층 가정은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복지 사업적 성격이 강한 현재의 출산지원 정책에서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저출산은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에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목표로 일부 사업을 시행(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셋째자녀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하고 있으나 보편주의적 성격의 사업일지라도 그 범위나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다.

2) 맞벌이부부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 미흡

현실적으로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전업주부보다 어려운 일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문화나 직장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 등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맞벌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수준이 일부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 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아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함으로써 약 5만 명에게 월 최대 27만원의 추가지원을 하게 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산정 시 맞벌이 가구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 대상자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 배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여론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율을 조사한 결과(공선희 외, 2008) 맞벌이 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정책인지도와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저출산 정책이 취업여성보다 비취업 여성에게 중점을 두어왔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출산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3) 기혼자 중심의 정책에서 미혼자, 학생층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

본 연구의 제 3장 3절의 일본 출산장려 정책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제 4기 일본 소자화 대책(2010~2014) 기존의 일본 출산장려 정책이 지나치게 기혼자 중심적임을 반성하고 있다. 즉, 기혼자 중심의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저출산의 문제는 만혼과 비혼화, 미혼 등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 대책회의에서는 1995년 엔젤플랜 실시 이후 일본 출산률에 별 다른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미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소자화 정책은 어린이 빈곤과 격차간의 연쇄방지, 학교 수준에서부터 임신이나 불임치료에 관한 정확한 교육과 지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전 생애주기에 맞추어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이 괄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도 일부 기혼자 중심의 단기적 처방이 아닌 학교 정규과정 등을 통해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준비와 가족의 의미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적인 관점에서 자궁내막증, 무정자증의 증가 등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의 보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정책은 기혼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전 교육과정에서 가족형성에 대한 준비와 가치관, 자기 몸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생애주기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 결혼 전 단계, 임신출산 단계, 자녀양육

단계에 따라 정책의 특성이 다를 것이다. 이니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정책들은 자녀양육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혼과 자녀 가치관에 관한 교육은 그 특성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출산을 감소는 가족계획의 성과라 볼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한 우리 사회는 이제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치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교과목 이외에도 특별활동 등을 활용하여 자녀출산과 양육에 관한 불안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 가정의 임신 및 출산·육아지원

다문화 사회 전개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들의 2세대 문제가 사회이슈의 핵심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영아를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이들에 관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57.1%가 만 6세 이하이거나 취학 전 아동관련 시책이 포괄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부처의 협력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중매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단속이 강화되면서 필리핀에서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국적이동과 더불어 어린 여성들이 결혼이민으로 오는 경우가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 빈곤이 의료와 보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출산 이후에도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과 물자의 궁핍은 자칫 결혼의 와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들 여성의 국적이 워낙 다양하여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의 경우 이들이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도 결코 용이하지 않은 문제 점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과 임신 출산에 필요한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책효과와 실효성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출산지원 사업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사업 성격이 강하고 지원규모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혼과 비혼현상이 두드러지고 개인의 경력추구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출산대상 가구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자녀가구를 ‘포상’하는 방식의 출산대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시적이고 지자체마다 다른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도 역시 출산에 대한 상징적인 ‘포상’ 이외에 자녀양육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이 서비스 혹은 지원의 양과 질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실제 도민들의 삶이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그 대응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 대응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정책의 열거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저출산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기초로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 틀을 기본으로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완하거나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전라북도 정책방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 대상자의 현실성과 우선순위 고려: 낳고 싶어도 못 낳은 가정 지원하기

기혼 무자녀 가구의 출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0만쌍, 기혼여성의 불임률이 13.5%로 불임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임치중인 부부 중 치료중단예정의 이유는 26.6%가 비용부담이며, 불임치료비용부담이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구가 83.2%로 나타나고 있다(2009, 보건복지가족부). 현재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시술비 지원이 저소득층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재 월 평균소득 448만원(2인가구 기준) 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씩, 최대 3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0만원씩, 3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불임부부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에 대한 긴급성과 위급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액의 총량 가운데 20%는 일반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조정 할 필요가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 회수를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크지만 정책의 효과성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은 동결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출산을 원하는 가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의 지속성 확보

현재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철분제(모든 임신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20주 이상)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1인 1개월 기준, 5개월 분) 하는 보건소에 가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 카드(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형태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 병 지원만 1회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다. 보건소이외의 일반 산부인과 병 지원도 철분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 병 을 확대하고, 고운맘 카드의 1회 사용금액을 상향조정반 산, 출산이후에도 기저귀, 분유편이같은 육아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 제약처를 점차 확대해 나갈병 을 제안한다. 즉, 출산원만 1일 회적, 상징적인 사업있으며 지속성을 갖되 우리 사회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며 환경과 지원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 할 수 있다.

3) 다자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아부터 지원 확대

현재 다자녀 가정이란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출산장려 정책도 셋째아 낳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2자녀를 이상적인 자녀수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정서상, 3자녀 이상을 낳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와는 달리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의 출산율도 각각 1.96명 1.8명으로 대략 2명 낳기에 근접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이상자녀 수로 2.4명을 생각하고 있는 자녀출산관은 향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 시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두 자녀 낳기 캠페인과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전라북도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

전라북도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 틀을 기본으로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완하거나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지원 사업에서의 일부 개선사항과 전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미흡하거나 정책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전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자녀교육비지원(대상확대와 차등지급을 통한 효과성 고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던 셋째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사업은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현금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현행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의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미래 가임세대에게는 교육적인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전라북도 청년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정책으로 사려되어 진다.

다만, 사업초기 예상했던 셋째자녀 수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대상을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일과 지원액을 둘째아와 셋째아 대비 차등지급하는 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부재

출산장려정책을 life-cycle적 관점에서 볼 때 포괄적인 아동정책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정과빈곤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라북도가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대상 중의 하나이다. 저소득층 아동관련 지역아동센터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고 저소득 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은 어린이 빈곤 문제가 학력격차, 건강, 학대, 비행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대상의 아동에 대한 학습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민-관 주도로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모 됨의 행복함과 미래세대
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환경조성에도 정책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

3) 출산관련 인프라 미흡지역에 대한 지원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북의 동부권 지역은 의료 및 보건, 복지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는 출산과 가임
기 여성이 수적으로 열세한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이
부재한 상태이어서 접경지역으로의 원정출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이면서 저소득층 밀집으로 인하여 정책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농업의 특
성 상 산후조리 및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의 귀농인구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출산과 양육의 수월성이 존재하지 않
는 농촌에 대한 인구유입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동부
권 취약지역의 출산 인프라 구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
련해서는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에 산후조리 기관을 두고 전문
산후도우미를 배치하여 지역민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취약(장기적 사업필요)

출산정책은 장기사업과 단기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과 가족
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으로 지속
적인 사회분위기와 환경 조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해당 한다.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사
회제도적인 체계강화에 주력한 부분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
직 제도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조성으로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확산,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출산 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이 해당한다. 또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사업은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 등이 해당하고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현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족친화적 도시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의 5.26%에 불과하며 예산 지원도 0.01%에 해당하고 있다.

가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장기간에 걸치는 비가시적인 사업에 해당하지만 지역주민의 욕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이야말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전북지역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많은 예산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5) 청년유인정책 필요

출산장려정책을 life-cycle적 관점에서 볼 때 포괄적인 청년정책이 부족한 것도 전라북도 출산대응 정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청년층은 미래의 가임세대에 해당하지만, 취업과 주택마련 등으로 결혼이 미루어지기 쉽고 이로 인한 만혼화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취업과 결혼에 대한 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지역의 젊은 청년층이 지역을 외면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고령화의 가속화와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통하여 취업과 결혼이 지역내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대안모색이 시급하다.

애를 들었 경기도 안산시 '원더커플만들기 해피초이스'라는 사업(결혼회사 듀오연계)을 통해서 성사된 커플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제공 가능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적극적인 청년인구 유입정책으로 우리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제 2 절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

〈표 5-1〉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1

정책영역	세부 추진시책(안)	사업내용	정책제언 근거
1) 제도 및 사업 개선	셋째자녀 대학입학 등록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교육비 부담경감으로 출산의향과 미래 가임세대에 대한 교육효과 등 긍정적인 시책임 -전라북도는 본 사업을 전국최초로 시행하면서 2,320명 정도의 인원예산과 2,700,000천원의 예산을 수립, 그러나 시행단계에서는 셋째아 자녀가 수가 줄어 대상자 발굴이 어려움에 따라 800명에 1,400,000천원을 지원함 ●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아의 출산도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둘째아부터로 변경하되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둘째아는 입학금 지원, 셋째아 이상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일부 지원 하도록 함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개선 필요
	난임부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난임부부 지원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저소득지원 사업임 -현실적으로 저소득계층은 생계로 인해 자녀출산에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 사업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저소득자와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 있음 ●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일반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사업예산 비중을 편성 -저소득층: 일반인=8:2의 비율로 난임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제도불합리 개선
	산모신생아 돌보미파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사업은 월 평균 50%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서비스를 배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임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자부담(92,000원/월평균소득 40%이하 가정은 46,000원)이 있어 일부 저소득계층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지원 사업은 셋째아이 출산부터는 소득기준 지원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 -다둥이가족을 위한 지역특수시책으로 추진 	정책패러다임변화: 출산정책의 사각지대 중산층 지원 및 보편적 사업으로 전환

〈표 5-2〉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2

정책영역	세부 추진시책(안)	사업내용	정책제언 근거
2) 인식 개선 사업	출산공무원 우대정책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근무평점 평균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임금, 승진과 같은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음 -출산육아기 여성친화적인 평가 및 승진사례로 대학교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시행 중 ex)출산육아휴직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실근무 기간으로 실적평가 인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출산육아기에 승진·업적과 관련된 심사기간 유예(부산대학교)/출산육아휴직 복귀한 여성에게 평가 제외를 통해 평균등급 부여(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다수 국책연구기관) -출산관련 비예산 사업으로 공공기관 추진 시, 정책선도의 상징성과 파급효과 기대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여성에게 희망부서 우선배치를 통하여 직무의 과도한 스트레스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귀여성 공무원은 당해년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을 부여하도록 함 	장기추진사업 비예산사업 소규모 예산사업
	도청 옥외(남성)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과 양육에 대한 남성(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에 맞추어 각종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 및 남성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음 -실질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기대효과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남성들의 인식개선 차원에서의 상징성이 더 많음. 즉 인식개선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효과임을 고려,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사회분위기 차원에서의 중요성 내포 -출산관련 소규모 예산 사업으로 공공기관 추진 시, 정책선도의 상징성과 파급효과 기대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들의 사용이 많은 도청 옥외 남성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정책영역	세부 추진시책(안)	사업내용	추진배경
	인구교육 및 교육 강사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인구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회적 행사로 진행되고 있음(수능이 끝난 학생 대상으로 실시) -인구교육은 장기간의 인식개선을 통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될 필요 있음 -인구교육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 대상, 예비부부, 청년, 군인 등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성교육처럼 의무교육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함 -자궁내막증, 무정자증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학교수준에서부터 임신이나 불임치료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지식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학교교과 과정으로 반영하는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음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양육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학교커리큘럼에 반영, 학령층에 맞는 교재구안과 전문강사를 통한 체계적 교육실시 및 운영 -“좋은 내 자녀만들기”(전주시보건소 소장교육내용) 등의 프로그램 보급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추진 -인력뱅크를 위한 강사양성, 파견 등 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 	
	아빠 육아참여 (예방접종을 아빠와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개선 등으로 육아에서의 아빠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육아는 엄마의 몫이 되고 있음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을 아빠와 함께 했을 경우, 영유아 신체발육에 관한 검진 및 아빠의 기초건강 검진 무료 실시(ex: 대구중구실시(2009)) -아빠의 육아지수 확인: 매월 셋째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데이 임. 매월 도청 홈페이지에 아빠의 육아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 당첨을 통해 1~2인정도의 경품행사 운영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2주정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2주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가장 힘든 시기임) 	

〈표 5-3〉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3

정책영역	세부 추진시책(안)	사업내용	추진배경
	결혼이주여성 임신, 출산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 배경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검진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임신·출산·예비부모를 위한 사업은 없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의 검진율과 자녀의 예방접종율은 낮은 편임 -결혼이주여성 관련 어떠한 사업도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어(즉, 외출을 제한하는 가정분위기) 이용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접근방식이 필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의 안정 및 가족형성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필요 ● 지원내용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 가족형성에 필요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14개 다문화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특히 언어소통의 문제를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 아이 양육에 관련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국출신의 멘토를 연결하도록 함 	시군단위 지역맞춤형 사업
3)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산후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배경 -맞벌이 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임신·출산·육아 등 돌봄 노동에 대한 노동수요는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임신·출산·육아관련 사회서비스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분야를 집적화 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 있음 ● 지원내용 -여성의 산후조리, 신생아의 돌봄, 이유식, 친환경 아기의류 등 여성친화적 일을 연계, 집적화 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여성기업가는 매우 부족한 상황 이어서 여성일자리 창출로도 의미가 있음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과 연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배경 -동부권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출산관련 의료 인프라의 취약으로 접경지역으로의 원정출산이 많은 편임 -산후조리원이용 수요는 많으나 고비용으로 인한 차상위계층 등 정책 사각지대 존재 ● 지원내용 -남원 및 진안 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운영 -산후돌봄비 배치를 통해 다양한 수요(주말도우미, 야간도우미)에 대응하는 농촌적합형 산후돌봄비 운영 (농촌 여성일자리 창출) -경북의 성주군 사례처럼 Mam&Home care system 운영을 통해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소아과진료 및 상담(전화콜)지원 	출산인프라미션동 부권 취약지역 지원 사업

정책영역	세부 추진시책(안)	사업내용	추진배경
	지역아동센터의 전문가 은퇴자 파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 정책이 신생아부터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출산지원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은 편임 -일본이 어린이빈곤과 격차간의 연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현상을 수렴할 필요 있음 -특히 빈곤아동의 학력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주요 대안 중 하나임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부족으로 아동을 학습적, 정서적으로 돌보아 줄 선생님이 필요하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도 의미 있음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회사원, 교수, 의사 등 전문 직종에서 은퇴한 자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 활동을 하도록 함 	빈곤아동 지원 사업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강경숙 외, 200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3호
- 강관혜, 2004, “저출산과 보육서비스”, 2004년도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가족복지학회
- 공선영 외, 2006, 「경기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김두섭 외, 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지 외, 2009, 「부산시 저출산 원인과 대책」,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복지개발원
- 김한곤, 2006, 「경북지역 출산율 향상을 위한 방안연구」,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김혜원 외, 2007,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원, 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노동부
- 박은미, 2007, “저출산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복지행정연구 제23집
- 박재규, 2009, 「경기도 저출산 및 출산지원정책 현황」,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손홍숙, 2005,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1호
- 신운정, 2007,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정선, 2009,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결혼장려 및 불임부부 지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 윤용중·정상훈, 2009,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국회예산정책처
- 유계숙, 2009,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2호
- 유해미, 200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이미원, 2007, 「대구 저출산 원인분석과 대책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이상신, 2009,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26권 제3호
- 이삼식 외, 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7, 「출산·양육 분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8,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

연구원

_____,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컨설팅」,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2009,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경 외, 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정민자 외, 「

조애지,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주은, 2009,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채구묵, 2005,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학, 57(3)

최경수, 2009,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shadow cost)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한국개발연구원

한영숙, 2009, “가임 연령 미혼 남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과 차이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제57집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결혼·임신·출산·육아지원 등, 보건복지가족부
경남발전연구원 신청사 개청기념 토론회 자료집, 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남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모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2010, 여성이여는 미래



目 次

부 록

1. 타 지역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 결혼지원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목적 및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부산 동래	미혼남녀 만남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제공 • 대상: 동래구 거주 미혼(25~35세)남여 27쌍, 5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주최: 동래구청 • 사업: 전문진행자 초청 • 예산: 300만원 • 만남에서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예식비 할인
	인천 서구	선남선녀 만남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주관 • 대상: 8개 유관기관 미혼 남녀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주최: 서화회(유관기관단체장모임) • 사업: 레크레이션과 화합의 장 운영 • 예산: 400만원 • 1회성 사업, 연계프로그램 없음
	충북 충주	결혼 예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혼남녀의 건강한 결혼준비와 행복한 결혼 생활유도 • 대상: 관내 미혼 남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주최: 충주대 평생교육원 위탁 • 사업: 건강한 이성교제, 결혼의 조건, 행복한 기정만들기, 디가족의 의미 등 • 예산: 1,000만원 • 교육수료자에게 풍진항체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건강검진 혜택부여
2008	전북 정읍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혼남녀의 만남주관과 부부로서의 결혼준비 및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 대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35세이상 미혼남녀, 여성의 경우 지역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정읍시 사회여성과 • 사업: 미혼남녀 만남주선, 예비부부교실, 합동결혼식,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예산: 비예산 • 회원등록 및 상담, 만남주선(국내), 대도시 저지단체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음면동 및 사회단체 순회홍보 등
	제주 서귀포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대상: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 부부교육 • 교육을 원하는 기관, 단체, 모임 등 교육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남 거제	결혼, 임신, 출산 주기별 다양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결혼생활의 전반적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 • 대상: 예비부부,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보건소 • 사업: 셋째아이이상 출산용품 구입비 지급 등 • 예산: 1,500천원(5만원당 거제사랑상품권) • 관내 거주 셋째아이이상 출산가정대상 1회한하여 출산용품 구입비 지급
2009	서울	신혼부부 가가 장기전세 주택·전세자금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 내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서울시 • 사업: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장기 전세자금 혜택부여 • 예산: 비예산
	서울 강남구	직장남녀 미팅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혼남녀 만남의 장 주선 • 대상: 강남구내 거주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만 25세 이상의 미혼남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강남구청 • 사업: 미혼남녀 50명 참석, 8커플 결실 • 예산 : 3,040천원
	충남 아산	결혼비용 경감 및 결혼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결혼친화분위기 조성 • 대상: 온라인 결혼지원사이트 등록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아산시청 • 사업: 결혼업체 할인가맹점 운영, 무료예식장 운영 및 무료 결혼주례 등 • 예산: 비예산

(2) 임신·출산 지원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목적 및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전남 목포시	예비엄마아빠되기 체험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지역 전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주최: YWCA 등 사회단체와 연계 • 주요내용: 임신기간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부모 안락식 및 기년 촬영/산부인과 의료상담 및 진료 • 예산: 1,000만원 • 사업기간: 2011년까지
	경북 경주시	신혼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임신양육의 관심도 증진,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결혼초기 신혼부부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주최: 보건소 • 주요내용: 아름다운 신혼설계, 자녀출산,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성장발달 촉진법 • 예산: 200만원
2008	전남 강진	신생아 양육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양육지원금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도, 군, 읍사무소 연계 • 주요내용: 첫째아연간120만원(매월10만원씩), 둘째아 연간 240만원(매월20만원), 720만원(연간 420만원, 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 예산: 1,079,000천원
		출산용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출산용품지원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보건소 • 주요내용: 출산용품3종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 제공 • 예산: 43,080천원
	출산 준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출산준비금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10개월째 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보건소 • 주요내용: 43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지원 • 예산: 86,000천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강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보건소 • 인원: 430명 • 주요내용: 초음파검진비 1회당 2만원씩, 3회까지 6만원 지원 • 예산: 25,860천원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도, 군, 읍사무소 연계 • 주요내용: 296명 대상으로 30만원 지원 • 예산: 88,800천원 	
	제주 서귀포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1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제주 서귀포 거주 여성 장애인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제주 서귀포 • 주요내용: 제주 서귀포 거주 여성 장애인 임신부 출산 장려금 100만원 지원
대구 수성	한약첩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셋째아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제주 서귀포 • 주요내용: 제주 서귀포 거주 여성 셋째아 임신부 등에 대하여 출산 전후 2개월간 한약 첩약 지원 	
	출산 육아용품 무료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육아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해당지역 신청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대구 수성구 • 주요내용: 유축기, 보행기, 유모차, 체온계등을 구입하여 신청 주민들에게 대여 	
	베이비시터 전문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육아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해당지역 신청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대구 수성구 • 주요내용: 베이비시터 교육 및 파견청구 운영 	
2009	대구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운전 중 스티커 및 열쇠고리 배부		
	출산축하금 지원			
	예비아빠 산후아버지 교실운영			
경남	찾아가는 산부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지역의 임신부 지원 • 대상: 군지역 임신부(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경남도청 • 내용: 이동 표준산전진찰(1인 총13회) - 산전기본검사, 태아기형아, 풍진, 초음파검사 등 • 예산: 987,000천원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목적 및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부산 북구	적절한 임신부 예약 진료제	• 대상: 관내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부산 북구청 • 내용: 매우 화요일 야간진료,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임신 기초검사, 기형이검사의뢰, 임신 관련 상담 등 • 예산: 비예산
	강원 동해	임산부 분만 전 검사 쿠폰 지원	• 대상: 관내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동해시 • 내용: 임신부 34~36주에 무료쿠폰 발급 • 예산: 10,500천원

(3) 임신부 편의 지원

〈표 3-15〉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임신부 편의 지원 사례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부산 동래구	임산부 우대 및 배려	민원실 등 방문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실 내 임신부 전용창구·대기석 설치 • 지역업체와 연계하여 임신부 우선 계산대 설치, 도우미 운영, 임신부 구매물품 배달서비스
	부산 연제구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민원실 등 방문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1층 민원실 내 전용창구 설치
	부산 해운대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민원실 등 방문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방문시 신속한 안내, 접수번호 없이 우선 민원처리 • 임신부 전용석 마련 • 구청내 민간인 대상 수용방 설치
	대전 서구	임산부 우대창구운영	민원실 등 방문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 운영 • 접수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처리 및 택배서비스 병행
	대전 중구	민원실 임신부 전용 창구 개설	임산부 및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실내 임신부 및 어르신을 위한 전용실 개설 및 행정서비스 우선 지원
	경기 화성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승용차요일제 면제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사실이 확인되거나, 차량에 유아가 탑승하였을 경우 공공기관 출입 무조건가능 •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용되는 사례없도록 조치
	경북 의성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및 영유아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지정
	제주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및 유아동승 차량에 한해 요일제 면제차량증명스티커발부
2008	전남 강진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 발급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20회씩 10개월간 교통비 지원 • 10개월째 임신부에게 출산 준비금으로 20만원 지급(출산 축하금 별도지급)
2009	대구 중구	임산부 공영주차장 50% 할인		
	부산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임신부 민원처리 배려 • 대상:임 산부 민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부산시 • 내용: 민원창구 중 1개소를 임신부전용(우대)창구로 지정, 임신부 민원 처리 배려 • 예산: 비예산

(4) 보육·교육·보건 서비스 지원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대전 서구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범운영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0-7세 아동 중 이용희망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식, 병원치료, 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 • 운영기간: 2007. 2~12 • 운영장소: 2개소 • 이용료: 시간당 최대 2,000원 • 예산: 운영비(8,300천원)/교사인건비(34,440천원)
	경기 성남	운영기간: 2007.	저소득층 및 3자녀 이상 가정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연합회와 협조로 저소득층과 3자녀 이상 가정 아동에게 무료 수강 및 학원비 할인 • 주최: 성남시 학원 연합회 • 사업시행 시기: 2007. 5~ • 소요예산: 비예산
	충남 청양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관내 12개 보육시설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유아기의 신체 발육촉진 및 건강검진실시로 적정 성장 발달을 도모, 건강위험요인 사전 예방 • 지원대상: 관내 12개소 보육시설 영유아 • 지원액: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에게 무료건강검진 • 예산액: 7,070천원
	제주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관내 보육시설 314개소 아동 14,26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유아(신장,체중 등 8개항목) • 검진방법: 보육시설 방문검진 • 운영기간: 2007. 4~11 • 소요예산: 60,000천원(영아 1인당 4,000원, 유아 7,000원)
2008	전남 강진	공보의를 활용한 공부방 운영		
	대전 동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구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24시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부담 경감	국제화센터 건립, 외국어교육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	
	경기 안산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및 교육		
		자녀양육지도		
	전북 정읍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	셋째 이상 취학 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이상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 없이 월 5~20만원씩 지급
		저소득층자녀 아동수당(월 5만원)지급		
	제주 서귀포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3자녀 이상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대구 북구	다자녀가정(4자녀이상)에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		
대전 중구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영유아 양육서비스 제공			
경기 김포	신생아 보험료 지원 및 중학교 운영비 지원			
2009	대구 중구	남성화장실 기저귀교환대설치		
		아빠와 함께 예방접종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및 접종 대상자의 아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예방접종 시행 및 등행아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무료검사 실시
	서울 강남	셋째아 건강보험료지원	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자녀 이상 또는 저소득 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구 자녀들을 위한 건강보험 기입 및 보험료 납부
		12세이하 아동예방접종지원		
		맞벌이부부 자녀 온종일 학교 운영 및 방과후프로그램운영		
강원 영월	새싹키우는 파파할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보육시설 670명아동지원 	

(5) 보육·교육·보건 서비스 지원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부산 연계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난방비 지급	• 영유아보육시설 88개소, 유치원 15개소	• 보육시설 1개소당 400천원, 유치원 300천원 • 예산: 40,500천원
	인천 동구	보육시설 평가인증비 및 살균소독비 지원	• 2007년도 평가인증참여보육시설 • 살균소독비: 동구 관내보육시설 30개소	• 평가인증비 21이상(30만원), 21인미만(25만원) 지원(총5,000천원) • 살균소독: 공립 연3회, 이외 연1회이상(총8,800천 원)
	대전 서구	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	• 관내 보육시설	• 20인이하: 200천원, 30인미만: 350천원 30인이상: 400천원, 40인이상: 450천원
	경기 성남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 보육시설 영아, 장애아, 야간보육아동	• 소요예산: 828백만원(1일 500원) • 추진실적: 2006년 5,161명
	경기 남양주	보육시설 전기 안전점검비 지원	• 보육시설 중 인가일 기준 1년이상의 시설 375개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리지점에서 전기안전점검 • 소요예산: 16,000천원
	경기 화성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 관내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325개소	• 민간보육시설 60만원, 가정보육시설 40만원
2008	전남 목포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 만5세이하 보육시설 이용영유아(197개소 2,500명)	• 보육시설 이용 3세 이하 영아에 월4,500만원 연 6개월 간식비 지원(예산 75백만원)
	서울 은평	영아간식비지원	• 매월 1일 기준으로 보육시설에서 보육중 인 만2세 이하 영아	• 매월 1인당 간식비 1만원 지급
	부산 진구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보육시설	• 규모에 따라 시설당 연500~1,000천원 지원
	부산 해운대	신규보육시설후 견인제운영	• 신규인가 보육시설	• 신규인가 보육시설과 기존운영 보육시설간 후견 인을 정하여 신규시설 운영지도 • 소요예산: 비예산
	부산 강서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9, 민간보육시설9, 직장 1개소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인천 부평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지원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 종사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2회 종사자 교육, 연 1회 연찬회 개최 • 예산: 9,675천원
	인천 옹진	낙도 거주 영유아 교재 지원사업	• 인천시 옹진군내 자도 거주 및 어린이집 이 없는 거주 영유아 46명	• 1인당 분기별 120,000원 지원
	광주 교육청	대학생 멘토링 지원	• 관내 대학생	• 저소득층 학생 개별지도, 봉사활동 점수부여 및 교통비 지원 • 소요예산: 35,000천원
	충남 청양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료 지원	• 관내 어린이집 650명	• 어린이집 원아들의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10,000원
	2009	제주	보육시설종사자능력향 상비 지원	• 보육시설 전 종사자
전북		보육시설취사 도우미파견	• 보육시설	• 하루 5시간 급간식 제공 및 취사보조 • 소요예산: 280,000천원(100명)
강원		우수 보육시설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 보육시설 215개소	• 우수 보육시설에 현장체험 및 야외학습체험 활 동 지원(개소당 1,000천원)
경기 성남		대학생과 함께하는 열린 배움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10개소	• 학습부진아 학습지도 및 아동상담 등 • 소요예산: 비예산
경기 군포		보육시설 안전점검 및 소독비 지원	• 전체 보육시설	• 소요예산: 28,000천원
인천 남구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 관내 민간/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 소요예산: 264,720천원
부산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 지원	• 영아보육시설 66개 시설	•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66명, 시설당 1명 지원 • 소요예산: 172,800천원
서울 강북		안심 보육모니터링 운영	• 총 10명으로 구성(공무원 5명, 학부모 5명) 모니터링단이 매월 1회 보육시설 지도 점검	• 소요예산: 2,250천원

(6) 자녀양육 지원

가. 보험방식 양육지원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인천 옹진	영유아단체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도 1월1일이후 출생아 보험기간 동안 관내 출생등록 신생아의 경우 계속 관내 거주할 경우 5세까지 보장, 출생일로부터 1년단위로 자동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 암진단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식중독, 골절진단, 화상발생위로금, 자녀 책임 보상 소요예산: 총 17,000천원
	광주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1월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보장내용: 생명/상해보험, 만기환급형 보험, 5년납입/10년보장 소요예산: 34,000천원
	전남 함평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 함평군에 거주하면서 05년도 1월이후 출생한 신생아 전원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후 12개월 미만 전입한 아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매월 22~40천원 범위내에서 5년납입 -10년보장 혜택, 만기시 환급금, 군세입조치 소요예산: 166,800천원
	경북 성주	성주 아기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중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중인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 모성사망, 장애출산위로금, 저체중아 육아비용 -신생아: 모든 담보 -보험기간: 2007.1.1~2008.12.31 소요예산: 약25,000천원(1인당 184,000원×135명)
2008	전남 강진	신생아건강보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소요예산: 약 18,000천원
2009	서울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파구 셋째이상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월): 남아 12,330원, 여아 11,540원 -보험형태: 5년 납입 10년 보장 -보장내용: 암진단비 및 수술비, 각종질병 및 재해입원비, 학교폭력위로금 등 소요예산: 141,000천원
	울산 울주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도 이후 3자녀 이후 출생아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아 복지보험 가입 -1인 월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소요예산: 144,000천원
	강원 춘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중 1명이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2007.6.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쌍생아 이상과 12개월 이하의 입양아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아부터 만10세까지 1인당 월2만원까지 5년간 지원하며 10년간 보장받은 만기시 원금은 시 재정으로 환급됨 소요예산: 481,920천원

나. 인센티브 방식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대전 서구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3인이상)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관람 및 회원모집시 다자녀가정에 10%우선 할당제 도입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단체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신설 프로그램 -주민대상 교육 또는 연극 • 비예산사업
	경기 성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3자녀 이상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녀 이상 가정에 도서 특별 대출서비스 • 문화교실 접수시 3자녀 이상 여성 수강 신청 우대
	경기 김포	다자녀 가정 우대할인 사업	김포시 거주자로 둘째가 2001년이후 출생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카드발급을 통한 가맹업체 할인우대 • 할인업체: 음식점, 미용, 개인택시, 자동차 경정비, 학원, 주유소, 사진관 등 • 경기도 1사랑 카드와 차별적으로 둘째아이이상부터 지원 • 소요예산: 5,000천원(카드발급비)
2008	경기 안산	3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경기 안산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요금 감면
2009	경북	다자녀우대카드제 실시	도내 1995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를 둔 다자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에 다자녀우대카드(다복가정희망카드)발급하여 각종 할인 혜택 제공
	경북 의성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관내거주 4자녀이상 가정(자녀 1명이 8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가정, 15만원씩 4회 지급
	경북	경남다누리 카드발급	1996.1.1일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가맹업체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각종 혜택 제공 • 소요예산: 비예산
	서울	다자녀가족 양육지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세 미만의 셋째아 이후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 -가정내 보육아동: 양육수당 1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의 50%지원 • 소요예산: 40,400,000천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우선공급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자 중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서울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다자녀(3자녀이상)가구로서,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인 세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액: 최고 56백만원(전세보증금의 70%)이내 • 대출조건: 연리2%,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다자녀직원 인센티브지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무주택공무원 전 세자금 지원자 선정시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이 어려운공무원 지원시 무주택자로서 다자녀 가정에 우선지원 •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시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다자녀 시설이용요금 할인혜택 부여	저출산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할인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3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공공시설내 체육·문화강좌를 수강 할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하여 수강료의 50%를 할인 • 소요예산: 비예산
	부산	다자녀가정 지하철 요금 할인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의 성인 및 청소년 지하철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지하철 이용시 성인기준 50%할인 • 소요예산: 비예산
다자녀가정 전료비 감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전료비(양방, 한방)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다. 장학금방식 양육지원

연 도	지사체	기금명칭(지원근거)	추진내용	비고
2007	경기화성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자녀 등	2006년
	충남서천	서천사랑장학회	성적우수자, 특기생 등	1999년(군출연금+성금)
	전남 강진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저소득층 자녀, 재능우수자 등	2005년 설립
	경북의성	의성장학금 기금	향토인재발굴 및 육성	
2008	경기 안산	다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이상 고등학생 공납금 및 5자녀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2010년까지 셋째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예정
2009	광주 동구	사회복지지금	관내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경기 안산	다자녀가정지원조례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생 공납금 및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충남 서천	서천사랑장학금	우수, 복지, 특기,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경남 남해	남해군인구증대지원 조례	중, 고, 대학생으로 군 전입 및 셋째 이상 자녀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학교 수업료 전액(분기별 지원)지원 및 상품권 지급	
	경기 부천	부천시장학사업	성적, 예체능우수, 저소득층자녀에게 안정적인 학업지원	

(7) 다문화가족 지원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인천 남구	여성결혼이민자교육 '나와 너 그리고 우리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안정적 한국생활 조기 정착 및 생활환경 조성 • 대상: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자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와 학산문화원네트워크, 인하대동아리회원간 멘토 • 우리말배우기, 한국생활문화체험 • 연극으로 나누는 생활이야기, 관계치유프로그램 • 가족캠프 • 운영기간: 2007.7~10 • 소요예산: 10,000천원
	경기 성남시	결혼이민자국내적응 프로그램	결혼여성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의 소통과 이해증진교육 • 한국문화의 이해와 생활예절실습 등 • 추진체계: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 외국인 주부 친정어머니 모시기 결연사업 별도 추진
	강원 동해시	임신에서 육아까지의 맞춤형 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 중 임신부 및 유지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 도우미 파견 • 현장견학 및 관내 공공기관 견학 • 아기용품 만들기 • 소요예산: 7,071천원
	전북 정읍시	결혼이주여성멘토링	결혼여성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사: 월1회 • 대상: 30명 • 내용: 이주여성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 주관: 공직자 가족봉사회
	전남 강진군	결혼여성이민자 임신부 건강교실	결혼여성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여성 이민자 중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고위험 임신과 관리, 분만과 진통과정, 산후관리지도 • 소요예산: 30천원
2008	전남 강진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가사돌보미, 문화체험, 정착교육실시		
	충남 서천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2009	전남 장성군	이주여성 출산양육 교육건강관리체계구축		
	대구 북구	다문화 맞춤형 건강관리	결혼이민자 및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검사를 통한 방문관리대상자 등록, 임신부영양아관리, 영양관리지도 • 소요예산: 5,000천원
	울산 중구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실시	관내 결혼이주여성(40명*44회), 연인원 1,7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컴퓨터, 한글기초, 인터넷활용 등 교육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 생활 인정 • 소요예산: 4,000천원
	경기 부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250,133천원
	강원 홍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증진 사업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 통역요원 각 1인씩 선정하여 주2회 보건소 근무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장애 및 불편사항 해소와 임신에서 분만, 육아까지의 과정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전남 해남	다문화가정 의료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 대상으로 예방접종, 검사, 치료진료 등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자조모임: 월1회, 협의체 계약체결 3개소
	충남 청양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만5세 ~초등학교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학습지비용 30,000원씩 지원

(8) 공공기관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대전 서구	공공기관 태교시간 마련	분청 및 시업소, 관내 기관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과 연계하여 휴식 포함한 태교시간 마련 • 음악감상과 육아를 위한 독서시간 활용
	경기 성남	다자녀(3자녀)이상 직원 우대	다자녀(3자녀이상) 직원	•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또는 공연 등 무료 및 할인 적용
	충북 청주	청사내 직원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공무원 자녀	•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서 방과후 직원자녀를 위하여 구청내 공부방 설치 및 운영
	경북 영주	당직 및 비상근무면제	본인 임신중/배우자가 임신중인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중 임신부와 배우자 임신중인 공무원은 당직과 비상근무 면제 • 영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개정
		임산부 희망부서 우선배치	출산전후 여성 공무원	• 임산부 대상 조사를 통해 희망부서 우선배치
		임산부 보호의자제공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	• 신체조건을 고려한 의자를 선택하여 희망하는 임산부 공무원에게 제공
		홈페이지 출산장려방 운영	전체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홍보 •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다양한 정보 제공
2008	서울 서대문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서대문구청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개정 출산전후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함 - 제24조(특별휴가) 제 10항 신설 공무원 본인자녀 입양 시 경조사 휴가 - 제24조(특별휴가)제 11항 신설 유산·사산휴가 30일~90일까지 가능
	서울 노원	직원양성평등교육	6급이상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의식향양,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차별없는 일터가꾸기 등 • 소요예산: 비예산
	인천 교육청	다자녀 교육에 대한 전보 가산점 부여	세자녀 이상 교원	• 내용: 관내 전보시 전보가산점 부여, 희망학교 우선전보, 교육청간 전보시 전보우대
	대구 달서	출산장려를 위한 탄력근무제 실시	초등학교이하 자녀를 둔 달서구청 산하직원	• 내용: 7급이하 직원대상 육아부담 시간에 맞춰 출퇴근 1-2시간 정도 조정
	광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다른 대체인력 지원	시 직원	• 내용: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광주 남구	직장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시범사업체지정 (남구청, 기동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기간간 협약체결 - 모유수유환경조성(유축기대여등) -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당직,비상근무 면제 - 임산부 배려 홍보관설치 - 임산부 주차장 확보 및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설치등
	경남 창원	일기정양립지원을 위한 수유시간제	군청 출산여성공무원	• 내용: 생후 1년이내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 1일 1시간 수유시간 사용(출근전 1시간 또는 퇴근 전 1시간 사용가능)
		수유실운영	군청내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 및 일반여성	• 내용: 청사내 수유실 운영,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군청 이용하는 일반여성

연 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9	대전 서구	다자녀(3자녀이상) 공직자인사우대방안	3자녀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승진(특별승진포함)인사우대 : 6급이하로의 승진시 계속적용, 자녀수가 다수인 자 우선적용, 5자녀이상 공직자가 자녀를 추가 출산 하고 특별승진요건에 부합한 경우 특별승진 -전보인사우대 : 다자녀 공무원 희망부서에 가급적 전보,셋째 아 이상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전보 -공무원포상우대 : 동일 공적인 경우 우선 포상 및 추천,공무원 표창 심의시 자녀 양육정도 출산장려시책 기여도 등을 반영 우대 -기타우대방안 : 다자녀 가구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다 자녀 공직자 직장 어린이집 우선 입소,직원휴양시설(콘도)이용 우선순위 배정
	서울	직원육아휴직 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내 인식변화 교육 및 홍보 -단력근무제 확대(활성화) 실시 -육아공무원 육아시간 의무명령제 실시 -대체인력뱅크 운영 내실화
	서울 성동	육아휴직 대체인력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개선하고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육성, 지원하여 안정적인 인력배치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내용: 경력을 고려한 부서배치,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수당 지급 및 고충상담 간담회실시, 전문분야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
	대구 동구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구청내 임신부 및 영아자녀를 둔 여직원, 임신부 및 영유아 동반한 구청방문민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임신부 여직원 당직근무 제외, 임신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주차편의 제공

(9)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연도	지자체	사업명	목적 및 대상	세부내용
2007	인천 남구	출생기념 예금통장발급	남구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우체국과 연계하여 출생기념 통장 발급 • 우체국 통장에 1천원이 입금된 출생아 명의의 통장 개설
	경북 경주	출산장려홍보관 운영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행사장에 출산장려 홍보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하나 더 낳기 서명운동 • 출산장려 표어 포스터 공모 수상작 전시 • 전국 각 시군의 출산장려 사책과 홍보물 전시 • 소요예산: 1,000천원
2008	서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대표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발굴 및 권고
	부산	출산친화기업 선발 시상	부산입주 3년이상인 기업으로서 근로자의 출산장려 및 시 출산장려정책에 협조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업체: 3개업체 • 출산친화기업패 수여
	대구	임산부배려 10계명 지하철 광고	대구지하철 전동차량내	• '임산부배려 10계명'광고
	충남 교육청	인구·가족 학교교육 강화	초,중,고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대비 학교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 양성평등 담당자 연찬회
	광주	출산양육친화 민간협의체 운영	저출산 대응 민간 공동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지역사회 공동협력 사업 추진
2009	경기 김포	3R(Recognition 인식), Response(공감), Realization(실현) 홍보플랜을 통한 주민인식개선		
	서울	저출산 극복 교육 및 홍보사업	저출산 현상의 지속을 방지하고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극복 대시민 인식개선운동전개(지하철광고, 전광판, 포털 등 광고매체를 통한 상시홍보 전개) • 저출산 극복 관련 표어, 포스터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 저출산 대응 홍보 및 사회문위기 조성(서울국제임신·출산 육아용품 전시회 참여 관람객 대상 홍보전개)
	대구 북구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직원, 민방위대원, 예비군, 임산부 및 지역주민 등	• 내용: 저출산의 심각성 재인식 계기 마련, 결혼 및 출산기 피에 따른 문제점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상자 및 출석 교육실시
	광주	임산부 first배려사업	30개소(관공서,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민원창구에 홍보판 설치, 임산부 우선접수 및 처리 안내 • 소요예산: 3,000천원
	경기 안성	가족수기 및 가족사진공모사업	모든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가족이야기 사진 공모 및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 소요예산: 83,000천원
	충남	대학생과 함께하는 결혼·출산 교육	충남도내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대학생의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조사 및 토론회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유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소요예산: 7,200천원
	충남 당진	임산부의날 태교음악회	임산부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소요예산: 2,000천원
	충남 서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서천만들기	서천군에 거주하는 출산기정 및 출산예비가정, 주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서천만들기'조례 제 개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복왕 선발 및 포상 -지역주민 인식개선교육실시 • 소요예산: 4,000천원
	경북 포항	지역사회연계로한자녀더 갖기운동	기관단체, 여성단체 및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여성단체 및 관련단체연계로 홍보교육, 출산장려 홍보거리 캠페인, 모유수유, 사전전시 • 소요예산: 비예산
	경남 창원	수유실운영(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군청내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 및 일반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청사내 수유실 운영,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군청이용하는 일반여성
제주	임양문화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비밀임양, 혈액형 송성별을 중시하는 국내임양 문화 개선을 위한 언론매체, 학교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소요예산: 3,000천원 	

(10)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정보망 구축

연도	지자체	세부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07	서울 중구	육아코디네이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대응기술제 공/육아불안감 최소화 • 대상: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육아상담실 운영, 내소 또는 방문상담 -정보제공: 우편, SMS, E-mail 등
	인천 서구	지역사회보육 상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영유아 영 양, 건강, 보육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내에 보육상담실 운영 • 영유아의 영양, 보건, 생활예절 등 • 육아정보 교환 •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경북 성주	Mom & Baby Homecare Service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특성을 고려 하여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 의료진과 실 시간 상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매주 금요일마다 출산후 15일 이후 임부 8명에게 전화 콜서비스 • 비예산사업
	경남 김해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정보구 축 및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 대상: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혼인, 임신, 출산관련 프로그램 전산화 -출산장려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 • 운영기간: 2005년부터 • 소요예산: 756,599천원
2008	부산 연제	구 홈페이지내 '출산·육아미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과 육아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
	인천	다자녀 우대제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다자녀 우대제 아이모아카드 홈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모아카드에 대한 이용 및 혜택에 대한 홈페 이지 운영
	경기 남양주	사이버출산준비 동호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들의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
2009	경북 성주	임신출산관련정보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임산부와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Mom&Baby Homecare Service • 소요예산: 비예산
	서울 강동	원스톱 출산보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임신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출산과 관련한 출산보육 상담 및 육아 용품 대여 등 • 소요예산: 2,000천원
	서울 성동	SBS(StepByStep)모자 보건사업연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전 구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모자보건사업서비스를 이메일 및 핸드폰 문 지메시지 전송 등으로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모자 보건관련 책자 및 CD 제작 -임신, 분만, 육아 주기별 홍보 -건강의 전화 운영 • 소요예산: 1,000천원
	인천 강화	Kids & Books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주소지의 영유아 및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자료 제 공, 도서 및 DVD, CD대여 • 소요예산: 3,150천원

2. 2008년도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사업내용 및 예산

정책분류	사업내역	사업량	예산
1)영유아양육비 지원정책	· 차등보육료 지원	34,571 명	691
	· 차등교육비 지원	5,110 명	71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7,903 명	158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4,230 명	83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206 명	50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670 명	6.4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794 명	35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64 명	2.64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180 명	42
	·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2,700 명	36
	소계	-	1,175.04
2)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9 개소	17
	· 직장보육시설 확충	4 개소	0.06
	·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11,770 명	213
	·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2,793 명	14
	·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1 개소	2
	· 보육정보센터 특별근무수당 지원	5 명	0.078
	·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168 명	20
	· 유치원 종일제 확대	206 원	7.78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 개소	4.14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613 명	67
	소계	-	345.058
3)방과후 활동 및 학습지원정책	·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14개 시군	148
	· 저소득층을 위한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14개 시군	68
	·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174 개교	35
	· 방과후 보육· 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 통합	1,655명	5
	·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70,000 명	10.824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72
소계	-	338.824	
4)일과과정의 양립지원정책			
5)임신과출산지원정책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16,200 개	0.32
	· 여성생식보건증진 프로그램 지원	3 명	0.03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22,896 명	4.8
	· 신생아 건강검진 강화	328 명	4
	·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5,931 명	1
	· 모성·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2,625 명	17.4
	· 모유수유 지원 확대	3 개소	0.46
	·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319 명	8.50
	·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1,680 명	9.52
	· 농가도우미 지원	560 명	8.40
	소계	-	54.43

정책분류	사업내역	사업량	예산
6)학교교육및빈곤아동지원정책	· 저출산·고령화 사회관련 학교 교육과정 강화	-	0.093
	· 아동발달 지원 계좌	1,742	6.27
	·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180	4.4
	·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30 개교	6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1 종	0.03
	소계		16.793
7)가족생활및가족친화적기업지원정책			
8)국내입양지원정책	·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36 명	0.72
	·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296 명	3
	·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5 명	0.456
	소계		4.176
9)아동및청소년의 안전 지원 정책	·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수준 제고	115 개교	3
	·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예방체계 구축	2 개소	6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	비예산
	·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	도교육청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도교육청
	·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도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	도교육청
	·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6 종	2.9
	·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	비예산
	소계		11.9
10)세계및주택마련지원정책			
11)전라북도자체사업	·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원사업	320 명	0.8
	· 출산장려 주민홍보	500 명	0.1
	· 다자녀가정 우대 아이조아 카드 발급	-	비예산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7 개소	7.70
	· 세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897 명	10.76
	·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 지원	31,659 명	47.49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지원	600 명	40
	·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32/13(원어민/체험시설)	56.65
	· 1군 1우수교 육성지원	3 개교	12
	·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101 명	1.21
	· 입양기관운영 및 홍보 활동	1 개소	0.41
	·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사업	600 개소	1.35
	·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파견	100 명	2.3
	·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1,463 명	1.463
	· 농어촌 민간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93 개소	1.674
	· 야간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	26 명	0.23
	· 출산대체인력 지원	42 명	0.42
	·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2,066 명	6.20
	·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효율성 강화	3 개소	8
	소계		198.757

3. 2009년도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사업내용 및 예산

정책분류	사업내역	사업량	예산
1)영유아양육비 지원정책	· 차등보육비 지원	38,328 명	1,406
	· 차등교육비 지원	5,454 명	74.3
	· 만5세아 무상보육비	9,732 명	208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4,091 명	78.8
	· 장애아 무상보육비	816 명	50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78 명	3.14
	· 두 자녀 이상 보육비	5,244 명	96
	· 두 자녀 이상 교육비	587 명	6.0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680 명	70.62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2,952 명	17
		소계	
2)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 개소	2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200 개소	1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100 명	20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8 개소	9
	· 유치원 종일제 확대	501 개원	60
	소계		92
3)방과후 활동 및 학습지원정책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72
	·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41
	·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130,000	12.46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80.0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5 개소	21.69
	·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15 개소	2.12
	·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	109
	· 방과후 학교 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 통합	-	6
	·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39,816 명	18.55
	·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3 개소	5.08
	소계		367.9
4)일과가정의 양립지원정책	· 육아휴직 활성화(출산대체인력 지원)	2	0.178
	·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소계		5.178
5)임신과출산지원정책	· 다자녀가정 우대 아이조아 카드 발급	-	비예산
	· 산점검사료 지원	5,000 건	2.0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20,920 개	3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신생아 건강검진)	477 명	6.84
	·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5,931 명	1
	· 보충 영양 관리(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2,514 명	23.4
	· 모유수유 지원 확대	3 개소	0.23
	· 불임시술 지원 확대	451 명	6.74
	· 산모도우미 서비스 강화	2,746 명	15.71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331,405 명	10.45
	소계		69.37

6)학교교육및빈곤 아동 지원 정책	·농산어촌 우수교 지원	4 개교	4
	·저출산 고령화 사회관련 학교 교육과정 강화	-	0.093
	·드림스타트 사업	3 개소	9
	·아동발달지원 계좌	1,672 명	6.0
	소계		19.093
7)가족생활및가족친화적기업 지원정책			
8)국내입양지원 정책	·입양가정 양육부감 경감(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60 명	1.20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286 명	3.4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집 지원	6 명	0.5
	소계		5.1
9)아동및청소년의 안전 지원 정책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예방체계 구축	3 개소	9
	·실종예방 및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실종아동의 조기발견)		비예산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도교육청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 개소	4.4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24 명	3.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1 개소	0.7
	·학교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80 개교	16
	·학생 대상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763 개교	0.89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763 개교	2.94
·학교-보건소 연계 통한 학생건강관리 강화	763 개교	0.93	
	소계		37.86
10)세제 및 주택 마련지원정책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	-	-
	소계		
11)전라북도자체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7 개소	7.70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지원	530 명	33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	9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6,610	79
	·세 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1,297	16
	·저소득층 보육 간식비 지원	30,667	46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파견	100 명	4.7
	·농어촌민간시설 차량운영비	111 개소	2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7 명	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200 개소	0.5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2,066 명	6.2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사업	200 명	0.5
	·농가도우미 지원	500 명	7.50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효율성 강화	3 개소	9.0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160 명	1.9
	·입양기관운영 및 홍보 활동	1 개소	0.5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수준 제고	-	-
·저출산 극복 도민 의식 교육	5,500명	0.1	
	소계		318.6

Jthink 2010-PR-09

전라북도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

발행인 | 원도연

발행일 | 2010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978-89-6612-014-7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